

법치 (法治)의



몰락

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간의 기록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발간 추진위원회

목 차

1. 김명수, 그는 누구인가	7
2. 법관탄핵 정치쇼에 거짓말까지	19
3. 코드 인사로 사법부 장악하다	39
4. 친위조직 전국법관대표회의	65
5. 판결, 공정과 균형이 사라지다	85
6. 인사청문회는 ‘위증 대잔치’	117
7. 국정감사로 본 사법부 수장	127
8. 사퇴 촉구와 고발 빗발치다	135
9. 언론에 비친 김명수 대법원장	161

· 김기현 원내대표 발간사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는 철저히 정치화됐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대법원 구성,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판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코드인사 등 사법부의 정치화 뒤에는 모두 김 대법원장이 있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신뢰를 후퇴시키고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며 온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해 도덕적 타락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이미 대법원장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법원장은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의 진상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역사와 국민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심판을 맡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상에 내놓은 이 백서가 무너진 사법부를 바로 세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사법 정통성을 회복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백서가 발간되기까지 특별한 사명감으로 정성과 노력을 다해주신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발간 추진위원회’ 위원과 보좌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춰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발간 추진위원회
유상범 전주혜 강훈 김태규 박수철 장동혁 위원

1. 김명수, 그는 누구인가

‘김명수’라는 이름은 더 이상 고유명사가 아니다. 대법원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기사에는 이런 댓글이 달린다. “김명수가 김명수했네.”

춘천지방법원장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했을 때 기대보다 우려가 많았다. 무엇보다 10기수 넘게 뛰어넘은 파격적인 인사에 관심이 모아졌다.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인가, 아니면 정권의 코드형 인사인가?

문재인 정권은 왜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했으며, 김명수는 어떻게 대법원장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제 일반명사가 된 ‘김명수’는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김명수는 역사에 어떤 대법원장으로 기억될 것인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1년 6개월 가량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다가 곧바로 대법원장이 되었다. 임명 당시부터 그의 경력이 문제였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각각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 의전서열 1, 2, 3위이며, 헌법재판소장과 국무총리가 각각 4, 5위이다. 초선이나 재선 국회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거나 차관을 국무총리로 임명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차관급인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이고, 대법원장은 전현직 대법관(장관급)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전현직 대법관 아닌 인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려는 파격을 검토만 해보고 너무 무리라고 판단하여 전현직 대법관 중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이용훈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이에 관여하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임명 과정에 관여하여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였다.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여당은 일본에서도 하급심 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둘러대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간신히 가결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는 그 사정이 많이 다르다. 2008년에 다케사키 히로노부(竹崎博允) 도쿄고등재판소 장관이 최고재판소 장관(우리나라의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는데, 당시의 법관 출신 현직 최고재판소 판사(우리나라의 대법관) 5명 중 3명은 최고재판소 장관이 되더라도 정년까지 1년 반 이하만 남아 있었고 2명은 폐암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도쿄고등재판소 장관(일본의 하급심법원 법관 중 최고위직)을 최고재판소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일본의 전직 최고재판소 판사들은 모두 70세에 정년퇴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고재판소 장관(정년이 역시 70세)이 될 수 없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때는 전직 대법관(정년퇴직자가 아니라 대법관의 임기만으로 퇴직자) 중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정년인 70세까지 대법원장 임기 6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고, 그 중에는 박시환, 전수안 전 대법관 등 진보적인 인물도 여럿 있었다.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여야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선명하게 희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마지막까지 인준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당론 반대를 추진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법부 코드화를 막지 못했이라며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았다. 여당의 손을 들어준 ‘캐스팅 보터’ 국민의당은 협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논평을 통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김 후보자는 5대 비리가 전혀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분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법 개혁을 이끌 책임자임이 틀림없는 분”이라고 평했다. 김 대변인은 “오는 24일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제도 개선, 고등법원 이원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의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김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함에도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김 대법원장의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인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사법부를 앞세운 ‘제2의 문화대혁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가결로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의 핵심적인 축으로,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며 “우리 당은 김 대법원장의 6년 임기 동안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 인준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국회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면서 “사법개혁을 이뤄내 국민 신뢰를 회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여당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국회 인준안이 통과된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난 '인사 참사'를 감안, 인사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면서 “향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보다는 실질적인 협치로 국정운영에 임해달라”라고 촉구했다.』 (2017. 9. 21.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함 이래 4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려만이 현실이 되었다. 그렇다면, 대법관 경험도 없고,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적도 전혀 없는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이유

김명수 대법원장 4년을 되짚어 보면, 문재인 정부가 굳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선택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오랜 관례를 깨고 춘천지방법원장이던 김명수를 파격적으로 대법원장에 임명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법부 장악이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2017. 9. 26.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중략) 지금 상황을 잘 보고 톱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들겠냐 말이야.”

2020. 5.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수리를 거부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말이다.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에는 ‘탄핵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며 거짓 해명까지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선배 대법원장들이 그토록 지켜내려 했던 ‘사법부 독립’을 단숨에 내던져버렸다.

문재인 정부가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법부를 좌편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냈고 회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실제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 내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전국법관회의를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제처장에 임명되거나 국회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이들이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사법부의 벽을 허물고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명수 춘천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되기까지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김명수의 사조직, 국제인권법연구회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되기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들의 치밀한 작전이 있었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법무비서관인 김형연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인물(간사)이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배석을 지낸 인물이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급하게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사표수리가 늦어지자 다급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서 “왜 사표수리가 늦어지냐, 이유가 뭐냐?”고 압력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합의부 부장과 배석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과 간사로 손발을 맞추었던 김형연의 청와대 입성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온 힘을 쏟고, 그 후에 김명수 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된 것을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려 연수원 13기를 뛰어넘어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김명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역할이 적지 않았을 것임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인물임을 감안하면, 김형연의 청와대 입성과 김명수의 대법원장 취임 과정에서 국제인권연구회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을 것임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임장혁 기자(변호사)가 쓴 다음 기사(2020. 1. 29.)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오랜 진지전의 시기가 있었다.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의 탄생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2017년 이전까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형해화된 우리법연구회(이하 우리법) 출신과 ‘강기갑 공중부양 사건’ 무죄 판결로 유명해진 이동연 등 소장그룹이 뭉친 인권법은 ‘호남 엘리트’ 색이 짙던 우리법과는 시작부터 달랐다. 무등록·비공개로 운영된 우리법이 언더서클이라면 인권법은 법원행정처에 등록해 예산을 받는 대중조직이었다. 수평적 분위기에 간사와 회장을 경쟁 선출하는 구조를 짜면서 회원수는 창립 5년만에 400명을 넘었다.

2015년은 연구와 친목이 법관 정치로 나아간 분기점이다. 상고법원에 올린 하는 ‘양승태 체제’에 도전하는 정치그룹(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이 구성됐고 재판을 통한 사실상의 집단행동도 본격화됐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양산이 대표 사례다. 2017년 김영식 판사(현 법무비서관)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2014년 학술대회 후 ‘유무죄 판단은 법원 고유 권한인데 굳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인권법 소속 판사(오현석)의 같은 해 발언도 이들의 내심을 엿보인 사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은 인권법이 진지전을 기동전으로 전환한 시기다. 언론은 법원행정처 기조심의관으로 발탁된 이탄희의 원대복귀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수진의 지방 전보 등을 기화로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집중했지만 ‘사법 혁명’의 도화선이 된 건 인권법 간사출신 김형연(헌법제처장)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직행이었다. 우리법을 대신할 새로운 사법 정치 파트너가 필요했던 문재인 정부의 합리적 선택인 셈이다. 인권법 초대 회장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에 발탁된 이후론 일사천리였다. 대법관에 노정희·김상환,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소장 외 이미선·김기영·문형배 등 우리법·인권법 출신들이 줄줄이 임명되면서 사법의 좌향좌는 끝났다. 김형연의 법제처장 기용으로 빈 법무비서관 자리는 다시 인권법(김영식) 직행으로 채워졌다.

민주당은 이미 입당한 이탄희·이수진에 이어 우리법 회장 출신 최기상까지 출마시킬 작정이다. 사법·행정을 접수한 일군의 판사집단에서 국회 직행을 노리는 사람이 나타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다만 이들이 양승태 체제를 몰아낼 때 앞세운 명분이 ‘법관의 독립’이었다는 게 새삼 우스울 뿐이다. 삼권

분립의 실질이 법관의 독립이고 법관 독립의 요체가 ‘정치와의 거리’라는 건 중학생 정도면 아는 일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한 마디로 법원 내 정치조직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에 있는 법관들은 그들을 법관이라고 부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치적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인 우리법연구회까지 합치면 이제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요직과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조직적으로 장악하더니 대법관 임명이나 법관 인사에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성친문을 위한 허수아비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위한 허수아비라고 보면 딱 맞을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에 세워두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완전히 정치화시켰다. 그들은 이제 서슴없이 정치적인 발언을 내뱉고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등 핵심인물들을 국회로 보내 법원과 국회를 하나로 연결하려 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얼마나 정치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앞서 중앙일보 임장혁 기자의 기사를 인용한 바 있다. 여기에서 임 기자의 다른 기사를 하나 더 인용해 보자.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법제처장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과거 판사 때 썼던 여러 글을 찾아봤다. 결기 있는 판사처럼 보였다. 글 곳곳에 '사법 독립' '법관 독립'이란 글자가 박혀 있었다.

특히 눈에 띈 건 2009년 3월 8일 글이었다. 당시 촛불 시위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던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었다. 그는 여기서 "사법부는 행정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고 했다. 법원 수뇌부가 행정부처럼 '승진' 등을 핑계로 일선 판사를 부리려는 행태는 법관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사법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였다. 신 대법관은 이런 법관 독립을 훼손했으니 사퇴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런 그가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변신을 시작했다. 2017년 5월 판사복을

벗은 뒤 이틀 만에 청와대에 법무비서관으로 들어갔다. 이어 최근 법무비서관에서 물러난 지 11일 만에 정부의 법령 해석을 총괄하는 법제처 수장으로 영전했다. 그의 행동은 '행정부든 사법부든 대통령 눈에 들면 승진한다는 것에서 똑같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처신은 사법부 판사 전체를 대통령의 '간택'을 받고 싶어 하는 무리로 비치게 했다. 한 평판사는 "지금 앞장서 사법 독립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김 법제처장이다. 이 정도면 위선(僞善)을 넘어 연기(演技) 수준"이라고 했다. 실제 그가 외친 사법 독립은 출세를 위한 도구였는지 모른다.

그가 남긴 법무비서관 자리는 김영식 전 부장판사가 차지했다. 둘 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김영식 비서관은 올 초 '법무비서관 내정' 보도가 나오자 인권법 게시판에 공지 글까지 올려 '오보'라고 펄펄 뛰었다. 동료 인권법 판사들도 "김영식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김 비서관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며 작년 법관대표회의에서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이다.

그런데 사표를 낸 지 석 달 만에 청와대로 직행했다. 청와대 보도 자료 사진 속에서 그는 활짝 웃고 있었다. 그의 표변(豹變)에 같은 인권법 판사들도 "너무 놀랍고 충격"이라고 했다. 그의 연기에 놀란 것이다. 한 인권법 판사는 익명 게시판에서 '인권법연구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고 했다. 제사(사법 독립)보다 제삿밥(자리)에 관심 있는 판사들이 이 연구회를 출세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비서관은 자신이 했던 '사법 독립' 주장의 진정성도 깎아내렸다.

그들이 앞으로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 정말 궁금하다. 구차한 변명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도 한때 판사였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2019. 5. 30.).』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국회로 진출한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전 판사는 어떤 관계일까?

김명수 대법원장과 국회의원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판사를 지낸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0호, 13호, 20호로 제21대 총선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들 세 명은 출마 당시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회원이었던 이탄희 의원은 이른바 ‘사법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첫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다. 2021년 1월, 퇴직을 앞둔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소추하기로 결정하자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하였다.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사찰의혹’으로 직무배제 당하자 적극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기도 하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던 이수진 의원은 출마 당시부터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논란이 있었다. ‘정의기억연대’의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과 관련하여 ‘친일세력의 공세’라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윤미향 의원을 두둔하기도 하였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 주장에 대해 김연학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능력 부족’을 지적하자 김연학 판사에 대해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1명’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지난 1월 31일에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면서, “판사들의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발언해 탄핵소추가 결국 법원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최기상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제2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그의 출마는 법관들에게 적지 않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의원은 모두 사법독립과 재판독립을 외치며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지만 정작 김경수, 정경심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사법독립과 재판독립은 무엇인가?

이탄희 의원은 지속적으로 법관 탄핵을 주도해 왔고, 결국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이끌어 냈다. 이수진, 최기상 의원의 발언을 보면, 그들도 탄핵소추를

적극 옹호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임성근 전 판사는 2020. 5. 22.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답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2020. 5. 22.이면 제21대 국회 원구성이 되기 한참 전이다. 21대 국회의 회기는 5월30일부터 시작되고, 개원식은 7월16일 열렸다.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하는 ‘탄핵하자고 설치’ 주체는 누구인가? 누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관을 탄핵하자고 설쳤는가? 그도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미리 국회의 의중을 파악하여 사직서를 반려한 것인가?

국민의힘에서는 2020. 5. 22.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의원 등을 만난 적이 있는지 질의했지만 법원행정처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내부의 평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훗날 역사가 다시 평가하게 될 것이다. 나중의 역사적 평가는 잠시 미뤄두고 지금 법원 내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법원 내부 인터넷망인 ‘코트넷’ 자유게시판과 판사들이 익명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이판사판’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 중 몇 가지만 인용한다.

[코트넷]

- 과거의 잘못에 반성적 고려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 내용의 발언이다. (중략) 정의를 상징해야 할 사법부 수장의 발언이라고 믿기 힘들다.
-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 부도덕하며 정의를 위반한 게 분명하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쟁이다! 진짜 거짓말 명수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김

명수가 아닌 ‘김명수’라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한다. 대법원장 코가 피노키오 코라면 대법원 천장을 뚫고 나올 것이라 한다.

-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법원의 신뢰성을 높에 빠뜨려 버렸다. 책임지지 않는 대법원장은 법원의 도덕성을 시궁창에 빠뜨려 버렸다. 이런 대법원장이 가야 할 길은 죽어야 사는 사퇴의 길이다.
 - 최악의 대법원장. 그리고 실종선고 된 양심과 썩은 정의! 역대 이런 대법원장은 본 적이 없다.
 - 헌정 사상 초유의 거짓말을 하여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법부를 정권의 제물로 바친 탄핵거래 발언의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자기편 심기 코드인사의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 (이상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사태와 관련된 글이다)

[이판사판 - 익명게시판]

- 간사가 연이어 청와대로 가버린 단체의 대다수 일반 판사들은 뭐가 되나요.
- 국제인권법학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거 같아 씁쓸한 마음이고 탈퇴하고 싶네요.
- (김형연 법제처장님) 기관이네요. 역사를 쓰시는군요. 지금은 그저 부끄럽기만 한데, 이 흑역사의 대미는 대법관으로 법원 복귀일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슬퍼지려 하네요.
- 청와대 회동..착답하네요.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민감한 재판을 앞두고 실질적 당사자인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현재소장을 불러 검찰 개혁에 동참하라는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네요.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법원장님이 완곡하게라도 한마디 하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만...
- 보통 못 믿을 사람과 이야기한다면 녹취를 하겠죠. 거짓말하거나 뒤통수치는 상대방과 이야기한 건 맞네요.
- 부끄러운 모습이네요 정말. 그렇지 않아도 떨어지는 권위를 땅바닥에 메다꽂는 상황이네요.
- 나중에 말 바꾸고 책임 떠넘길 거 대비해서 녹취하거나 엑셀에 일시 내용까지 정리하라고 하던데요. 아 저는 대법원장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릅니다, 모셔 보지를 못해서 말이죠!
- 30년 재판하신 분이어서 기대를 했는데, 위증죄 재판은 안 해보셨나 봐요, 저리 쉽게 거짓말하고 송구하다 죄송하다 하는 거 보면..

- 다른 거 다 떠나서 수술해서 30kg 이상 빠졌다는 후배에게 “죽지 말고”라니..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 죽지 말고..라는 말도 뒤틀린 제 마음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탄핵 소추될 수도 있으니 죽지 말라고... 사람이 할 말과 행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지금이 정년 양승태 대법원장님 시절보다 더 정치세력에서 독립되었고 인사는 더 공정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저는 매우 실질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강한 의혹이 듭니다. 특히 몇몇 사례는요. 명백한 해명 내지 사유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앙 형사합의부 일부 재판부 잔류와 전출 결과 등이요. 그럴 리가 없다는 믿음 내지 신뢰가 있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대법원장님께 그 정도의 신뢰가 없습니다.
- 대법원장님의 ‘거짓’보다, 혹은 ‘기억력’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대법원장님께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 법관탄핵 정치쇼에 거짓말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현직 법관에 대하여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국회 내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는 여당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에서 요직에 있었던 법관들에 대하여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정치적 성향이 분명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일부 법관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려 하였다. 사안의 심각성은 이러한 법관탄핵을 일부 여당 국회의원이거나 일부 법관들이 추구하는 데에서 나아가 대법원장도 그 탄핵을 위하여 암묵적으로 동조하였다는 점이다. 사법부의 수장이 비위가 확정되지도 않은 현직 법관을 탄핵하겠다는데, 이 탄핵 절차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려고 그 탄핵 대상 법관이 제출하는 사직서를 의도적으로 수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수리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그 법관이 사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가,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법원장의 거짓말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한 국가의 진실과 정의를 상징하는 대법원장이 법관의 탄핵이라는 사태가 초래되도록 방치하고, 또 그 탄핵이 가능하도록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나아가 거짓말까지 하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건국 이후 가장 부끄러운 법원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경험하고 있다.

(1) 들어가며

대한민국 국회는 2021. 2. 4. 법관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정확히 말하면 여권이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석 분포에서 자신들의 수적 다수를 활용한 여권에 의한 일방적인 법관탄핵이었고, 좀 더 들어가면 여당 내 일부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작품이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모른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많은 정치적 격변이 있었고 그 와중에 전 정권에 대한 단죄 등 참으로 비민주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법원은 대체로 그러한 정치적 부침에서 멀리 떨어져 초연한 기관으로 인식되어왔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저런 불만과 압력이 들어오자 대통령을 향해 “이의 있으면 항소하십시오!”라고 일갈하였던 호기와 전통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민주주의를 처음 도입하고 그에 대한 경험이 일천(日淺)하던 그 시절부터 사법부는 정권에 굴하지 않았고, 그 후 몇 차례의 사법파동이 있었지만, 법관들은 결연히 정권의 요구를 거절해 왔다. 이러한 법원과 법관들의 단호함이 사법부가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떨어져 독립을 지켜온 나침의 근거가 되었을 수 있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그나마 자유롭던 법원의 아름다운 전통은 건국 70여 년이 지난 후에 이른바 촛불 정부가 등장하면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러한 불행한 현상의 시금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법관에 대한 탄핵이다. 정권이 사법부를 길들이고, 사법부가 정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든 굴종의 채찍이 법관탄핵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법관탄핵 사건의 전개 및 검토

가. 과거 정권과 달리 법원에도 정치적 압박을 가한 촛불 정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 임기의 대부분은 이른바 국정농단 명분으로 전 정권을 단죄하고 반대세력을 부정하는 일로 보냈다. 국정농단이라는 생경하고 사람의 저열한 감정을 날로 드러낸 듯한 표현은 그러한 청산작업의 훌륭한 명분으로 작동하였다. 적폐청산이라는 함량 미달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 정권이거나 자신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적폐로 규정하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다. 이 땅 위에서는 함께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인 마냥 적개심을 드러내었다.

이전 정권이라고 해서 전 정권의 사람들을 단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바람직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적 현상은 제발 없어지는 것이 옳은 일이었지만 실재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정치적 후진성과 미성숙이었다. 정권을 가졌을 때는 법에 맞게 국정을 운영하여 후에 정권을 잃었을 때 사법처리의 명분을 제공하지 않고, 또 새로운 정권은 전 정권의 허물을 덮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왜곡해서 전 정권을 치는 명분으로 활용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정책의 차이와 국정 운영의 가치관은 다르더라도 위법을 저지르지 않고, 위법이 아닌 것을 과장해서 보복하는 일을 서로 삼가는 것이 성숙된 정치이다. 그리고 국민은 그러한 모습을 원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였으니 많은 국민은 실망하였을 것이고, 또 그래도 시간이 가면서 나아질 것도 기대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른바 촛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그러한 현상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하고 증폭되어 거의 전 정권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사법처리의 무서운 칼날에 예외 없이 떨어야 하는 처지로 만들었다. 대개 정권 초기에 명백한 위법에 대하여 단죄한 경우는 있어도 정권 거의 모든 기간을 통틀어 전 정권과 반대파를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공격한 것은 이 정권이 유일해 보인다. 도통 과거의 복수와 청산에만 매달렸지, 미래를 바라보고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개혁이라는 명분을 정권 내내 내세웠지만, 정작 그 개혁이라는 용어는 정권이 상대를 치고 국가기관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하면 과하다 할는지 모르겠다.

그런 와중에 특이하였던 점은 과거의 정권들은 그래도 법원을 장악하여 자신의 수하에 두려고 하지는 않았다. 어느 정권이든 그런 욕심이 없을 리 없지만, 그래도

삼권분립과 사법부독립이라는 큰 명분을 건드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70년이란 긴 시간을 흘러오면서 법원은 나름 독립된 기관으로 국민에게 인식이 되었고, 법관들도 자신들이 탄핵을 당할 것이라는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 현실사이다.

그것을 현 정권이 무너뜨렸다. 과거 어느 정권도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는 있었어도 길들여 수하에 두려는 짓은 하지 않았는데, 이 보이지 않던 금기를 현 정권은 아무런 거리낌 허물었다. 법관은 천상의 존재로 인정을 받아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다. 전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 글을 쓰는 필자 역시도 더는 법원의 구성원이 아니니, 그럴 만한 이해관계도 없다. 그런데도 법관의 공격에 대하여 지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법관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명분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법관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 풍향계만을 살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더는 국민의 근원적 결단인 헌법이나 국민의 대표가 만들어 놓은 법률을 존중하려 들 필요가 없어진다. 그런 현상이 국민의 현실적인 피해가 되고, 국가 근간을 허문다는 것은 의문이 있을 수 없다.

나. 촛불정권 탄생과 법관 탄핵을 말하는 자들의 등장

사법부에까지 정치적 바람을 주입하고 적폐 청산을 얘기한 정권은 역대로 촛불정권이 유일하다. 그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법관탄핵이다. 건국 이후 최초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전 대법원의 주요 간부들을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기소하였다.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치적 숙청을 사법부에까지 확장한 것이다. 매번 새로운 기록의 연속이다. 그 와중에 법원 내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같은 기구가 설치되고, 법관들의 정치적 활동무대가 될 수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법원 내부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정권의 기본적인 정책적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법관탄핵이 처음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였다. 당시 정권 친화적인 성향의 일단의 법관들이 이 회의체에 참여하여 법관의 탄핵을 거론하였다. 대의명분이야 부패한 법관들을 처단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으니 그들을 탄핵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탄핵이라는 것은 다분히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분인데, 그곳에 국민의 뜻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 위법이 있으면 위법이 있는 대로 처분하면

된다. 국민의 의사는 그 위법을 따지는 법률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 그 법률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곧 국민의 의중을 가장 잘 담아내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들은 국민의 의사를 담은 법을 말하기 이전에 다분히 선동적인 국민의 뜻을 먼저 앞에 내세웠다. 당연히 그 막연한 주체로서의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한정된 정권의 지지자들만이 그들에게는 국민으로 각인되고 있었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들다. 전체 국민의 의중이 반영된 법률보다는 정권 지지자들의 요구에 충실하게 행동하면서 전체 국민의 허명을 빌려 밀어붙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탄핵을 요구하였다. 대개 과거 법관회의는 정권이나 사법부 수뇌부의 압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반면 2018년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미 현직에서 물러났거나 법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더는 영향력이 없는 법관들에 대하여 단죄와 처단의 모양새였다. 이미 사법부 내에서 모든 힘과 영향력을 가진 법관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났던 일이고, 이러한 형태의 처단과 척결은 이미 행정부나 일부 언론기관 등에서 정권이 불편하게 느끼던 자들을 청산할 때 쓰던 태양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 대법원장과 과거 법원 수뇌부를 구성하던 고위 법관들에 대한 수사과 압박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나아가서 그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나타난 법관탄핵의 제안은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일부 법관대표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었다. 법원 내 주류를 장악한 이른바 정치 법관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일반 법관들의 대표회의체를 만들고, 이 대표회의체가 마치 전국 법관의 의중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듯한 형식을 만든 후에, 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동료들 탄핵하라는 의결을 한 것이다. 다분히 법원조직 내부에서 자신의 반대파를 청산하기 위하여 전국 법관의 허명을 빌려 명분을 조작한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해 최초로 법관탄핵이 언급되었다.

당시 국회에서 여당이 의회의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또 대외적인 명분도 충분하지 않아 다소 그러한 주장이 잠잠해지는 듯하더니,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자 다시 법관탄핵의 목소리가 여당 내 일부 과격한 국회의원에 의하여 언급되었다.

다. 임성근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허물에 관한 주장

법원 내의 주요 요직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한 법원 내의 주류세력은 정권의 적폐청산과 궤를 같이하여 사법부 내의 적폐청산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주도하에 많은 법관이 검찰의 수사에 내맡겨졌고, 그렇게 수사받은 법관들이 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아래는 그렇게 재판의 대상이 된 법관들 중에서 이번에 탄핵이 가결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검찰의 공소사실의 요지이다.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前 서울지국장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가) 중간 재판적인 판단에 관한 요청

2014. 4. 16.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2014. 8. 3.경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前 서울지국장이 일본 산케이신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여객선 침몰 당일에 옛 보좌관인 정윤희와 함께 있었다”는 허위의 기사를 일본 산케이신문에 게재하여 보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자유청년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014. 8. 6.경 카토 타쓰야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번호 2014고합1172호로 피고인 카토 타쓰야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하였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2015. 3. 하순경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종현으로부터 ‘카토 타쓰야 사건의 담당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진행하다가 카토 타쓰야가 게재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게 그러한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반영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재판장은 2015. 3. 30.경 카토 타쓰야 사건의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세월호 사건 당일 정윤희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대통령을 모처에서 만났다고 하는 소문의 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향후 ‘공공의 이익과 비방 목적 유무’에 변론을 집중하도록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임성근 부장판사는 임종현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카토 타쓰야

사건의 재판장에게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중간판결적 판단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판결 구술본 말미 부분 수정 요청 및 외교부 공문 내용 고지 요청

피고인은 2015. 11. 18.경 이 사건의 재판장에게 법원행정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판결의 구술본 말미 결론 부분을,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 이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부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먼저 상세히 실시하고, 마지막 부분에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실시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보도자료와 함께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재판장은 이러한 수정을 요구받게 되자 주심 판사와 협의를 거쳐 위 구술본 말미를 ‘이 사건 기사는 개인 박근혜의 수인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명예훼손이 된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의 최고 공적 존재인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개인 박근혜가 불가분적 관계에 있어 개인 박근혜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도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판결 이유를 수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인 2015. 12. 중순경 ‘외교부에서 카토 타쓰야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으니 판결 선고 시에 그러한 취지를 언급해 달라’는 임종현의 요구사항을 재판장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재판장은 2015. 12. 17. 위 카토 타쓰야 사건의 선고기일에 카토 타쓰야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먼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카토 타쓰야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취지를 언급하였다.

이로써 임성근 부장판사는 그 직권을 남용하여 재판장에게 판결 이유 및 선고 시 구술내용을 지시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8. 20. 사건번호 2014고합1256호 피고인 김유정 외 3인에 대한 체포치상 등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문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던 중,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집회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질서유지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비과장을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었다.

이 판결문은 구체적인 양형 이유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지키고자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속 피고인들의 행동과 표정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공격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② 피고인들의 체포행위를 적법한 현행범체포로 볼 수는 없지만, 분쟁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피고인들과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였던 피해자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선불리 단정한 채 체포행위에 나아간 피고인들의 범행에는 그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③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보다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적시되어 있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2015. 8. 20.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로부터 위 사건의 최종 판결문과 사건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공보판사로부터 위와 같이 판결문을 송부받게 되자, 이 사건의 담당 재판장에게 판결문 중 유죄의 양형 이유가 기재된 부분을 직접 지적하면서 '이 사건은 다양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만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다, 톤을 다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하였고,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여 위 ①, ③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② 부분은 '피해자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닌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분쟁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경찰관들과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임성근 부장판사는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 사건의 재판장에게 이미 선고한 최종 판결의 양형 이유를 자신이 요구한 대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재판장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관련 재판개입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 판사는 2016. 1. 14. 유명 야구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청구 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공판절차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식사건에 대해서 ‘담당 판사가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자, 담당 판사를 부른 다음, ‘이 사건에 관하여 주변 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본 이후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하면서 위 약식사건을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기로 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담당판사는 실무관에게 후속절차 진행의 보류를 지시하고, 위와 같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말에 따라서 결정을 번복하고 도박죄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이로써 임성근 부장판사는 그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판사로 하여금 약식사건에 대하여 이미 공판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을 재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도록 하고, 담당 실무관으로 하여금 후속 절차를 보류하고 재판사무시스템상 기 입력된 공판절차회부통지서를 삭제토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상 공소사실의 요지는 그대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불과하고, 또 피고인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사실이나 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관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용하는 이유는 검찰에서 부정적인 용어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대단한 위법을 저지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공소사실을 그대로 두고 공소사실 안에서 평가나 느낌에 대한 표현만 중성적인 용어로 바꾸어도, 공소사실을 위법으로 보기에겐 무리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표현만 완화하면 공소사실을 그대로 두고도 위법이 아니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물론 부적절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부적절하거나 때론 부당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적절하거나 부당해 보이는 행위는 도의적 비난으로 제재할 수 있을 뿐 그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간섭하였다고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관의 판결이라는 것이 법관이 세상과 단절된 채 하늘이 주신 대단한 혜안으로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유사한 판결을 찾아보고, 법리를 위해 교과서나 논문 등을 뒤지며, 필요하면 주변의 법관들에게 물어 같이 토론하고, 또 재판에 경험이 많은 선배 법관에게 조언을 구하고 충고를 들으면서 최종적인 판단에 이른

다. 시민들이 법관 혼자서 골방에 박혀서 한 판단을 더 신뢰할지, 법관이 리서치와 다른 동료 법관들의 의견을 구해 한 판단을 더 신뢰할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안다. 그래서 다른 법관과의 교감이 그리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교감의 수준을 넘어 그 어느 누군가가 해당 법관에게 어떤 결론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강요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공소사실 어디를 보아도 그러한 내용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라. 가토 타쓰야 사건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간섭 여부

중간 판결적 판단 요청행위라는 것, 판결 구술본 말미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선고기일에 외교부 공문의 내용을 고지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도 살펴보면 단지 협조를 구하거나 조언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해당 판결 문에도 나타나지만, 당시 재판부는 카토 타쓰야가 쓴 기사의 내용, 즉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정윤희와 같이 있었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확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판단에 이르는데 그 누구에 의한 영향력도 행사된 것이 없다. 오롯이 해당 재판부 판사들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더욱이 최초로 무죄의 심증을 재판부 내에서 드러낸 사람은 재판장이 아니라 주심 판사였다. 즉 재판 중에 이미 그러한 결론에는 이르고 있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그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범죄구성요건이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재판 무계의 중심을 오히려 그 부분으로 옮기고 있었다.

중간 판결적 판단을 요청하였다고 하니 마치 최종 판결을 하기 전에 중간판결을 한 것처럼 비추어지나, 그러한 것이 아니다. 재판 중간에 중요하지 않은 쟁점을 미리 알려주고 유무죄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주요 쟁점에 집중하여 달라는 말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재판 중간에 주심 판사가 기록검토를 통해 이미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재판장의 의견도 그와 같았다. 만약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카토 타쓰야는 유죄가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비방의 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니 그 이후의 재판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변호인들은 법원의 심증을 모르니 기사의 허위 여부에 대한 입증방법을 당연히 신청하였을 것이고,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이미 그 기사의 허위에 대하여 확실한 심증을 형성한 재판부로서는 불필요한 절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하하여야 한다. 그러니 그러한 사정을 미리 밝혀 변호인으로 하여금 비방의 목적

이 없고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것에 변론을 집중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처럼 변론의 방향을 미리 알려주면서 소송지휘를 한 것을 두고 중간 판결적 판단의 요청이라는 제목을 붙이니, 임성근 부장판사가 마치 법원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부적절하고 소모적인 재판이 되지 않도록 권고한 것이고, 해당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그러한 권고와 무관하게 변론의 편의를 위해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행사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일이니 그냥 두어도 당연히 재판부는 그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는 노파심에서 나서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고, 이것이 마치 재판에 간섭한 듯한 외관이 만들어 낸 것이다.

구술본 말미 부분 수정 요청과 선고기일에 외교부 공문 내용의 고지를 요청하였다는 것도 전혀 재판의 관여로 보기 어렵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보도자료를 내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의 내용이 긴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구술본으로 판결문의 요약본을 만들어 이것을 토대로 판결 선고시 낭독하기도 한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만들면서 그 표현에 부적절함이나 어색함에 대하여 수정을 권고하는 것을 두고 재판 관여라고 보기 어렵다. 이미 판결의 내용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하여 다 결정되어진 상태이다. 왜 보도자료를 내느냐고 말하면 그것은 법원의 업무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 중요한 판결,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판결은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는데, 그 과정에서 판결의 내용이 잘못 전달되면 안 된다. 그래서 법원마다 공보판사를 두어 공보판사가 보도자료를 인용하면서 판결의 내용에 오해가 없도록 노력한다. 그것은 지나치게 당연하고 법원의 일반적인 업무실태이다. 앞서 중간 판결적 판단도 중요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법원이 중간에 알려주는,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충족시키는 의미가 있다. 보도자료를 쓰다 보면 구술되는 판결과의 일치성과 부합성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좀 더 적절한 표현을 권고하는 것인데, 이것을 재판간섭이라고 하면 이것은 재판의 운용실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부러 유발하는 것이다.

판단은 오롯이 재판부의 몫이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간섭이 없었다. 담당 재판부 구성원 모두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고, 또 실제 담당 재판부는 그러한 권유가 있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정하였다는 내용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제1심 형사 판결문에 나타난다. 다만,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부분은 사법행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는 데는 좀 더 효율적

인 방법이 있으니 그러한 방법이 어떠냐고 권유한 정도에 그친다.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어서 이것을 고지한다고 하여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위법이 나오지 않는다.

만약에 이런 것을 막으려 든다면, 그것은 국민이 판결을 잘못 읽기를 원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가토 타쓰야는 분명히 허위보도를 했다. 그런데 단지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대중은 범죄 구성요건으로 비방의 목적을 요구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판결문을 읽을 개연성이 있다. 당연히 ‘가토 타쓰야가 진실을 얘기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즉 ‘대통령이 정윤희와 세월호 7시간 동안 함께 보낸 것이 사실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국민 일반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판결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하려고 사법행정적으로 애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를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대중이 판결을 잘못 읽어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한 오해를 만드는 데 실패하자 화를 내면서 권유했던 법관에 대하여 재판에 간섭했다는 오명을 씌우는 것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선배가 판결이 오독되지 않도록 조언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에 큰 위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법원의 판결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지거나, 법원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법관을 탄핵하는 것이 더 법관의 독립에 심대한 위해가 된다. 선배가 혹여 강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판사는 얼마든지 ‘내 사건에 간섭 말라!’며 반발할 수 있다. 또 때로는 (비록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피고인에게 청탁을 넣었다는 이유로 과실죄를 적용하여 더 엄하게 처벌할 수도 있다.

마. 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대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간섭 여부

민변 체포치상 사건에서도 재판간섭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우선 결론이 바뀌거나, 담당 판사가 결론을 형성하는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수석부장판사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전혀 없다.

다만, 이 역시도 피고인이 민변이라는 변호사단체 소속되어 있고,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므로 대외적으로 그 내용을 알릴 수밖에 없는데, 알리는 과정에서 대

중적인 오해가 없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조언을 한 것이고, 담당 재판장과 재판부의 주심 판사가 수용한 것이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담당 재판부의 부장판사에게 ‘이 사건은 다양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일부 논란이 있을 만한 표현이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제안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선배로서의 조언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법원의 판결로 인해 또 다른 시비나 논란이 초래될 것을 대비하는 수석부장판사로서의 책임감에서 발로한 행위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위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말하는 당사자도 알고, 그 말을 듣는 재판장도 알고 있었다. 또 재판장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재판장이 거절했다고 해서 이것을 문제 삼을 방법이 전혀 없다. 대의를 위해 조언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침소봉대해서 마치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듯이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양보해서 그러한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 그러한 지적은 일부 수용될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정도에서 나아가 그것이 위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법원의 업무실태를 알면 이것을 보고 강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수석부장의 말에 외압을 느껴 재판장이 굴복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면 오히려 그 재판장이 화를 낼 공산이 크다. 법원의 시스템을 지나치게 수직적인 구조로 잘못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오해라는 생각이다.

바. 약식사건의 공판절차 회부에 관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간섭 여부

앞서 두 사건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결국 수석부장판사의 위치에 있던 임성근 부장판사로서는 중요 사건에 대한 국민 일반의 오해를 가장 걱정하고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리를 도모하거나, 분명히 보이는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그의 행위로 담당 재판장이 위하(威嚇)되어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한 것은 전혀 없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장에 대하여 조언을 한 것에 지나지 않고, 재판장이 이것에 대하여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침해라고 여길 정도가 되면 판사들 특유의 자존심이 상처받을 것인데, 그러한 일을 아무리 수석부장이라든가 하기 어렵다. 판사도 그리 느꼈다면 바로 반발하였을 것이다. 통상적이지 않거나, 대중이 굳이 오해할 만한 업무처리를 하니 그러한 점에 대하여 주변 법관

들과 상의하여 보면 어떠냐고 의견을 준 것이다. 이 역시도 부적절하다고 말하면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역시 위법하여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무죄 사건에 대하여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무리

모든 것을 양보하더라도, 임성근 부장판사는 자신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처럼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무죄추정은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여기에 1심에서 무죄까지 선고되어 객관적인 비위가 없다고 확인된 사람을 대상으로 탄핵을 가결한 모양새이다.

탄핵을 추진한 세력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제1심 형사 판결문 이유 부분에 방론(傍論)으로 나와 있는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결문이라는 것은 주문에 모든 무게가 실리고, 이유라는 것은 주문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정으로 민사소액(民事少額) 사건에서는 아예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그런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서 방론으로 논의된 것을 근거로 법관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판결문 이유에서 방론은 사실 없어도 판결문 구성에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지만 대중적 관심도가 높거나, 비록 패소하지만 상대방에게도 나쁜 수급할 만한 논거가 있거나, 또 아니면 정권이나 권력의 힘이 너무 센데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태에서 일종의 달래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대개 표현은 이런 식이다. “비록 ~~ A의 주장을 수급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다른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의 주장은 일응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 “A의 주장은 ~ ~ 판단할 수 있다. 다만 ...” 등등. 그래서 방론을 판결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이해하고 논리를 편다면, 판사들은 방론을 함부로 쓰면 안된다. 방론은 그저 방론으로 읽기 때문에 다소 편하게 쓸 수 있다.

만약 방론에 법적 구속력이 있고, 그것에 따른 처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 판사들은 방론을 쓰면 안 된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은 당연한 항소할 수 없다. 그런데 판결문 이유 부분의 방론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 비록 무죄를 받더라도 ‘이유가 불만이다.’라는 사유로 항소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법리는 어렵다. 결국 무죄를 받고도, 탄핵과 같은 다른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즉 판결 이유에 비접하게 불이익을 줄 방론이라는 뒷문을 열어두면서, 정작

판결 이유에 대하여 다룰 기회는 박탈하는 이상한 결과가 된다. 그것을 안다면, 판결 이유의 표현 하나에 기대어 탄핵을 논할 수는 없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제1심 판결문은 마치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 행위인 것처럼 방론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론의 맹점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더라면 그러한 표현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였다. 그러한 것에 대한 경각심이 적다 보니 무죄이면서 탄핵이 소추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을 찾기 어렵다

양보해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제1심 형사 판결문과 같이 그의 행위가 위헌적 행위라고 하니 그렇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 가정해도 탄핵을 논하는 것은 여전히 과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서 노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위법하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을 기각한 것이다. 과연 판결문 이유 부분에서 방론으로 언급될 정도의 사유가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될 수 있나? 동의가 잘 안된다.

(3) 탄핵 논란 덮으려 거짓말

가. 사법부 신뢰도 무너뜨린 대법원장

사태의 심각성과 사법부의 오명은 법관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불거진 대법원장의 거짓말 의혹으로 그 폭과 깊이를 더한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법관탄핵을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고려하여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원을 반려했다. 이후 임성근 부장판사는 법관탄핵이 논의되자 자신이 대법원장에게 일찍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법관탄핵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실이 없다면 임성근 부장판사의 주장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란 점을 밝히기 위하여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위하여 대법원장을 면담할 당시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면서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대법원장은 당시 기억이 잘못되었다면서 사과를 하였지만, 그러한 변명이 새로운 거짓일 공산이 있다는 의심까지 받게 된 것이다.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하고 ...”

이 녹취내용은 대법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한 임성근 부장판사를 대법원장이 면담하면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한 말이다. 이 녹음파일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대법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되었고, 나아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그 자체로 수치스럽고 불명예가 된다. 법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일상을 거짓말에 노출된 상태에서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진실된 것인지를 가려내는 것을 그 본연의 과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사정으로 법관들은 거짓말이 많으면 당연히 그 업무에서 많은 피로도를 호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짓말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해도 된다. 그런 법관들 수장(首長)에 의해 거짓말 의혹이 유발되었으니 그 자체가 불명예인데, 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대법원장 나름의 이유가 궁색하여 오히려 부질없는 변명으로 국민 일반의 불신만 확산하였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명분으로 법관탄핵을 기획하였지만, 정작 대법원장의 거짓말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국민이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 대법원장의 거짓말 의혹을 확신하게 되는 근거

일단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녹음파일이 나오면서 진실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다. 그다음에 남은 것은 그것이 대법원장의 착오인지 거짓말인지 여부인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와 대화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변명한다. 이 변명이 나름 납득할 만하면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한 첫 번째 진술도 나름 착오라고 수궁할 수 있지만, 위 변명이 그리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면 첫 번째 진술에 더해 추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변명을 설득력을 가진다고 보기에선 첫 번째 진술의 강도가 너무 강했다. 기억이 불분명했다는 변명이 그나마 설득력을 얻으려면 애초부터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했어야 맞다. 처음에 혹여 감정이 앞서서, 아니면 정말 착각이라도 해서 말을 잘못했다 생각이 되면, 해당 법관이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면서 반박할 때라도 자신의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어야 했다. 그렇지만 임성근 부장의 주장을 부정하는 태도가 너무 완강했다.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는 날, 녹음파일이 공개될 때까지도 ‘사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지키다가 결국 해당 법관이 참지 못하고 녹음파일을 공개하자 그즈음 가서 기억이 잘못된 것 같다는 변명을 한다.

어차피 기억과 내심의 의사는 확인될 수 없고 객관적 정황을 통해 추론(推論)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단호하게 거부하다가 녹음파일 공개 후에 수궁하는 정황을 보고 있으면서 그 말에 신뢰도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9년이 아닌 불과 9개월 전의 일이고,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던 법관이며, 법원 내 요직을 거친 고위직 법관이었고, 정기인사 때가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연중에 사표를 제출하는 상황이었으며, 대법원까지 방문하여 대법원장과 독대하면서 대화를 나눈 것이다. 시간적 거리와 제시된 사실들에 비추어 과연 대법원장의 기억이 그렇게 흐릿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관이 몰래 대화를 녹취한 것이 상식 없는 짓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저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 사법농단 등을 이유로 공격을 당해 낡은 천 조각같은 지경에 처한 사람이다. 더욱이 상대는 자신을 그렇게 공격하는 무리의 정점에 자리 잡은 사람이다. 녹음 아니라 더한 일을 해서라도 자신을 지키고 싶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유도했다고 비난하지만, 뭘 한참 모르는 소리다.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앞에서 얼마나 현란한 화술을 부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된다. 공직 사회이고, 둘의 신분적 차이를 감안하면 일방적인 대화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상황에 내몰려 한 녹취이지만, 그래도 내놓지 않으려고 해당 법관은 무뎌 애를 썼다. 단지 자신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대로 상대를 협박할 요량이었으면 벌써 상대에게 제시하면서 겁박을 하든지 협상하려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공개하지 않으면서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을 향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선에서 그쳤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녹음파일의 존재를 몰랐는지, 아니면 상대가 그럴 만한 용기가 없다고 과신한 것인지 상대를 계속 압박하였고, 그런 압박 속에서 파일이 공개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알면 그 녹취가 채집된 것을 비난하기 어렵다.

다.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가지는 무게감

애초에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해당 법관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였으면 대법원장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는 이런 참혹한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을 피하려다가, 해당 법관은 건국 이후 최초의 법관탄핵 결의라는 오명(汚名)을 쓰고, 자신도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이라는 비난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 법원과 법관 모두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탄핵이 가결된 해당 법관의 잘못이 커 보이는지, 대법원장의 잘못이 커 보이는지 비교해 보면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은 너무 심대하고 직접적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잘못도 여기에 견주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많은 목소리를 두고 결코 무리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탄핵의 대상이 된 법관 개인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적 고려를 법적 고려 앞에 두었으며, 거짓말의 오명을 자신을 포함한 모든 법관에게 씌운 것이다.

(4) 법관탄핵의 빈약한 정당성과 무모함

법관탄핵의 정당성에 금이 가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사실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하여 탄핵을 가결할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다. 당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은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 윤석열 검찰총장의 두 차례에 걸친 집행정지신청의 인용,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판결문에 박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적시, 최강욱 열린민주당대표의 유죄 선고 등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마치 법원이 범여권에 대하여 불리한 판단을 하는 듯한 사회적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당시 만약에 그러한 사건들에서 범여권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이루어졌으면 과연 범여권은 법관탄핵을 가결하였을까 하는 의문을 대중은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와 맞물려 그 탄핵 가결의 정당성에 대하여서도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탄핵을 가결할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는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사퇴한 것도 아니고 법관 임기 10년을 다 채우고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직(職)에서 물러나야 하는 법관이였다. 굳이 탄핵할 현실적인 실익이 크지 않다. 탄핵이라는 것이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향후 5년간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실익이라는 것이 겨우 향후 5년간 공직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데 있는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 기간에 공직에 다시 취임하게 될지가 분명하지 않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니 탄핵이라는 칼이 아주 유용하고 잘 드는 칼이라 자주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인가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다. 예리한 칼일수록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정치의 영역에 있다. 관료로 임명되고 정치와 가장 먼 영역에 있는 법관에게 탄핵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이제 이것을 아주 편하게 쓰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도 탄핵했는데 그까짓 법관탄핵 정도야!”라는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탄핵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은 대통령은 언제든 탄핵의 칼날을 두려워하며 임기를 마쳐야 하고, 법관들도 탄핵의 공포를 품고 눈치를 보며 재판과 업무에 임해야 한다. 법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정치만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을 정말 원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3. 코드 인사로 사법부 장악하다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을 코드인사로 장악해 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시부터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와 사무분담에 이르기까지,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권의 행사로 대법원을 편향적으로 구성하고, 법관 인사권의 행사로 법원의 주요 요직을 독점했다. 한결같은 코드인사로 원하는 판결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코드인사를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김 대법원장 본인이다.

(1) 대법관 헌법재판관 편향적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권 지명권 행사를 통해 대법원과 다른 헌법기관을 편향적으로 구성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과반인 7명을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채웠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전교조 합법화, 이재명 지사, 백년전쟁 사건에서 동일하게 편중된 입장을 취했다.

20년 6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률상 근거 없이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백주연(36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선출하고, 백주연 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까지 만들었다. 김 대법원장의 의중에 발맞추어 편향성이 의심되는 구성원들로 채웠다.

현재 대법원 구성을 보면 대법관 총 14명 중, 문재인 정부에서만 12명이 임명됐다. 대법원 판결은 **특정 성향과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편중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은 **뚜렷한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다.

〈現 대법관 구성 현황〉

성명	임명일	비고	이재명 지사판결	전교조 합법화	백년 전쟁
김명수 (대법원장)	2017년 9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무죄	찬성	명예훼손X
이기택	2015년 9월		유죄	반대	명예훼손O
김재형	2016년 9월		무죄	찬성	명예훼손X
박정화	2017년 7월	우리법연구회	무죄	찬성	명예훼손X
조재연	2017년 7월	*법원행정처장 (19.1.11. ~ 21.5.7.)	-	-	-
안철상	2018년 1월		유죄	찬성	명예훼손O
민유숙	2018년 1월	진보 성향	무죄	찬성	명예훼손X
김선수	2018년 8월	민변	불참	불참	명예훼손X
이동원	2018년 8월		유죄	반대	명예훼손O
노정희	2018년 8월	우리법연구회	무죄	찬성	명예훼손X
김상환	2018년 12월	국제인권법연구회 *법원행정처장 (21.5.8. ~)	무죄	찬성	명예훼손X
노태악	2020년 3월		유죄	찬성	-
이흥구	2020년 9월	우리법연구회	-	-	-
천대엽	2021년 5월				
조희대					명예훼손O
권순일					명예훼손O
박상옥			유죄	찬성	명예훼손O

※ 2020. 3. 조희대 대법관 퇴임, 2020. 9. 권순일 대법관 퇴임 2021. 5. 박상옥 대법관 퇴임

대법관 구성을 보면, 우리법연구회 활동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박정화,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은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민변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대법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유숙 대법관까지 **7명이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채워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고, 전원 참석시 7명의 의견이 모이면 다수 의견으로 채택되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과반인 7명으로 채워져 균형 잡힌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심, 2심의 결과를 뒤집은 주요 판결들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는 찬성, 이재명 지사 판결에 대해서는 무죄, 백년전쟁 사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 대법원 판결 성향 지수 평균값 : 마이너스면 진보, 플러스면 보수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0.347	-0.147	0.104	0.175

(출처: 20. 9. 23. 동아일보)

대법원장의 편향적 임명제청권 행사

지금과 같은 기울어진 대법관 구성의 원인은 바로, **대법원장의 편향적 임명 제청권 행사**에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총 9명의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였고, 그 중 진보 성향 대법관이 5명(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대법관)이다.

※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 현황 :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 **노정희·김상환**·노태약·**이흥구·천대엽** 대법관(9명)

1) 의결정족수: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제청 대법관〉

연번	제청일	성명	성별	연수원 기수
1	2017.11.28.	안철상	남	15
2	2017.11.28.	민유숙	여	18
3	2018.07.02.	김선수	남	17
4	2018.07.02.	이동원	남	17
5	2018.07.02.	노정희	여	19
6	2018.10.02.	김상환	남	20
7	2020.01.20.	노태악	남	16
8	2020.08.10.	이흥구	남	22
9	2020.04.01.	천대엽	남	21

올해 9월에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이기택 대법관이 임기 만료되어,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대법관이 임명될 예정으로 또 한 번의 대법관 코드 인사가 우려된다.

대법원장의 편향적 지명권 행사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9명 중 총 8명의 재판관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 중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이석태 재판관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은애 재판관까지 위헌결정을 위해 필요한 6명이 진보 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졌다.

〈헌법재판관 구성 현황〉

성명	출신대학	연수원	임명,지명,추천	임명일	비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서울대 법대	13기	문재인 대통령	2017년 11월 (*2018년 8월 헌재소장 임명)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이선애	서울대 법대	21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7년 3월	

3. 코드 인사로 사법부 장악하다

이석태	서울대 법대	14기	김명수 대법원장	2018년 9월	민변 (민변 회장)
이은애	서울대 법대	19기	김명수 대법원장	2018년 9월	진보
이종석	서울대 법대	15기	자유한국당	2018년 10월	
이영진	성균관대 법대	22기	바른미래당	2018년 10월	
김기영	서울대 법대	22기	더불어민주당	2018년 10월	국제인권법 연구회
문형배	서울대 법대	18기	문재인 대통령	2019년 4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이미선	부산대 법대	26기	문재인 대통령	2019년 4월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은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석태 재판관은 특별한 인연이 없다. 오히려 같은 시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여 선출된 김기영 재판관이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내 김명수 대법원장과 인연이 깊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석태 재판관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기영 후보를 추천하는 것으로 후보자를 맞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여당의 집행부로 전락시킨 것과 같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명권 행사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코드 인사로 채웠다.

2020년 9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로 진보 성향의 노정희 대법관을 지명했고, 노 대법관은 작년 10월 인사청문회를 거쳐 11월 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었다. 노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로써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세 곳의 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되었다. 민주당 출신의 국무총리와 국회의장까지 포함하면 대통령과 5부 요인이 모두 한 편인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법원 역사상 유례 없는 편향적 인사를 쏟아내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²⁾ 코드 인사

대법원은 퇴임이 다가오는 대법관이 있을 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기구가 후보의 3~4배수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총 10명으로 구성되는 이 추천위에는 대법관 2명 외에 일반 판사 1명이 들어간다. 종래 일반판사 자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구성되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권을 행사했다.

한 일간지에 의하면³⁾,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올 3월까지 6번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한 일반판사 6명 중 4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1명이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였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 법관 위원 임명 현황〉

임명일	법관 위원(임명 당시 직책)	비고
2017.9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017.11.23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2018.5.23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연수원 29기 - 우리법연구회 회원 -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
2018.8.22	김영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연수원 30기 - 우리법연구회 회원 -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 前 청와대 법무비서관 (2019. 5 ~ 2021. 4)
2019.12.10	최창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연수원 28기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2020.6.18	백주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연수원 36기 -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법관(수원지방법원 판사, 당시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대표법관) -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지원단 구성
2021.2.9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연수원 37기 -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지원단 구성

2)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라 설치된 대법원 소속 위원회

3) 21. 4. 27. 조선일보 지면 (4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대의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부장판사)의 운영위원회는 **편향성이 의심되는 지원단**까지 구성했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을 위해 작년 6월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부장판사)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백주연(36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선출하고, 백주연 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까지 만들었다.

지원단은 송승용(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現서울동부지법), 김형률(32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現수원지법 안산지원), 김주미(37기) 서울회생법원 판사, 류영재(40기) 대구지법 판사 등 4명으로 구성됐다.

〈권순일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및 지원단 현황〉

성명		연수원 기수	직책(20년 6월 기준)	특이사항
추천위원 백주연 판사		36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지원단	송승용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김형률	32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부의장
	김주미	37기	서울회생법원 판사	
	류영재	40기	대구지법 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를 지냈던 송승용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류영재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약칭 ‘인사모’) 회원으로 추천위원인 백주연 판사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추천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를 지원단이 정보를 사전 공유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추천위원과 지원단을 함께 구성하면 정보 공유의 개연성이 있음은 당연하다. 이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규칙상 ‘비밀누설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9조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020년 7월 23일,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에 배기열, 천대엽, 이흥구 판사 등 3명이 선정됐고, 결국 최종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진보 성향의 이흥구 후보자로 결정되어 9월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되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고, 편향적 인사가 후보로 추천될 수 밖에 없다는 의심이 들도록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월 9일, 박상옥 대법관 후임자 인선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고, 3월 22일 동 위원회가 열려 봉옥 변호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후보로 선정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천대엽 부장판사를 최종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이번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률상 근거 없이 박기쁨 판사(37기)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했고, 박기쁨 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을 구성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및 지원단 현황>

성명		연수원 기수	직책(21년 4월 기준)
추천위원 박기쁨 판사		37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원단	김동현	30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희성	38기	수원고등법원 판사
	고소영	41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유상	43기	부산지방법원 판사

9월 대법관 후보 추천과정에도 대법원장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닐지 의심된다. 대법관후보 추천과정에서부터 대법원장의 일방적 입김이 개입되지 않도록, 또한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첫 정기인사 ‘우리법’ ‘인권법’ 요직 장악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첫 정기 인사’ 에서부터 드러내 놓고 코드 인사를 행사했다.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 제1,2심의관, 공보관,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기획심의관, 사법지원 심의관에 본인이 회장을 역임했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법원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대학 동기인 민중기 판사를 임명하고, 일반법관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과 편향성이 의심되는 판사들을 채웠다.

법원행정처 인사

2018년 2월 1일, 김 대법원장 인사(7일자)로 법원행정처에 들어간 판사 9명 중 5명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다. 행정처 내에서도 요직에 임명했다.

기획제1심의관(평판사)에 **김용희** 서울동부지법 판사, 기획제2심의관에는 **강지웅** 수원지법 판사를 임명됐다. 둘 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두 사람은 이 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약칭 '인사모')' 에서도 활동했다. 이 소모임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설치 반대 세미나를 여는 등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주도하는 모임이다.

〈2018년 2월 법원행정처 인사 주요 현황〉

법원행정처 전입 주요 현황						
	김용희 판사	강지웅 판사	박진웅 부장판사	김홍준 부장판사	김도균 부장판사	송오섭 판사
기 존	서울 동부지법	수원지법	부산지법 서부지원	서울 고법	수원지법	서울 중앙지법
보 직	기획 제1심의관	기획 제2심의관	공보관	윤리감사관	윤리감사 기획심의관	사법지원 심의관
특 이 사 항	국제인권법 (인사모)	국제인권법 (인사모)	국제인권법 (인사모)	우리법연구회 회장	국제인권법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인사모)

대법원장의 ‘입’ 역할을 할 법원행정처 공보관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박진웅**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법관 비위를 감시하는 행정처 윤리감사관에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의 **김홍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고, 윤리감사기획심의관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김도균**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사법지원 심의관에는 우리법,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송오섭** 판사를 임명했다. ‘인사모’이기도 한 송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인권법연구회 핵심 리더’로 지목됐었다.

최근 법원 요직에 임명된 판사 사례		
판사	특징	임명 보직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1일 취임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장	13일 취임
김홍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부임 완료
김도균 * 윤리감사기획심의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동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	
송오섭 서울중앙지법 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출처: 18. 2. 14. 동아일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사

가. 고위법관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이끌었던 민중기(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민 원장과 김 대법원장은 서울 대 법대 동기이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나. 일반법관 인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최한돈**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

법원으로 이동했다. 최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으로 2017년 7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거부에 반발하면서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주축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핵심 회원으로 알려진 **이동연** 부장판사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징계를 받은 **김동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전보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원 정기인사 주요 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최한돈 부장판사	이성복 부장판사	이동연 부장판사	김동진 부장판사
기존	인천지법	수원지법	서울동부 지법	인천지법
전입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특이사항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국제인권법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3차),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국제인권법 (인사모)	원세훈 항소심판결 공개비판으로 징계

(3) 2020년 인사에선 ‘원칙’도 사라져

2020년 2월 단행한 정기인사 역시 이례적이고 원칙 없는 인사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례 없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3년째 유임을 단행했다.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부장판사는 유임시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송인권** 부장판사는 교체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이례적으로 유임시키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장은 교체했다. 선별적이고 원칙 없는 인사였다.

〈2020년 2월 법원 정기인사 주요 재판부 변동 현황〉

	전보			잔류		
	송인권 부장판사	최항석 고법 판사	박성규 부장판사	김미리 부장판사	박남천 부장판사	윤종섭 부장판사
기존	서울중앙 지법	서울고법	서울행정 법원	서울중앙 지법	서울중앙 지법	서울중앙 지법
전입	서울남부 지법	광주고법	서울남부 지법	서울중앙 지법	서울중앙 지법	서울중앙 지법
주요 피고인	정경심 교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삼성바이오 로직스	조국 전 장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

또한, 전례 없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유임을 단행했다. 2020년 2월 12일,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유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017. 9. 25.) 이후 단행한 각급 법원장 인사 현황을 보면, 동일한 근무지에서 2년 이상(2018. 2.13.~현재까지) 재임한 법원장은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유일하다.

※ 참고로 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판사에게는 특정 보직에서의 정해진 ‘임기’라는 개념은 없으며, 효율적인 재판 인력 배분, 각급 법원과 재판부의 공석 사정 등에 따라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 제44조에 근거한 보직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법원행정처 답변 자료 中-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진보 성향인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될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유임’이며, ‘청와대의 울산 지방선거 개입사건’, ‘조국 사건’, ‘청와대 유재수 검찰무마 사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재판을 의식하여 믿을 만한 사람을 유임시켰다는 법조계의 비판이 있었다. 현 정권이 개입된 여러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고 있고, 편향적인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코드 유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잇따라 ‘코드인사’를 강행하여 인사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

(4) 반복되는 코드 인사

지난 1월 28일과 2월 3일, 법원장 및 법관 정기 인사가 있었다. 2021년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택적 인사, 코드 인사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코드인사의 심각성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상조사에 참여했거나, 검찰 수사를 주장한 법관들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수석부장 판사 등 주요 요직에 배치했다.

또한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경우, 특정 판결을 위한 재판부는 유임시키고, 코드 판결과 맞지 않는 재판부는 교체했다. 일관성 없이 동일한 기수에게 재판부에 따라 다른 인사원칙을 적용하기도 했다.

법관인사발령내역

1. 전 보 (913명, 2021. 2. 22.자, 2021. 3. 1.자)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398명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50명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2021. 3. 1.자)	1명
라. 사법연수원 교수	13명
마. 재판연구관	31명
바. 고등법원 판사	22명
사. 고등법원 판사(2021. 3. 1.자)	1명
아. 지방법원 판사	397명

- 2021년 법관 정기인사 中 (지법부장 이하) -

(5)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부 장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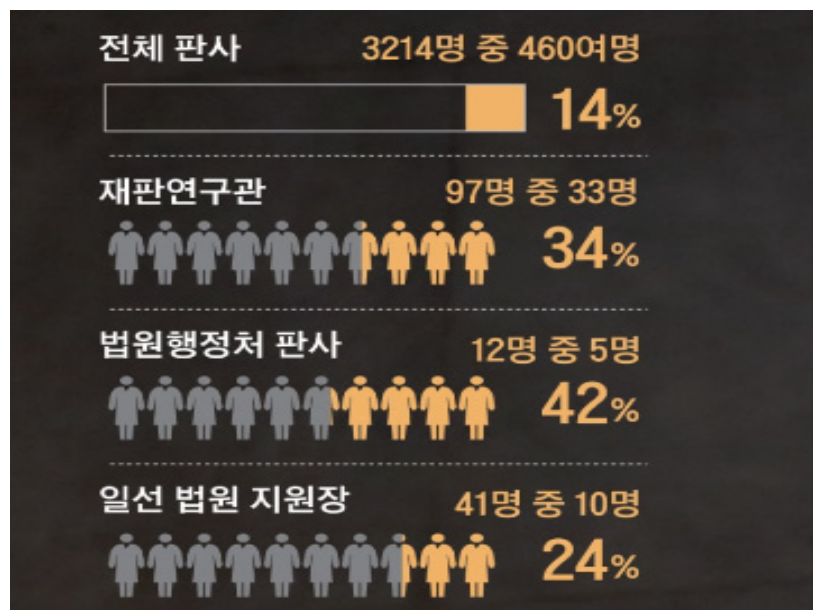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이 1·2대 회장을 맡았던 진보 성향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통해 법원 곳곳을 장악했다.

한 일간지에 의하면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은 460여명으로, 전체판사 3,214명 중 약 14%의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요직을 구성한 비율은 그보다 훨씬 컸다.

대법원 상고심(3심) 사건의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대법관에게 올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97명중 33명(34%), 법원의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 12명 중 5명(42%),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자문위의 위원 10명 중 4명(40%)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이었다.

또한 법원 ‘허리’에 해당하는 전국 법원의 지원장은 41명 중 10명(24%), 직급별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운영진은 매년 50~64%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판사로 채워졌다.

한 전직 대법관은 “특정 연구회의 득세는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엔 치명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21. 4. 27. 조선일보)

4) 21. 4. 27. 조선일보 지면 (1면)

(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드 인사의 전형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를 본인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했다. 김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요 요직에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했거나, ‘검찰 수사를 주장’한 판사들을 전면 배치했다. 법원 안팎에서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법원장과 수석부장은 사무분담 권한과 사건 배당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영장발부 등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배치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민사1·2수석부장판사, 형사 수석부장판사와 선출직 위원으로 각 내부 판사회에서 선출된 부장판사 3인, 단독판사 3인, 배석판사 3인으로 구성합니다.

- 법원행정처 답변 자료 中-

성지용(18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전임 민중기 법원장에 이어 김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시 대법원에 비판적인 성향의 판사 명단을 작성해 관리했다는 소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진상조사위원이었다. 대법원의 3차례 조사 중 1·2차 조사에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

신임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된 **고연금**(23기) 판사도 성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1차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우리법 연구회의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신임 민사1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된 **송경근**(22기) 판사는 2018년 6월 법원 내부 망인 코트넷에 “검찰이 (법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면 이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민사1수석부장판사 자리는 고법 부장판사 보직이었으나 올해 1월 인사 규칙을 개정, 지법 부장판사로 범위를 넓혔다. 송경근 부장을 위해 개정된 것은 아닌지 의심의 시선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의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 인사' 논란

<p>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1차 진상조사위원(2017년 3월 임명) ■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2차 진상조사위원(2017년 11월 임명) 	<p>고연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1차 진상조사위원(2017년 3월 임명)
<p>송경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6월 법원 내부망에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글 올려 	<p>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로 2018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 근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계속 맡을 것으로 보여

(출처: 21. 2. 5. 동아일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의 자격에 관한 인사규칙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개정되었는지? 개정되었다면 개정 시점?

- 2021년 2월 정기인사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을 보임하게 됨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제외하는 관련규칙(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개정이 있었습니다(2021. 1. 29. 개정).

- 법원행정처 답변 자료 中-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요 인사 전입 현황〉

	성지용 (법원장)	고연금 (형사수석부장판사)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
기존	춘천지법 법원장	인천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부장판사
전입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특이사항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1,2차)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 (1차) 국제인권법연구회	18년 6월, 법원 내부망에 “법원에 대한 검찰수사에 적극협조해야” 글 올려

코드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요 사건 재판부 유임

가. 형사합의 32부(32·36부, 윤종섭 재판부) vs 형사합의 35부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하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와 재판부는 전원 유임**되었으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을 맡은 **박남천 재판장과 재판부는 전원 교체**되었다. 2월 인사 당시, 유죄 심증을 비친 재판부는 잔류시키고, 무죄 심증을 내비친 재판부는 교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그리고 3월 23일, 윤종섭 재판부는 예상대로 이민걸, 이규진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이민걸 판사(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판사(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유죄 선고를 위해 전례 없는 인사를 단행하면서까지 재판부를 잔류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정기인사로 인해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가 **6년차**로 접어들었고, 윤종섭 부장판사가 속한 형사 합의 36부 배석판사 2명도 각각 4년째, 5년째 이례적으로 중앙지법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한 일간지에 따르면⁵⁾, 2017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에 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명분으로 윤종섭 부장판사를 포함

5) 21. 2. 11.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11

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 10명을 초청해 면담했다. 윤 부장판사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참석자인 한 판사는 “유죄 심증을 너무 강하게 밝혀 다들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후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를 거쳐 2018년 11월 법원으로 넘어올 때가 되자 민중기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전담 재판부 3곳(형사 34부, 35부, 36부)을 신설했다. 그리고 윤 부장판사를 그 중 한 곳인 형사 36부에 배치했다. 민 전 원장은 김 대법원장과 대학 동기로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같이해 친분이 두텁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사상 5년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근무한 판사의 수와 그 사례

- 2021. 2. 22. 기준, 근무시작일, 직위, 성명 순
-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서울지방법원으로 통합된 시점(1995.03.01.)부터의 명단임

연번	성명	직위	근무기간			비고	
1	우○○	지법부장	2013-02-05	~	현재	8년0개월	전담법관
2	김○○	지법부장	2015-01-26	~	현재	6년0개월	전담법관
3	유○○	지법부장	2015-01-26	~	현재	6년0개월	전담법관
4	윤○○	지법부장	2016-02-22	~	현재	5년0개월	

- 법원행정처 답변 자료 中-

※전담법관을 제외하면 서울중앙지법 5년이상(6년차) 연속근무는 윤종섭 판사가 유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통상 3년 근무가 원칙이다. 그런데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도 유임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생긴 1995년 3월 이후 최초(전담법관⁶⁾ 제외)로 6년 이상 근무하는 판사가 되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대법관 임기 6년에 빚대 ‘윤종섭 대법관’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전원이 유임된 형사합의 36부와 달리 형사합의 35부는 전원 교체되었다. 형사합의 35부(박남천 부장판사 재판부)가 지난해 유해용 전 판사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 형사합의 36부(윤종섭 부장판사 재판부)와 달리 전보 발령이 난 이유가 아닌지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6) 특정 사건 재판만 맡는 법관으로, 20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다. 2012년 하반기에 첫 임용절차를 진행해 2013년에 3명의 첫 전담법관이 임명된 바 있다.

한 일간지에 따르면⁷⁾, 피고인 측에선 “박 판사는 증거를 꼼꼼하게 따지는 스타일”이라며 “거의 90%는 무죄일 것으로 예견했는데 재판장이 교체됐다”고 반응했다. “윤 판사와 박 판사의 차이는 자기 재판을 한쪽 방향의 심증을 갖고 진행했느냐 아니냐 외에는 찾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명수 대법, 선택적 · 無원칙 인사 이동			
재판부	재판부 구성	현재판부 근무기간	서울중앙지법 근무기간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 (이민걸, 이규진 前 판사 사건) ☞ 전원 유임	◎ 윤종섭 (재판장, 26기)	3년 (유임)	6년차
	김○○ (36기)	2년 (유임)	4년차
	송○○ (43기)	3년 (유임)	5년차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前 대법관 사건) ☞ 전원 교체	◎ 박남천 (재판장, 26기)	2년	3년 (→ 서울동부지법 전보)
	심○○ (36기)	2년	3년 (→ 서울동부지법 전보)
	이○○ (43기)	2년	2년 (→ 전주지법남원지원 전보)

또한 김 대법원장은 일관성 없이 재판부에 따라 동일한 기수에게 다른 인사원칙을 적용했다.

형사 36부(윤종섭 부장)와 형사 35부(박남천 부장)의 좌배석 판사는 모두 같은 43기로 서울 근무 4년이 되어 원칙에 따라 이번에 지방 발령 대상이었으나, 윤종섭 재판부의 배석판사인 송 모 판사만 유임됐다. 배석 판사들은 2~3년간 근무 후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임됐다.

이러한 전례 없는 무리한 선택적 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결론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나. 형사합의 21부 (김미리 재판부) vs 형사합의 25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최강

7) 21. 3. 2.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02504>

육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요 사건을 다수 심리한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도 유임 됐다.

김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주범인 조 전 장관 동생을 공범들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란 비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과 자주 마찰을 빚어 편파 진행 논란도 일었다.

※ 형사합의 21부 인사현황

재판장	김미리(유임, 26기)	중앙지법 4년째 근무
	차○○(유임, 37기)	
	서○○(유임, 42기)	

형사부 근무 연장 설문 돌린 뒤 김미리 판사 유임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형사부에 근무하는 법관 94명에게 “형사부 근무 기간을 늘려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대안에 대해 형사부 판사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 답변을 달라고 했다.

메일을 받은 법관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의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26기)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남기려는 명분 쌓기 아니냐는 의심을 했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2월 3일 발표된 인사에서 김 부장판사는 3년동안 근무한 뒤 서울중앙지법을 떠나는 관례를 깨고 4년째 유임됐다.

반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대등재판부)는 대거 교체했다. 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인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 형사합의 25-2부 인사현황

부장	임정엽(後서울 서부지법, 28기)	2021. 2. 인사
부장	권성수(유임, 29기)	
부장	김선희(後서울 서부지법, 26기)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유죄판결, 좌천성 인사?

통상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은 2년이다. 그러나 댓글 조작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 고법 형사 2부에서 1년만 근무했는데도 재정전담 재판부로 옮겨졌다.

함 부장판사는 원심에서의 증인을 다시 부르고,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록을 너무 열심히 보고 판결을 내린 죄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의혹이 있다.

코드 인사를 위한 사퇴 종용 의혹

한 일간지에 의하면⁸⁾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월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고등법원 조 모 부장 판사에게 전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하시다. 승진은 기대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됐지만 징계나 기소를 받은 적은 없다.

법원장 승진 인사 ‘1순위’로 꼽혔던 조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들에게 “나의 30년 가까운 법관 생활이 부정당한 것 같았다”고 괴로운 심경을 털어 놓았다고 한다. 결국 조 부장판사는 인사 발표 하루 전 사직 의사를 밝혔다.

주변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너무 정치적이고 추종세력에 얽매어 있는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한 판사는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징계나 기소도 없는 판사를 나가라는 취지로 종용한 것은 김 대법원장이 인사에서 자기사람만 챙기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판사들의 전용 인터넷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도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글이 게시되었고, 현직 판사들은 댓글을 달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2000여 명의 법학교수, 강사가 소속된 한 교수회도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김 대법원장의 사퇴 종용은 조모 부장판사에게 의무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행위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자기 사람을 앉히기 위해 코드 인사를 종용한 것이다.

8) 21. 2. 10.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89578>

(7) 서울중앙지법의 코드 사무분담

2021년 법관 정기인사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2월 18일, 22일자로 시행되는 법관사무분담을 공개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인 윤종섭 재판부는 형사합의 32(32·36)부에 그대로 잔류했고, 형사합의 21부의 김미리 판사도 그대로 잔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위원장직을 겸하는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송경근 부장판사로 임명해 사무분담을 주도하게 했다. 예견된 사무분담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정한 사무분담을 통해 재판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의혹을 불식시킬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역시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는 결국 법원의 ‘코드 사무분담’으로 이어졌다.

○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2021. 1. 27.부터 2021. 2. 16.까지 7회에 걸쳐 열려 그 과정에서 법관사무분담이 확정되었고, 확정된 법관사무분담의 2021. 2. 18. 법관들에게 공개·고지되었으며, 위 법관사무분담은 2021. 2. 22. 시행되었습니다.

- 법원행정처 답변 자료 中-

특히 주요한 사건들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법관 사무분담은 예상대로 진행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와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담당해오던 윤종섭 부장판사가 해당 재판부에 그대로 남아 법관 정기인사에서 예고됐던 일이 재판부 사무분담에서 그대로 현실화 되었다.

형사합의 32(32·36)부 그대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인 윤종섭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은 모두 형사합의 32(32·36)부에 그대로 남았다. 법조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윤 부장판사 등에게 계속 맡기려는 메시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결국 현실화 된 셈이 되었다.

한 일간지에 의하면⁹⁾, 어느 한 고등법원 판사는 “판사 생활을 오래했지만 6년 유임은 처음 본다. 경희대 출신으로 학벌에서는 법원 내 소수자다. 그래서 그런건지 천성이 그런건지 속을 알 수 없는 판사다. 그런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기피 신청당한 걸 보면 유죄를 선고할 거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준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윤종섭 부장판사, 셀프 사무분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6년째 유임된 윤종섭 부장판사 재판부(형사합의 32·36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2월 18일에서 3월 11일, 이후 3월 23일로 두 차례 연기했다. 마치 재판부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듯이 사무분담 이후인 3월 11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일반적으로 선고를 미루더라도 재판부 배치(사무분담) 이전 날짜로 잡는데, 이후로 날짜를 잡았다면 기존 재판부에 남는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3월 23일(2월 18일→ 3월 11일 → 3월 23일 두 차례 연기), 윤종섭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예상대로 이민걸 판사, 이규진 전 판사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민걸 판사(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판사(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중 첫 유죄판결이었다.

9) 2021. 3. 2.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02504>

형사합의 21부 김미리 부장판사 잔류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핵심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 21부 김미리 부장판사도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아있으면서, 형사합의 21부에 그대로 잔류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하며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조국)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검찰에서도 이 점을 주의해 달라”는 등 정치적인 발언을 해 편향적인 판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코드 판결을 위한 가이드 라인

결국, 이러한 ‘코드 사무분담’은 ‘코드 판결’을 위한 김 대법원장의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뒤집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독단적이고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코드 판결을 위한 인사권 전횡, 정치적인 고려만 일삼는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것이 그저 한없이 부끄러울 뿐이다.

예견된 사무분담

이미 법관 정기인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코드인사로 채웠고,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위원장인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코드인사로 구성하여 사무분담을 주도하게 했다. 코드 사무분담은 예견된 것이었다.

2021년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는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열려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시켰다. 김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수석부장판사 인사로 위원장을 송경근 판사로 변경했다.

김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라 송 부장판사가 주도하여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놓은 결정이 형사합의 36부 윤종섭 부장판사와 형사합의 21부 김미리 부장판사의 유임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명단〉

활동기간	직급	명단
2020.3.24.~2021.2.8.	당연직	이○○(민사1수석부장판사, 위원장), 우○○(민사2수석부장판사), 김○○(형사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오○○, 김○○, 김○○
	단독판사	황○○, 김○○, 정○○
	배석판사	박○○, 박○○, 김○○
2021.2.9.~2021.2.21.	당연직	송경근(민사1수석부장판사, 위원장), 우○○(민사2수석부장판사), 김○○(형사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오○○, 김○○, 김○○
	단독판사	황○○, 김○○, 정○○
	배석판사	박○○, 박○○, 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인사의 공정성으로부터 출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원칙 없는 인사와 편향적인 사무분담으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점차 후퇴하고 있다.

인사 원칙을 깨는 것은 비단 법관 인사 자체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특정 세력에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된다. 즉, 코드인사는 코드 판결로 이어진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무리한 법관 인사와 사무분담을 단행했다. 김명수 체제 하의 사법부의 앞날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4. 친위조직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 내에서 사회적으로 주요 현안이 나올 때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동향에 대하여 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다. 일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모든 법관의 대표회의체라는 인식에서 그러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에 정국의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현저히 치우쳐가고, 이른바 촛불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파란이 사법부까지 번져나갈 즈음에, 다분히 그러한 정치적 영향을 충분히 담은 정치색 짙은 법관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조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당연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져 문제가 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주축을 이룬다. 이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 정권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법원 내 고위 법관들에 대하여는 매섭게 공격을 가하고,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보인다. 대법원장은 굳이 대법관회의 등 법원 내 다른 기관의 지원 없이도 자신과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법관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만 활용하면 명분이나 지지를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자신들과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정치 노조 이상의 과격한 태도를 보이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에 대하여서는 전위대의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그에 반대되는 세력을 공격한다. 법원 내에 완전한 정치조직이 하나 탄생한 것이다. 사법적 판단도 정치적 고려를 통해 이루어질 위험이 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이러한 행태를 제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한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1)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성립과정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대여섯 차례의 사법파동이라고 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정권이나 사법부 수뇌부의 압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법원 내부의 법관들도 대체로 동조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는 했어도 그 방향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크지 않았던 듯하다.

그런데 2017년에 시작된 사법파동은 이전의 사법파동과는 성격을 달리했다. 그 주도 세력이 오히려 법원 내에서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법원 수뇌부의 지지를 받거나 입장을 같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격의 대상은 이미 법원을 떠났거나 법원 내에 잔류하고 있더라도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비주류들이었다. 사법파동의 한가운데에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이들에 대하여 그들의 과거 행위를 문제 삼고, 그 책임을 물으며 척결하는 모양새를 취하였다.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치 과거의 복수라도 하려는 모습으로 비추어졌다. 그렇게 거칠게 몰아붙이는 일단의 법관들에 대하여 일부 청와대 인사나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도 지원하면서 화력을 더하였다.

종전 사법파동들과 다른 현상을 보이면서, 그 진도(震度)의 깊이나 폭은 훨씬 크게 나타났다. 법원은 두 토막이 났고, 법원 내 이념 분화의 양상이 대두되었으며, 일부 법관들은 동료 법관들에 대하여 ‘법관탄핵’까지 거론하였다. 이런 가운데 법원 수뇌부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보다는 주류를 옹호하거나 주류의 행위를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여 법원 스스로 자해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니 일부에서는 이러한 특이한 현상을 두고 ‘법원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혹독한 혼란으로, 법원 안에서 법관들 사이에 서로 말하지는 않으나 편 나눴음의 현상이 나타났고, 그런 편 나눴음이 소송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외양이 만들어지자, 소송당사자들은 법관의 성향까지 살펴야 하는 부작용이 보이는 것이다. 대법원의 대법정에 시위대가 난입하고, 법관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이 따르며,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하여 화염병을 던지는 물리력의 행사까지 나타난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사법파동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최악의 사법파동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잉태되었다.

첫 발단은 2017년 2월경에 시작한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관들이 전문분야연구회(법관들의 학회)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산상의

조치를 예고하는 공지를 하자, 이에 대하여 같은 달 15일 당시 김형연 부장판사(전 법제처장)가 내부통신망에 법원행정처의 이러한 조치는 국제인권법학회(이 학회는 부인하지만 언론 등에서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보고 있다)에 가입하는 등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일부 언론사가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이렇게 언론을 통하여 사태가 커지고, 이어 김형연 부장판사가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청원문을 게시하면서 일부 판사들에 의해 진상조사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이렇게 해서 2017년 3월 13일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제1차 위원회)가 꾸려지고, 같은 달 24.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던 2017년 4월 7일경에 다시 법원 내에 법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제1차 위원회는 2017년 4월 18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제인권법학회와 학회 내의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소위 인사모)’에 대한 부당견제나 압박은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었다. 그리고 새로이 제기된 법관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1차 위원회는 또 그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 법관들의 사무실 컴퓨터 등을 본인들의 동의가 없어 열어보지 못하였다고 했다. 당연히 법원 내 특정 성향의 판사들은 법관들의 컴퓨터도 열어보지 못해 조사가 충분하지 못하였고 제대로 된 진상의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렇게 재조사가 요구되는 가운데, 2017년 6월 19일 처음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되고, 여기에서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를 요구하면서, 더하여 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도 요구한다. 그 후 2017년 7월 24일 열린 두 번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다시 요구하였다.

그러는 중에 새로이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25일 대법원장으로서의 첫 출근과 함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2017년 11월 13일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한다는 이유로 추가조사위원회(제2차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중기 법원장을 위원장(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제2차 위원회는 법관들의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자들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그 파일을 열어 보기로 결정하였다. 제2차 위원회는 2018년 1월 22일 추가조사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법관

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표로써 사태는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되었다.

결국 2차에 걸친 조사에 이어 2018년 2월 12일 3차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편의상 제3차 위원회라 함)’이라는 것을 구성하였다. 제1차, 제2차 위원회도 공정성이 담보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법원 내 주도세력에게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었는데, 그러한 위원회들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수감하지 못하고 계속 횡수를 거듭하면서 추가조사를 요구한 것이었다. 어찌 보면 어떤 결과물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요구하는 모습이었다.

어찌 되었든 제3차 위원회는 2018년 5월 25일 조사를 정리하면서 “판사 사찰문건은 발견되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발표 내용 중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청와대가 교감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논란은 확대되어 갔다.

이처럼 사법파동이 이어져가는 가운데, 2017년 일단의 법관들이 요구하여 만든 것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이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18년 3월 7일 관련 대법원규칙을 만들면서 그 상설화가 이루어지고, 2018년에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1기가 출범하였다. 그리고 해마다 지역에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이다. 2021년까지 상설화된 4기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만들어져 왔다.

(2)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적 근거

가. 법원 내 최고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

2017년과 2018년 최악의 사법파동을 거치면서 국민의 인식 속에 많이 각인된 법원 내의 조직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이다. 그렇다 보니 아마도 많은 사람은 법원 내의 집행기구로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있고, 법원 내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 듯하다.

법원 내의 최고의 의결기구인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대법관회의이다(헌법 제104조 제3호). 반면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규칙에 근거를 두고 조직된 기구에 불과하여, 국회에서 입법된 법률의 근거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기관의 위상도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 제1항)”를 할 수 있는 ‘건의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법원규칙에 기초하여 조직된 기구이지만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자문(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2조)”을 할 수 있는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법원장 회의보다도 낮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법률의 근거도 없이 단지 대법원규칙에 의존하여 구성되었고, 기관의 위상도 단지 건의기구에 지나지 않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부분 관여하고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법관회의는 사실 형해(形骸)되었다는 의심이 들 정도이고, 대부분이 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해서 좌우되는 느낌이다. 최종적인 결정권은 여전히 대법원장에 있고, 대법관회의도 어쨌든 거칠 것이기 때문에 그리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기구는 그 기구가 만들어진 본래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더욱이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고, 법이 기관의 존립 근거인 법원에서 법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여 법을 운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가장 법의 본질을 쫓아야 할 법관들이 법을 겉치레로 생각하고, 편의대로 기관을 만들어 그 기관으로 하여금 예정치도 않았던 권한을 행사하게 한다면 이것은 법관들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나. 전국법관대표회의, 사실상 최고의결기구로 활동하는 듯한 상황

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맹신에 매몰된 사람이라면, 아마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보다도 3,000명의 법관을 대표하는 100여 명의 법관대표가 더 큰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물론 법원이라고 해서 국민으로부터 주어지는 민주적 정당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지만 민주적 정당성만으로 모든 국가기관의 구성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단지 숫자만 많다고 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구현되는 것이라 이해하는 것도 잘못이다.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치의 구현에 있다. 그것을 위해 사법권을 독립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다. 또 다수의 횡포를 법의 적용을 통해 제약함으로써 소수의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법원에까지 오로지 수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법치를 파괴하고 다수의 독재를 강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법원의 존재 이유가 법치에 있기에 그런 법원에 요구되는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주어지지 않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어져도 되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으로부터 주어지는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대법관회의가 전국법관대표회의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내부만을 고려하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 민주적 원리가 잘 작동하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 구성분자 사이에 그들만의 관심사를 결정하는데는 그들 사이의 토론과 다수결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그 안전이 법원 내부의 문제일 때에 한정되는 것이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주어지는 임무를 수행하는 영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법원을 구성하는 대법원장,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법관 중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헌법 제104조 제1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2항).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부터 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나 일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대법관회의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로 구성된 회의체 기관이다. 그리고 국민의 근원적 결단인 헌법이 그 기관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 법관들은 전문 관료로 임명된 사람들이지 국민이나 그 대의기구인 국회에 의하여 선출된 공무원들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 만들어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들의 대표기관이지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무게는 대법관회의의 무게에 비할 바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법관들의 집합체가 그들의 권능으로 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이 주는 민주적 정당성은 14명의 대법관이 가지는 무게가 나머지 3,000명에 가까운 법관들이 가지는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다.

숫자상으로 14명의 의미가 어떻게 3,000명의 의미를 초과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법원이란 조직은 수에 의하여 좌우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수의 정당성은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영되었다. 법원은 그 국회가 만든 법을 가지고 무엇이 법인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기관이다. 기관 작동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무언가 억울한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수가 많으면 무조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고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법원 안에서는 무조건 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 없다고 비약할 필요는 없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 안에서도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비록 국민 전체가 주는 민주적 정당성과는 무관하더라도 어떤 조직이나 단체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그들 간의 의사결정이 다양한 의사 교환과 토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대법관회의를 두는 것도, 대법관회의 내부 의사결정이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원리가 작동하는 뜻이다. 그래서 법관들이 자신들의 현안에 대하여 다수결의 원리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그러한 수준에서 용인될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법관들의 자신들의 내부적 이해관계를 회의체를 구성하여 다수결의 원리로 해결하는 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 그 회의체가 국민의 대표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법관회의를 대체하고 무력화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원리를 법관들이 오히려 무시하는 현상을 우려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독하게 정파성을 가지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법원 수뇌부에 대하여는 전위 세력으로 작동하는 것을 주된 기능을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3)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편향성

가. 운영 실태

앞서 언급하였듯이 과거에도 사법파동은 있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일단의 판사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세우며 자신들의 세를 모아 그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였다. 정상적인 법원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는 부당함을 저지할 방법이 없을 정도의 비상한 상황에서 법관들 역시도 예외적이고 특별한 형태로 다수를 모아 그들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목소리가 힘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대체로 정당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문제된 특정 사안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한다. 즉 저항기구에서 나아가 독자적인 사법행정기구의 하나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인데, 그러려면 그만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그만한 준비가 되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2018년 3월 7일 관련 대법원규칙을 만들어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였다. 2018년은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상태였고, 2017년 초에 학회를 탄압했다고 소리 높이던 사람들은 이제는 새로운 대법원장의 출현과 함께 법원 내에서 주도적인 세력이 되어 있었다. 前 대법원장 시절에는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처분이 불만이고 부당하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현 대법원장이 들어서자 오히려 현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처분에 적극적으로 편들기를 하고 나섰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올라오는 안건 대부분은 새로운 대법원장에 우호적인 법관들에 의하여 제안되었고, 그 안건들은 어떤 토의를 거치더라도 전체 대표의 3분의 2 정도의 찬성으로 거의 가결되었다. 다른 일반 법관대표들은 어렵게 의안상정 요건을 갖추어 안건을 내더라도, 표결 붙이는 것 자체에 제동이 걸리거나, 표결 붙여지더라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됨으로써 법원 내 정치조직이 하나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성향이나 이념과 같지 않은 대법원장이 들어서면 한없이 공격하고, 자신들과 이념을 같이하는 대법원장이 들어서면 지지하고 동조하며 회의체의 이름으로 명분을 주는 것이다.

회의장의 모습도 수준 낮은 정치판을 상상하게 하는 모습이다. ① 반대 발언 나오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언을 할 듯한 대표 여럿에게 연달아 발언권을 주어 반대 주장 덮기, ② 반대주장이 지나치게 강하면 아예 무시하고 그림자 취급하기, ③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행정처 심의관을 동원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④ 본인들은 당연히 부인하겠지만 회의에 앞서 사전에 표 단속을 하였다는 의혹까지 있었다.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편파적 대우를 받거나 무시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부당한 이런 의사진행도 외관상으로는 의장의 정상적인 의사진행권의 행사라고 하면 그만이라, 문제를 제기하기도 애매하였다. 당시 그 의장은 현재는 여당의 국회의원이 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떤 법관대표는 “자기들끼리 다 정해놓고 할 거면 회의는 뭐하러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린 적이 있다. 회의 일자도 자기들끼리 미리 정했는지 임시회의 개최 여부는 회의 제일 마지막에 결정하는데 회의 중간에 어느 주류 법관이 회의가 길어지자, “이 문제는 9월에 열릴 임시회로 미루시다.”라고 발언하였다가 말꼬리를 숨긴 적이 있다. 이미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들끼리 임시회의 날짜까지 정해 둔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어 “당신들끼리 회의 일자도 다 미리 정해두었나 보다.”라고 하자 별말이 없다. 회의록에는 그러한 내용을 제대로 적었나 모르겠다.

이러한 절차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실체에서도 회의가 정파적으로 움직인다. 이 재용 삼성 부회장 관련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청와대 청원이 20만을 넘기자 청와대가 법원에 이런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하여 대한변협까지 나서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법권의 독립을 외치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이 압도적인 표(거의 8:2 이상의 차이) 차이로 청와대를 비판하는 성명서의 채택을 부결시켰다.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법원 수뇌부의 호위에서 더 나아가 청와대 심기 보필까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이 사법부를 향해 촛불혁명 정신에 부합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취지를 쫓은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사법부의 공정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얼마나 심대한 침해인지에 대하여 아예 관심조차 없다.

올라오는 안건의 내용도, 사법행정권 남용, 그에 대한 검찰수사 허용 여부, 그 관련 파일 공개, 전관예우 근절방안, 지역법관제 재도입 등 현 대법원이 관심 있는 이슈를 대법원이 의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선언해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회를 포함한 다른 회의체에서는 이렇게 독단적으로 어떤 특정 세력이 완전 장

악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완전히 덮어버리지는 않는다. 초등학교 학급 회의를 하더라도 “우리 저 친구의 말도 들어줍시다”라는 말이 나올 법한데, 그 수준이 안된다.

회의에도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주어가 누구냐”, “‘즉시에’라는 단어를 넣어야 하느냐”, “‘충분히’라는 단어를 넣으면 여론이 가만있겠느냐” 같은 대화로 이루어져, 문장 뜯어고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한다. 자칫 표현으로 현 대법원장의 대법원이나 자신들에게 비난이 들어올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자못 진지해서 언성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면 저들이 대한민국의 법관들이라는 생각에 그냥 실소가 난다.

전국에서 100명 이상의 법관이 다급한 국민의 걱정거리를 해결하는 업무를 미루고,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그 많은 출장비 써가면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에 모여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하게 느껴질 뿐이다.

저들은 사법권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이야기하지만, 정파적 이해만을 대변할 뿐이다. 아무리 사법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더라도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와 일치하는 외부기관이나 세력의 말은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특별히 사법권의 침해가 문제 되지 않는 사안도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와 배치되면 득달같이 공격한다.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자신들과 코드를 같이하면 홍위병이나 전위대가 되고, 코드를 달리하면 정치적인 성향의 법관노조가 된다. 언론은 이미 법관노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정파적 이해가 없는 일반 법관들은 사석에서 농담으로 홍위병이라는 표현을 수시로 쓴다.

나. 법원의 존재 정당성은 수(數)의 다수가 아닌 법치주의

많은 판사가 존재의 약점으로 느끼는 부분은 자신들이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들의 정당성 근거를 잘못된 곳에서 찾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을 구성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등 많은 헌법 원리 중에서 국회나 정부는 민주주의가 최고의 법원리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그보다는 법치주의가 더 높은 가치로 구현되어야 하는 기관이다. 또 이처럼 법치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 ‘수’에 대하여 다른 기관들보다는 크게 구애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수자 보호에 유리한 기관일 수 있다. 이러한 법원이 너무 수의 논리에 매몰되어 움직이는 것은 위험하다. 이러한 논리에 지나치게 충실하다 보면

나중에 자칫 여론재판이나 인민재판으로 흐르는 것에 무기력하게 노출될 수 있다.

법관의 민주적 정당성은 법원의 구성이나 그 의사결정에서 다수를 추구하는 것에서 오지 않고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구성된 국회나 정부가 그 정당성에 따라 제정한 법률과 행정입법을 제대로 해석하여 그 가치를 구현하는 데서 온다. 그래서 비록 단 한 명의 법관만이 동의하더라도 그것이 국회나 정부가 담고자 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제대로 해석해 내는 것이면 그 사람은 민주적 정당성을 구현하는 법관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다수의 법관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법해석으로 국회와 정부를 통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 법관들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단지 다수 법관이 모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다른 헌법기관과 법원의 성격을 오해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국민의 결단인 헌법은 각 헌법기관이 자신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회는 수의 대결을 통해서, 정부는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서, 법원은 법의 해석을 통해서 하도록 정해 둔 것이다.

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제화는 대법관회의의 형해화를 초래

깊은 법원의 운영원리를 무시하고, ‘수의 우위’와 ‘상부구조보다는 하부 토대에 대한 환상’으로 법관대표회의가 훨씬 더 정당성을 갖는다고 대중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어 선동하려 든다. 그렇게 하여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나마 부여받은 대법관회의는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실상 법원의 주요 의사결정을 모두 담당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수혜를 그들이 지지하는 현 대법원장에게 돌아가게 만든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나 그밖에 다른 기구를 볼 필요가 없다 전국법관대표회의만 잘 조절하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라. 몇몇 주장이 강한 판사들에 의해 전체 법원 조직이 흔들릴 위험

회의체가 외관상으로는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회의체 내의 여론을 움직이는 몇몇 주도세력의 의사에 의하여 사실상 독점될 위험이 크다. 현재

운영되는 실태를 보아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배석판사들은 그저 별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현 대법원에 우호적인 몇몇 판사들의 의견에 대하여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 이 몇몇 주도권을 가진 판사들이 각 위원회를 장악하고 거기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안을 내고, 회의 중에는 이렇게 제출된 의안들이 별생각 없이 이들에게 표를 몰아주는 동조세력의 지지로 그대로 결정된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의 간섭이 싫다면 몇몇 법관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이름을 명분 삼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회의 운영을 통하여 자신들이 직접 법원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판을 만들고 있다. 대부분 법관은 이제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의 간섭에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주도 세력 눈치까지 봐야 할지도 모르는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다.

마. 사법행정의 편향성은 재판 결과 편향성으로 이어질 위험

몇몇 판사들이 법원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만드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에 따라 개별 법관의 업무 범위가 결정되게 되면 결국 개별 법관들은 이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

이미 SNS에서는 좌파무죄 우파유죄라는 표현이 나돌 정도로 일선 법원의 판결이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편향성을 보이는 일부 판사들이 법원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 편향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안된다.

최근 정치적 영향을 다소 더 받게 되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에까지 편향성이 반영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감지할 수 있다. 사유 재산권이 쉽게 부정되는 판결, 국가의 과도한 제재를 수용하는 판결, 강한 시위나 언론의 보도에 굴복하는 판결 등이 그리 어렵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제화되어 그 힘이 더 강해지고 활동의 범위가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는, 정권이나 사법부 수장의 변화가 있더라도 이들 몇몇 판사들의 영향력은 법원 내부와 판사들의 판결에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좋은 재판, 좋은 판결이라고 평하고 있다.

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실상 정치단체 내지 법관노조의 다른 이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잘못된 일은 정작 블랙리스트나 재판거래 등(대부분 실체 조차 확인되지 아니함)이 아니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일부 과격한 판사들의 폭거와 일부 언론의 압력에 못 이겨 상설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설화됨으로써 법원 내 정치조직의 탄생은 시작되었다 볼 수 있다. 저들은 사법권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이야기하지만, 정파적 이해만을 대변할 뿐이다. 아무리 사법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더라도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와 일치하는 외부기관이나 세력의 말은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특별히 사법권의 침해가 문제 되지 않는 사안도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와 배치되면 득달같이 공격한다. 언론은 이미 법관노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정파적 이해가 없는 일반 법관들은 사석에서 농담으로 홍위병이라는 표현을 수시로 쓴다.

법원 내에 간단한 회의체 기구 하나 생기는 정도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들은 현 대법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법부 수장을 옹호하는 홍위병 노릇을 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바뀌어 자신들과 코드가 다르면 그 취임 첫날부터 대법원장 퇴진운동을 할지도 모른다. 임시기구일 때는 명분을 쌓아서 모였는데, 상설화되면서 명분 없이도 모일 수 있다. 회의 장소에서 얼마든지 자신들과 코드를 같이 하지 않는 대법원장을 공격할 것이다.

(4)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가. 법관들의 진정한 대표기구가 되려면 정파성을 벗어나야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탄압을 주장하던 판사들이 주도하여 상설화를 요구하고, 그래서 조직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성격에 대하여 처음부터 의심하였다. 비록 외관은 일반 법관들이 참석하는 전국적 단위의 회의체라는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 회의를 주도할 사람이 누구일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2018년 1년간 그 회의에 울산법원의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모양새를 취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회의를 이끌어 가면서 언론이나 일반에는 마치 대한민국 전체 법관의 의중이 그러한 것처럼 포장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관들의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런 저항이 없을 정도로 주류들의 주장이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었다. 하나의 목소리만이 있고 그것만이 절대 정당하다고 인식되는 사회나 조직은 이미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울산법원 대표로 1년간 여러 차례의 이 회의에 참석하였지만, 남는 인상은 주류 판사들의 정치적 놀이터 외에는 다른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다. 다만 그런 와중에도 균형감을 가진 판사들이 소수 있어 법원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기보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큰 위안이었다.

이미 만들어진 기구라서 없애지 않을 것이면 이제라도 잘 활용하여야 한다. 그저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정치노조라든가 흥위병이라는 평판은 듣지 말아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의에 다양한 목소리가 울릴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공정하게 회의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전체 법관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이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우려하는 것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치화·집단화·세력화되어 운영되는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들이 어떤 학회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모든 법관에게 공개하고,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그 대표자들의 학회 가입현황 등을 요구할 경우 그 명단 등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참 어려운 말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평가된 조직의 자발적 해체도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

들인 6.29.선언 이후에 만들어졌다. 당시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자 그에 반대한 서울지방법원 소장 판사들이 모여 만들었다. 이후 2010년 ‘법원 내 하나회’라는 논란 끝에 해체되었다. 선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그러한 의심에 놓인 국제인권법학회는 해체될 필요가 있다.

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제화는 법원장회의의 법제화와 함께 되어야

대법관회의가 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실상 대법관회의에 필적하는 위상을 가지게 되면 정작 일선에서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원장들은 그 정당성을 찾기 어렵게 된다. 위상이 떨어지는 법원장회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 내용에 배치되는 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파급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 사법행정의 객체인 일반 법관이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일선 사법행정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법원장은 정작 사법행정에서 배제된다. 이를 피하려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제화가 이루어질 때 법원장회의의 법제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의 주체라는 사정을 감안하여 당연히 전국법관대표회의보다 높은 위상의 회의체로 규정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법원장회의는 자문기구이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보다 낮은 건의기구로 되어 있다.

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의 직선제 고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정치화되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 의장·부의장을 법관대표들의 간선으로 선출하면 의장·부의장은 이제 항구적으로 현 주류세력이 이어갈 공산이 있다. 그래서 정치화가 심화(深化)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이미 정치화된 판이라는 적어도 그 중립성이라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하는 것이다

저들이 법원장을 자신들 구미에 맞게 선출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법원장 직선제를 제안할 때, 이미 정치화의 부작용은 지적되었다. 당시 그들은 선거운동 금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 조건을 감안하여 제도를 만들면 된다. 출마자는 출마의 변을 1회 내부 전산망에 공지하고 CourTV로 자신의 정견을 한 5분 정도 발표하는 것으로 선거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라. 대표자 선출에 있어서 개리맨더링 문제 해소의 필요

대표자의 구성이 표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기본적인 선출구조는 지방 법원의 경우 직급별로 부장 1명, 단독 1명, 배석 1명으로 선출하고 있는데, 요즘은 법관의 고령화로 부장자원은 법원에 따라서는 거의 전체 법관의 절반을 점하고 있고, 단독자원은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당연히 단독이나 배석 판사들이 더 많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물론 대법원과 고등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어 꼭 부장판사 자원이 전체 법관대표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소장 판사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직급은 법원 내 편의에 의한 구분이지, 법률에서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므로, 직급별로 선출하는 것은 이러한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법원별 법관의 숫자도 너무 많은 차이를 보여 큰 법원은 작은 법원의 수배에 이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법원 간의 법관 숫자까지 고려하여 대표자의 인원을 결정한다면 별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라도 만들어야 할지 모른다. 다만 법원장회의도 법원 규모와 상관없이 1명의 법원장이 참석하고 있고, 전국법관제를 취하고 있어 모든 법관은 언제든지 거의 2년 주기로 큰 법원과 작은 법원을 오갈 수 있으므로,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각 법원의 대표로 보아 법원별로 법관의 숫자와 상관없이 2명 정도가 선발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 구성원의 수를 최소화해 경비 및 근무인력의 낭비를 최소화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면서 약 3000만 원의 경비가 지출되었다는데 이것은 오찬, 만찬, 다과, 현수막 비용 등에 지나지 않는다. 출장경비는 제외된 것이다. 출장비는 아마 각급 법원에서 지급되었던 모양인데, 울산 정도의 거리에서는 4번의 출장으로 약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급되었다. 전국 모든 법관의 경비를 합하면 그 금액은 상당하다.

근무 인력의 손실도 상당하다. 대부분 법관이 야근하면서 일에 시달려도 국민은 여전히 신속하고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다. 그만큼 법관 개개인이 받는 업무의 강도는 상당하다. 그런데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전국 120명에 가까운 판사들이 하루 이상 일손을 놓고 서울로 회의를 하

러 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처리하지 못한 일은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이 된다. 자주 많은 수의 법관이 일손을 놓으면서 인력의 손실이 상당하다.

중요한 현안만 논하려면 1년에 한두 번만 개최하면 된다. 이번 사법파동과 같이 중요한 사안뿐만 아니라 인사, 사무분담, 법원 내 규칙제정,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선출 등 모든 영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 안건이 많아지고 회의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과도하게 정치화되고, 법원의 모든 영역에 가세한 부분에게까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대표자의 숫자를 줄이고[각 법원 별로 2명 정도면(가정법원은 1인) 전국에서 약 60 ~ 70명 정도의 대표자가 모여질 것으로 예상됨], 회의를 1년에 1~2회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공정한 회의 운영과 외부로부터의 견제를 위한 회의 공개

회의 진행 전 과정을 CourTV를 공개하고, 회의속기록도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국회 및 언론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안에 특정세력이 회의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감시함으로써 이들의 세력화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는 명분도 충분하다.

사. 내부 주도권 장악을 위한 단체설립이나 학회의 운영 금지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과정에서의 법관들의 정치화·집단화·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선출되거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장·부의장·운영위원 등 집행부에 선출되는 것을 지원하거나 그 후보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법원 내에 단체를 조직할 수 없고, 학회 등을 이러한 조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선출된 자는 자신이 소속한 학회를 공개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국회, 언론, 시민단체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여하는 대표자들의 학회 가입현황 등을 요구할 경우 그 명단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아.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자로 선출된 자의 인적사항 신고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자 구성의 공정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자로 선출된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특히 자신의 학회 소속 현황을 포함) 기재한 신상명세서를 작성하여 행정처장에게 신고하고, 행정처장은 국회, 언론, 시민단체가 요구할 경우 그 명단을 공개(인적사항으로 주민번호, 주소 등은 당연히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

(5)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원장은 당연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분자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고 대법원장의 의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현 대법원장의 친위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추론이 틀린 것이라면 그를 반증할 수 있도록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법관대표들의 학회 소속현황이라도 밝혀야 한다. 과거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현재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의 주류세력이라는 것은 굳이 구체적인 근거를 들지 않더라도 국민 일반에게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주류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암묵적인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분자의 분석이 필요한데, 그에 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니 그러한 사실인식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 구성분자들의 명단과 그들이 소속된 학회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언론을 통하여 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다.

그들 주류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구성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하면서 현 대법원장을 옹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법관들 사이에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는 평가이다. 적어도 그들이 적극적으로 현 대법원장의 옹립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임명에 심정적으로 그리고 법원 내부의 여론을 통해 지지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주류법관들은 현 대법원장이 시행하는 모든 정책이나 결정에 충분한 여론을 모아주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러한 것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올라오는 의안이 대법원의 정책과 일치하고 있다는 데서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그 회의체의 대표는 대법원장이 몸담거나 그 후신으로 탄생한 학회 출신들로 채워졌고, 그들은 후에 여당 정치인이 되었다.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릴 때 현장을 찾아 모든 법관대표를 치하한다. 이런 사실들을 모아보면 결국 대법원은 이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한 주류법관들을 자신의 지원세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주류법관들은 이 회의체를 통해 현 대법원장의 정책과 운영에 지원과 지지를 보낸다고 볼 수 있다. 전체 법관들의 대표기구라는 인상보다는 대법원장의 지지대 내지는 전위대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5. 판결, 공정과 균형이 사라지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한 이후 법원 판결이 공정과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선 어김없이 친(親)정권 성향의 판결과 결정이 뒤따랐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실세가 연루된 사건에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일이 잦아졌다. 그런 배경엔 법원 조직의 정점에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가 구축해놓은 친정부 성향의 법관들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1)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사건

2017년 1월1일 저녁, 한 종편 채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의혹을 심층 보도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유력 후보들에 대한 검증 차원의 기사였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때인 2012년도에 친형 이재선씨를 관할 기관인 분당보건소 등을 통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 지사는 격앙된 반응은 보였다. “민주공화국을 마비시키는 독극물” “폐간 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저의 셋째 형님(이재선씨)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은 어머니가 보건소에 정신질환 여부 확인을 위해 진단을 의뢰했고, 성남보건소는 행정 절차로 형님의 정신질환여부 확인 절차를 시작하였다”며 “그러나 그 보건소가 성남시장 관할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진단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 형님은 어머니를 때려 입원시키는 패륜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후 형수를 폭행하고 가산을 탕진하는 등에 이르자 그 가족들이 스스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밝혔다.

즉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거나 입원시킨 사람들은 어머니와 형수, 조카이며, 오히려 자기는 말렸다는 취지였다.

당시 이 지사는 셋째 형의 정신병원 입원동의서, 어머니 폭행 협박으로 처벌받은 공소장, 어머니가 신청한 접근금지명령서 등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실제로 정신병원 입원동의서에는 이 시장이 아니라 형수 박모씨와 그의 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지사의 해명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고 방송 기사가 완벽한 오보로 보일 정도였다.

그러나 방송 기사와 이 지사의 해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큰 차이점이 있었다. 기사는 ‘2012년’에 벌어진 일을 다뤘는데, 이 지사가 제시한 입원동의서는 ‘2014년’ 자료였다.

이재선씨는 2013년 교통사고를 당하고 조울증세가 심해져 2014년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실제로 입원한 적이 있다. 바로 이 자료를 언론 등에 뿌리며, 이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자신의 과거를 감추려 했던 것이다. 참 교묘한 ‘작전’이었다.

이 사건은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다시 불거졌다.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5월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지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다.

김영환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환 : 왜 없습니까?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 큰형님, 누님, 여동생,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김영환 : 보건소장을 이동시켰죠?

이재명 :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인사였습니다.

김영환 : 2012년 4월에 병원에서 보건소에 조울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의견서 낸 거 알고 있죠?

이지사 : 예

김영환 : 2012년 8월에 분당차병원과 분당보건소에서 친형 진단서를 낸 거 알고 있죠?

이재명 : (고개 끄덕이다)

김영환 : 그거를 지금 시장께서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하신거 아닙니까

이재명 : 제가 안했다니깐요

김영환 : 전혀 안했습니까?

이재명 : 예. 저희 가족들이 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김영환 :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되죠

이재명 :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는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과거에 밝혔던 해명과 거의 비슷했다. 상대 후보가 2014년이 아니라 ‘2012년’이라는 시점을 특정해 물어봤으나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상대 후보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경고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이 지사는 일주일 뒤 열린 MBC 후보 토론회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 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말자고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됐더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도지사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면 유권자들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당시 이 지사 주변에는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의혹 등 공직자의 자질이나 도덕성에 악영향을 미칠 사건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이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려했다는 상대 후보의 주장이나 언론 보도에 “전혀 관련 없다” “폐간 시키겠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며, 의혹 확산을 차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금씩 밝혀지는 진실, 계속 부인하는 이재명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2018년 11월 이 지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 다음달 검찰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놀라운 일이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이 지사가 2012년 4월부터 4개월간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성남시 관할인 분당보건소와 정신건강센터, 분당서울대병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협조하지 않는 보건소장에게 이 지사가 직접 협박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공인회계사로 일했던 친형 이재선씨가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지사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리고, 시장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사건 발단 배경도 공소장에 소개됐다.

1심 법정에선 이 지사가 친형을 입원 시키려고 보건소와 병원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분당보건소장은 “2012년 6월 이 지사가 브라질 출장 전날에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으며 브라질에서 3번이나 전화를 걸어 ‘지시한 것을 검토했느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지사로부터 ‘이 양반아, 보건소장이 맞느냐’는 독촉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전임 분당보건소장은 “강제 입원 검토 지시를 받고 위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이 지사 측은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진단을 받게 하려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강제 입원 시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는 차지하고, 적어도 TV토론회에서 나온 이 지사 발언들은 거짓말로 확인된 셈이었다. 이 지사는 친형을 강제입원 시도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은 반대했다는 점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 지사로 부터 ‘독극물’ ‘폐간’ 막말을 들었던 방송 기사 역시 오보가 아니었다.

2019년 5월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재판장 최창훈)에서 1심 선고가 나왔다. 그러나 모두 무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옛 정신보건법 25조 절차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친형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 입원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소지는 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청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언을 하는 등 당시 친형의 증세를 봤을 때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행위는 기초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한 옛 정신보건법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 지사가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상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정황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선 “이 지사의 답변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이 들어 있지 않은 불분명한 발언이고, 그 발언이 유권자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당시 상대 후보가 구체적으로 질문했고 이 지사는 교묘한 거짓말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도 재판부는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광주 인성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온 최 부장판사는 법관 생활 대부분을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일했고 2018년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근무했다. 그는 이 판결 뒤인 2020년, 법원의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영전했다.

이재명의 거짓말, 2심에선 ‘당선무효형’ 선고

2019년 9월6일 2심 선고 재판에선 다른 결론이 나왔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했으나, 직권남용의 위법성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TV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

곡,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 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직접 지시하고, 절차 일부가 진행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채 강제 입원 시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함으로써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 시도했다는 의혹은 토론회 이전에도 언론 등에 여러 차례 보도돼 이 지사가 무슨 일을 말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상대 후보가 2012년 벌어진 일을 구체적으로 질문했으나 입원을 시도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 여부는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판단할 중요한 사항으로, 그런 불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 지사가 유권자들에게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은 상고심으로 넘어갔다. 2020년 6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 당초 대법원2부에 배당됐으나 일부 대법관이 2심 판결과 다른 의견을 내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권 여당에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유력 대선 후보로 꼽혀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복역 중이었다. 또 다른 주자 박원순 서울시장도 성추행 혐의에 연루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온갖 비리 의혹이 제기돼 중도 하차했다. ‘친문적자’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여당 대선 주자들에게 저주가 내려졌다는 말이 회자됐다.

여기에 차기 대통령 선호도 1, 2위를 하던 이 지사마저 유죄가 확정된다면, 여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사라졌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무리한 판결, 여당 1위 후보를 살렸다

대법원 선고는 2020년 7월16일 나왔다. 결론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이었다. 다수의견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7명이었고 ‘유죄’라고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은 5명이었다. 전원합의

체 판결에는 대법관 13명 중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선수 대법관이 이번 재판을 회피하면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6대 5로 의견 대립이 매우 치열했음을 보여준다

다수의견은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거짓말로 답해도 처벌이 어렵게 된다. ‘답변’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은 또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해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국가기관이 토론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그 발언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대폭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또 “이 지사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 취지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지사측이 재판에서 줄곧 주장했던 논리를 대법원이 인정해준 것이었다

그러나 반대의견(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 지사는 적극적으로 거짓 해명을 한 것 일뿐 아니라 부하 직원들에게 정신병원 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함으로써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릴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대의견은 또 “두번째 토론회(MBC)에서의 발언은 상대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토론회 발언에 대해 이 지사가 먼저 발언한 것으로, 즉흥적, 돌발적인 것이 아니다”면서 “이 지사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언론 보도에도 2012년 사건과 2014년 사건을 교묘하게 뒤섞어 의혹을 해명해왔다.

반대의견은 그러면서 “적극적 일방적 허위 사실의 표명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론회 발언은 처벌할 수 없다는 듯한 다수의견은 논리적으로 설득력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허위 표현이 있더라도 토론 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 검증을 통해 도태 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일반 국민이 토론과 검증과정을 보며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의 입장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 지사 의혹은 당시 토론회는 물론 선거 때까지 누구 말이 맞는지 전혀 규명되지 않았고, 법원에 와서야 이 지사의 거짓말로 확인됐다. 이 지사가 아무 관련 없다고 끝까지 거짓말로 버티면서 토론회와 언론을 통한 검증은 무용지물이 됐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정립되면 우리의 TV 토론회는 ‘아무말 거짓말 대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졌다. 가까스로 정치 생명을 건진 이 지사는 판결 직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으로부터 거짓말은 했지만 처벌이 어렵다는 선고를 받아놓고도,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신의 주장이 처음부터 옳았던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대법원은 ‘정권의 보루’가 아니라 ‘법치의 보루’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여당의 대선 후보를 구하기 위해 무리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이런 판결은 다른 여권 후보인 김경수 지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됐다.

대법원에서 남은 유죄 혐의(업무방해)가 파기환송 되면 김 지사는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대법원의 편향 판결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법원은 ‘정권의 보루’가 아니라 ‘법치의 보루’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백년전쟁’ 다큐 사건

18대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둔 2012년 11월 26일.

‘백년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열렸다. 홍보용 포스터에는 ‘당신이 몰랐던 진짜 역사가 온다’는 문구가 선명했다. 영상 제작은 좌파 단체로 알려진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곳. 민족문제연구소는 “1년여의 준비 끝에 역사다큐 백년전쟁의 첫 번째 포문을 연다”면서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역사 인물을 선정하여 성역을 두지 않고 심층 해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선은 우파 진영의 박근혜 후보와 좌파 진영의 문재인 후보의 2파전이였다. 좌파 성향 단체가 선거 직전에 과거 대통령들을 평가하는 영상물을 제작한다면서 그 대상으로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택한 이유는 물어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대선 직전에 불쑥 튀어나온 좌파의 영상물

다큐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내용이 충실하거나 영상미가 뛰어나서가 아니다. 각각 50분과 40분이 넘는 상영 시간 동안 두명의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역사적 평가를 담은 객관적 다큐멘터리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홍보해놓고, 내용은 부정적인 평가와 자료만 모아 짜깁기 했다. 두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은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았다.

백년전쟁은 ‘두 얼굴의 이승만’이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통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악한 괴물로 단정했다. ‘악질 친일파’ ‘A급 민족반역자’ ‘썩은 대가리’라고 표현하며 독립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과 여자만 밝히는 불한당으로 묘사했다. 젊은 비서, 백인 여자와 놀아나며 독립 자금을 횡령하고, 권력욕에 매몰된 인물이라는 것이다.

‘프레이저보고서’라는 제목의 영상물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비슷했다. 국민 다수가 평가하는 경제 개발의 업적이 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계획이었고, 박 전 대통령이 그 공로를 가로챈 것이라고 규정했다. 주가 조작을 통해 정치자금을 모았다는 미확인 주장도 담았다. 우파 진영 대통령 후보의 아버지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풀이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런 두편의 다큐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어떤 영상을 올리든 그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시청자들이 그 채널과 제작자의 정치적 성향을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다, 영상의 파급력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2013년 1월부터 RTV와 접촉해 케이블TV를 통해 다큐를 방송했다. RTV(시민방송)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편집하는 국내 최초의 퍼블릭 액세스 채널로서 시청자 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채널이라고 한다.

백년전쟁은 시민방송과 계약을 맺은 위성 케이블 방송을 통해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이승만편은 29회, 박정희편은 26회에 걸쳐 방송됐다. 논란의 영상물이 유튜브 공간을 뛰어넘어 TV전파를 타고 일반 가정에 진출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그해 8월21일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의 제재조치를 가했다. RTV는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균형있게 방송하지 않고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는 안내와 함께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을 고지 방송해야 했다.

방통위는 이승만편에 대해선

- ▶ 미국 입장의 사료와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만을 인용하거나, 부정적인 학자들의 인터뷰 내용만을 방송해 사실을 왜곡하고
- ▶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고
- ▶ 이승만을 사적인 권력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독립투사 이미지를 만들기위해 거짓말을 하고, 여대생 및 백인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며, 독립자금을 횡령한 인물로 묘사하면서,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방통위는 또 박정희편에 대해선

- ▶ 미국 입장의 사료(프레이저 보고서)와 박정희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 내용만

을 인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 ▶ 한국 경제가 미국의 동아시아 반공정책에 의해 수출주도형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박정희를 경제성장의 업적을 가로챈 인물로만 묘사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고
- ▶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평가를 하여,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으며
- ▶ 일본 침략주의자로부터 검은 돈을 받거나 주가조작을 통해 부정 자금을 모았으며,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제재 사유를 공개했다. 시민방송측은 이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방심위는 2013년 11월 22일 기각했다.

‘저속한 영상물’ 제재 조치에 불복 소송 제기

그러자 시민방송측은 제재조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방송측의 주장은 이랬다.

- ▶ 두 편의 다큐가 비교적 덜 알려진 사실을 조명함으로써 역사적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점
- ▶ 공정성이나 객관성은 기계적 중립이나 산술적 평균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확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 역사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자유롭게 교류될 필요성이 있는 점
- ▶ 방송 내용이 검증된 역사적 자료에 근거한 사실로 구성됐다는 주장이었다. 그래서 진실을 왜곡했다거나 불명확한 내용으로 시청자를 혼동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시민방송측은 또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하여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설령 일부 저속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 해당하므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014년 8월28일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백년전쟁에 대한 방통위 징계는 정당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년전쟁은 두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사례와 평가만으로 구성하고, 제작 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해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자료와 특정 관점에만 기인한 역사적 사실과 위인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및 편집기술을 통해 사실 관계와 평가를 자신의 관점으로 왜곡시켜 위인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것은 위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료와 인터뷰 등을 근거로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자료 및 관점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문기사, 보고서 등 자료 전체를 함께 볼 경우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일부만 발췌하여 그 부분만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방영했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사진을 조작 편집하고 특정 입장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도록 조장한 방송이라는 평가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백년전쟁이 미국의 ‘프레이저보고서’ 내용 가운데 제작진 의도에 맞는 부분만 인용해 박정희를 경제성장의 업적을 가로챈 인물로 단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년전쟁은 박정희를 뱀과 꼭두각시로 묘사했다며 전체적으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으며, 사자인 박정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두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폄하했고 ‘전체 관람가’로 2달에 걸쳐 약 55회 방영되어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도 했다. 이렇게 1심은 시민방송의 완벽한 패소로 정리됐다.

시민방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2심 선고는 이듬해인 2015년 7월15일 나왔다.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김광태)도 백년전쟁이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했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방통위의 제재는 정당했다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추가 판단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방송법 및 방송심의회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적 책임을 준수할 의무를 지는데, 특히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의무는 해당 방송이 역사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역사 다큐물도 공정성과 객관성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 및 편집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백년전쟁은 단지 해당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 내지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도로까지 나아갔다”고 밝혔다. 공정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는 주장만 담은 짜깁기 영상물이라는 판단이었다.

1, 2심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영상물”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그 사이 문제인 정부가 들어섰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했다. 대법원은 상고 3년 5개월 만인 2019년 1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리고 그해 11월21일 선고심이 열렸다. 결론은 방통위의 징계가 오히려 부당하며 백년전쟁의 내용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 1, 2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합의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가운데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등 6명의 대법관이 다수의견으로 시민방송의 손을 들어줬고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등 6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으로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의견이 6대6으로 갈리자 재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

전원합의체에서 의견이 팽팽할 경우 논의를 더 하는게 관례였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대로 1표를 던져 7대6으로 결론을 서둘렀다. 이해가 엇갈리는 첨예한 사건에서, 그것도 하급심들과 상반된 결론을 내리는 재판에서 대법원장의 처신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수의견은 원심을 뒤집기 위해 ‘새 논리’를 개발했다. 방통위가 제재 조치를 내릴 때는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감안해야 하며, 백년전쟁은 시청자가 제작한 비지상파의 교양 프로그램으로,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지상파 보도프로그램에 비해 사회적 영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모가 작은 방송국의 교양 프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져도 너그럽게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들렸다.

다수의견은 판결문에서 “(백년전쟁 같은)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은 소수의 이해와 관점을 반영해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형성하는 방송의 공적 역할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시청자가 제작한다는 점에서 기술이나 자본, 접근 가능한 정보의 양에 한계가 있고 그 결과 전문성이나 대중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격렬하게 비판했다. 반대의견측은 판결문에서 “다수의견은 차별화된 심사기준 적용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접근성이 낮은 채널에서 방영되는 시청자 참여 방송이 신문기사나 외국 국가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역사 다큐멘터리라면, 방송법에 위반되더라도 제재하지 말고 너그럽게 용인하라는 것 밖에 없다”며 “이는 방송법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년전쟁은 개인인 시청자가 단순하게 제작한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제작장비와 체계를 갖춘 제작진이 유명 배우의 내레이션, 여러 교수 인터뷰, 각종 컴퓨터그래픽을 동원한 상당한 수준의 편집을 거쳐 제작한 시리즈 기획물”이라며 “대중적으로 신뢰성 있는 유명인들이 나와서 신문기사나 외국 국가기관 자료 등을 보여주며 주장을 펼친다면 시청자들은 단편적인 보도 프로그램보다 더욱 진실한 것이라고 믿게 된다”고 강조했다. 백년전쟁 나레이션은 배우 권해효가 맡았다.

또 반대의견측은 백년전쟁의 방송 내용을 시청자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수준을 낮춰 줌으로써 방송에 면죄부를 줬다고 다수의견을 비판했다.

다수의견은 이런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전제로 백년전쟁의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다수의견은 “백년전쟁은 제작자가 기획에서 방

송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사료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역사에 관한 사실관계나 그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역사관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관점을 가진 의견을 모두 반영하면 자칫 역사적 관점에 대한 단순 나열에 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사실상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은 그 자체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다수의견 논리라면 비주류 시각에서 본 역사 평가물이라며 반론 하나 없이 방송시간 내내 한 인물을 비판해도 용인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반대의견측도 “백년전쟁은 제작자가 선별한 자료만을 근거로 자료의 전체 맥락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일부 표현만을 발췌·인용해 이를 단정적으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방송했다”면서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및 편집 기술을 통해 사실 관계와 평가를 자신의 관점으로 왜곡시켜 역사적 인물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했다”고 비판했다.

뒤집힌 판결, 반대의견 대법관들 격렬한 반발

사자의 명예훼손 여부도 쟁점이었다. 다수의견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반역자’로 지칭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을 뺀 사진과 나란히 편집한 부분에 대해 “저속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사실 적시가 필요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고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방송 목적이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을 기초로 해 진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반대의견은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발췌해 마치 그 부분만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방영해 방송내용이 공익과는 무관하게 주로 이승만, 박정희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나 동기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반발했다.

대법관들을 반으로 가른 이번 논쟁의 의미에 대해서도 양측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다수의견 측은 “백년전쟁이 제기한 역사적 쟁점에 관해 어떤 관점과 평가가 더 올바르고 타당하냐가 아닌 ‘국민의 역사 해석과 표현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 한계와 정도’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나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반대의견 측은 “사법부가 역사를 해석할 수는 없다”면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우리 사회가 감수해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는 견해는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열을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가운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은 5명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은 7명이었다.

사건의 주심이자 다수의견에 선 김선수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 멤버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변 회장을 지냈다. 역시 다수의견에 선 박정화 노정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상환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모두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재형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내는 등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도 이번에 다수의견 입장이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안철상 김상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박근혜 정부에서 취임한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도 반대의견에 섰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은 무죄에서 유죄로

일부에선 백년전쟁 판결이 언론과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극명한 코드 판결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집권 세력의 이해 관계에 맞춘 판결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부림사건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

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한 여러 이유를 제시하며 본인만의 진단을 내린 것으로 악의적 모함이 아니다”며 “공산주의자의 개념도 시대마다 달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최한돈)는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 등에 비춰 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장인 최한돈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법조계에선 북한을 추종한다는 ‘종북’까지도 표현의 자유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중립적인 표현인 ‘공산주의자’를 명예훼손으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유죄에서 무죄가 바뀌는 판결도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약을 복용했을 수 있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발언한 박래군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월호 민간단체 대표인 박씨는 2015년 6월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피부 미용, 성형수술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다”고 했다. 1심과 2심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씨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이 정도 의혹까지 나오니 당시 대통령 행적을 밝혀달라’는 의견을 강조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한 비판 내용으로, 이 부분은 특히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니 현직 대통령을 욕하면 유죄, 전직 대통령을 욕하면 무죄라는 비판이 나온다. 백년전쟁도 전직 대통령을 비판한 영상물이어서 대법원이 관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다.

만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미공개 수사 자료와 부정적 평가만 담은 보도와 인터뷰로 역사 기록물을 만들어 방송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3)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법원의 대표적인 편향적 판결 사례로 꼽힌다. 1심과 2심, 헌법재판소마저 전교조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던 사안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뒤집혔다. 7년 소송의 경과는 이렇다.

2013년 당시 전교조에는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직이 확정된 교사는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교조에선 이를 무시하고 해직 교사들이 노조 활동을 해온 것이다. 그해 9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 교사들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그 다음 달에는 “전교조를 합법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며 ‘법외(法外)노조’라고 통보했다. ‘시정 요구 내용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가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른 조치였다.

노동조합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외노조는 단체협약교섭권 등 법적 권리는 없지만 강제 해체되거나 활동이 금지되진 않는다.

이에 전교조는 “전교조에 대한 법적 지위 박탈은 노동탄압국으로 회귀를 의미한다”며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기에서 쟁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정부 요구에 따라 해직 교사 9명만 조합에서 탈퇴 시켰다면 전교조는 합법 노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전교조는 9명을 보호하려고 5만여명의 다른 조합원이 불법 노조원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모험을 감행했다는 사실이다. 해직 교사 9명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9명 가운데 6명은 전교조 대변인, 서울지부 대외협력실장, 본부 정책연구국장, 정책기획국장, 본부 법률지원실장, 서울지부 사립위원장으로 각각 활동했고, 2008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해직됐다. 2008년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됐다.

다른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학사운영방해 등으로 해직됐다.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 출신의 한 인사는 2005년 북한 역사책을 인용해 만든 자료집으로 동료 교사와 통일 관련 세미나를 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됐다. 서울지부 교권국장이던 한 인사는 2004년 사립학교 재단 퇴진 운동을 벌

이다 불법 시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부 조직국장을 하던 또 다른 인사는 학교장의 우열반 운영, 사관학교식 별점제도에 반대하다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뒤 해임됐고, 해임처분 무효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처럼 해직교사 9명은 평범한 조합원이 아니라 전교조의 핵심 ‘전사’들이었다. 전교조 내부에선 “9명을 조합에서 탈퇴시키고, 노조 직원으로 채용해 월급을 주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집행부가 “동지를 버리는 것은 노조라 볼 수 없고, 한번 해직자를 포기하면 앞으로 누가 노조를 위해 싸우겠느냐”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이다.

‘전사’ 9명 지키려 5만명 ‘법외노조원’ 위험 감수

재판이 진행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13개 시도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전교조 구하기’에 앞장섰다.

이듬 해인 2014년 6월19일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전교조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곧바로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전교조가 1999년 설립 당시 정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전교조는 1999년 6월 규약을 개정하면서 ‘부당해고된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해직된 조합원 중 복직되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새로 만들어놓고도, 노동부에 설립 신고를 할 때는 이 개정 규약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점을 들어 “전교조는 허위 규약으로 설립신고를 했다”면서 “해직교사를 조합원에 포함시켰던 전교조의 ‘실제 규약’에 따르면 전교조는 노조법상 처음부터 합법노조로 설립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설립 당시부터 합법노조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재판부는 이어 “해직 교원 9명은 부당해고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됐거나 해임처분 소송을 제기해 패소 판결로 확정된 자이므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보면 이 사건 통보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교조는 불복했고, 사건은 2심으로 이어졌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違憲)”이라는 주장에 화력을 모았다. 해직자 가입을 금지한 법률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전교조가 신청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받아들였다.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2015년 5월28일 결정이 나왔다.

합헌이었고, 전교조는 또 졌다. 현재는 “교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활동할 경우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8대1의 결정이었다. 교원노조는 현직 교원의 근로 조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교원이 아닌 사람이 노조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재의 설명이었다.

현재는 또 “교원노조는 교원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을 배제한다고 해서 단결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전교조는 2심 재판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항소심 선고는 2016년 1월21일 있었다. 예상대로 전교조 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 단 한 명이라도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가 작년 5월 해당 조항에 대해 ‘전교조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행령 조항도 위헌성이 없다”며 “정부의 시정 요구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 규제로, 정부가 사전 통보를 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전에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한 점 등을 볼 때 법외 노조 통보가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2심과 헌법재판소까지 전교조 패소 판결

판결 직후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시대 정신과 국제기준을 외면한 비상식적인 판결이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조합원을 한 명도 버릴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법외 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현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한 이상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였다.

그 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전교조는 문 대통령을 향해 “촛불 혁명 주역에게 빚을 갚으라”고 주장했다.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전교조는 내부 자료에서 “우리가 단지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그 추운 겨울 광장에 모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가 행동에 나설 때만 세상이 바뀐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필요없이 정부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법외노조를 번복할 마땅한 명분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직권 취소보다는 대법원 판결이나 법 개정을 통한 ‘민원’ 해결이 부담이 덜하다고 판단한 듯했다. 전교조는 그런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을 겨냥해 ‘적폐’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급기야 전교조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문재인 정부 규탄 대회까지 열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문재인 정부에게 옐로카드” 등이 적힌 피켓을 들어올리며 “7년동안 법외노조였다. 이제 그만 철회하라”고 했다. 전교조의 상급 노조인 민주노총도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다.

법외노조 철회 압박 속에 대법원 판결

이런 분위기에서 2020년 9월3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12명의 대법관 중 8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2심 판결과 현재 결정까지 뒤집고 전교조에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법리는 매우 ‘독창적’이었다. 해직 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동부가 시정 명령을 내렸고, 전교조가 이를 무시하자 시행령에 따라 법외노조를 통보한 아주 단순한 이 사건. 대법원에서 어떻게 뒤집혔을까.

대법원 다수의견은 ‘시행령’에 관심을 가졌다. 조합원들의 노동3권을 박탈하는 법외노조 ‘통보’는 행정부의 시행령이 아닌 구체적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상 근거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수의견은 노동조합에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결격 사유 발생 즉시 자동적으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격 사유로 인한 법외노조 ‘통보’가 있을 때 비로소 법외노조가 된다고 전제했다. 즉 노조의 생사를 가르는 ‘통보’라는 중요한 조치는 법률에 의거해야지 시행령 조항에 둘 것이 아니라는 게 다수의견의 논리였다.

반대의견을 낸 두 대법관(이기택 이동원)은 이를 반박했다. 해직 교사의 조합원 활동으로 전교조는 이미 교원노조법을 어긴 불법노조가 됐고, 시행령에 따른 법외노조 ‘통보’는 공식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왜 ‘통보’라는 형식적 절차에 집착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두 대법관은 “법규정에 의하여 법외노조가 된 노동조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사항이고 특별한 위임이 필요한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마치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어떤 미비나 흠결이라도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법률상 근거 내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전혀 새로운 규정이라고 단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수의견과 달리 반대의견은 해당 법령과 시행령의 조항은 매우 명확하고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두 대법관은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적 지위와 보호만 달라는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체계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전교조 요구는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의미였다.

핵심 지지세력 위한 코드 판결인가

법조계에선 “대법원 판결이 전교조 합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 기술을 부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은 노동 3권 같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해야지 시행령으로는 안된다는 ‘법률 유보’ 원칙을 내세웠는데, 이 법리가 늘 적용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다른 사건에선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회사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2011년 자기 형에게 회사 주식 75억원 어치를 양도했는데, 국세청은 이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보고 주식 양도 가액에 30%를 할증한 금액으로 세금을 물렸다. 그런데 ‘30% 할증’은 소득세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고 하위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번 ‘전교조 판결’을 적용하면 이씨의 기본권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해 침해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해야 했지만,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 있는 적법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전교조 범외노조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뤄진 편향된 판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현 정부와 대법원이 코드를 맞춰 핵심 지지세력에 대한 보은성 판결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4) 청와대 비리는 영장 기각이 관례인가

2017년 6월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현장.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탈핵(脫核)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탈원전 선언을 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도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탈핵 탈원전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이자 핵심 공약이었다.

그로부터 9개월 뒤인 2018년 4월 2일. 청와대 보좌관은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있다”는 보고를 올렸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참모에게 그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되냐고 물었다. 이런 대통령의 관심은 참모를 통해 다음날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장관은 담당 과장을 불러 월성 1호기 향후 계획을 물었다. 과장은 “2년반 정도는 더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2015년에 7000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마쳐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운영사(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자 장관은 “너 죽을래?”하며 크게 화를 냈다. 그러면서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청와대와 산업부는 탈원전 선언 1주년인 2018년 6월19일까지 성과물을 마련해야 할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작전’에 나섰다. 그렇다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기반 시설이 하루 아침에 문 닫을 순 없었다. 정해진 절차와 과정은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감사원과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와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 경제성 평가부터 조작했다. 한수원과 회계법인에 압력을 넣어 ‘더 가동하면 손해’라는 식의 보고서를 만들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산업부 간부는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청와대에서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으니 대통령 탈원전 선언 1주년 이전까지 월성 1호 처리 방침을 정해 달라”면서 “한수원 직원들의 인사상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말 듣지 않으면 자른다는 협박에 가까웠다. 한수원은 탈원전 1주년 나흘 앞둔 6월15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 영구 중단을 의결했다.

하지만 1년 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과정과 절차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감사에 나섰다. 대통령 관심 사안이라며 일사천리 업무를 진행했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번엔 대대적인 증거인멸에 가담했다. 정보를 미리 입수한 직원들은 감사 시작

하루 전날(일요일)인 2019년 12월 1일 밤 11시에 사무실에 들어가 2시간에 걸쳐 자료를 없앴다. 파일 복구가 되지 않도록 원래 파일명 등을 수정해 다시 저장한 뒤 삭제하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이렇게 500여개의 자료가 사라졌다. 공무원들이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을까. 뿔뿔하게 일했다면 밤중에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검찰도 작년 11월5일 산업부 청사와 한수원 본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동시 압수수색 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장관과 여당 정치인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추 장관은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라며 “정치인 검찰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수사,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윤석열 총장이 청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추 장관은 11월2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 배제를 전격 발표했다. 하지만 그 배경에 원전 수사가 자리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어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한 산업부 국장과 서기관 등 핵심 실무진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컴퓨터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 관련 공용전자기록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과장급 직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삭제한 파일을 복구한 결과 새로운 사실이 불거졌다. 산업부 직원들이 북한지역 원전 건설 지원 방안 등 북한 관련 보고서 17개를 만들었던 것이다. 작성 시점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제1차 남북 정상회담과 그 뒤 6월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됐다. 작성 시점이 아주 미묘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USB 저장장치를 전달한 바 있다. 남북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판문점에서 담화를 나누는 가운데 “발전소 문제…”라고 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혹시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려 했던 것은 아닌지 등 온갖 시나리오가 나올만 했다.

원전 사건 일파만파, 장관 구속영장 기각

원전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고, 검찰은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를 향해 바짝 다가갔다. 그리고 지난 2월5일 검찰은 백운규 당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여권에서 노골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런 사안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취임 후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정책이나 공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과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을 수사하는 검찰에게 압력을 가하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정책은 불법으로 집행돼도 수사하면 안된다는 희한한 논리였다.

검찰 주변에선 장관이 구속되면 그 다음은 바로 청와대가 타깃이기에 여권이 총력 방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 역시 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이미 국장과 서기관 등 실무진이 구속된 데다 이들이 장관의 지시없이 독단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0’에 가깝기 때문이다.

예측은 빗나갔다. 대전지법은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관으로부터 “너 죽을래?”라는 협박까지 들으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던 실무자들의 진술까지 나왔으나 법원은 이를 중요하게 보지 않은 셈이다. 장관은 영장 심사에서 “월성 1호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위한 국정과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안전성이 아니라 평가 조작을 통한 경제성을 사유로 폐쇄됐다.

사실 백 장관은 원전 사건의 총책임자가 아니었다. 월성 1호기 영구 폐쇄를 가장 먼저 주문한 사람은 문 대통령이었다. 그는 2017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월성 1호기 영구 폐쇄를 여러 차례 공약으로 내걸었다. 장관이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고, 실무자들이 별안간 경제성 평가 조작에 나선 것도 문 대통령의 ‘관심’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밝히고 있다.

법원도 이런 사건 배경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백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급속히 탄력을 잃게 됐다. 더욱이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법원에서마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나옴에 따라 수사팀은 더욱 험한 길을 가야했다. ‘코드 판결’보다 더 무서운 건 영장전담 재판부의 ‘코드 기각’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조국 동생 어이없는 영장 기각과 황당한 판사

2019년 10월9일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이 술렁거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조권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용동중학교의 교사 채용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을 받았다. 뒷돈을 전달한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됐는데도 ‘뇌물’을 챙긴 조씨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특히 조씨는 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피의자들은 어차피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스스로 영장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게다가 조씨는 영장 심사를 미뤄보려고 병원에서 피병을 부렸던 정황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권씨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건강 상태를 기각 사유에 넣은 점은 거의 ‘코미디’에 가까웠다.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를 스스로 포기한 피의자는 모두 32명. 전원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조권씨만 예외가 됐다. 이러니 법조계 주변에선 “영장 기적이 벌어졌다”는 조롱이 쏟아졌다.

야당에선 조씨의 영장 기각은 문제인 정부가 코드 인사로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영장전담 부장판사 라인을 통해 영장이 기각됐는데, 김 대법원장과 민 법원장이 사법부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은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장관, 여당이 격렬하게 반발했던 수사라 법원이 여권과 ‘보조’를 맞춘 것이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10개 청구하면 법원에서 1, 2개만 발부할 정도로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했다.

정권 치명타 될 울산시장 불법선거, 구속은 없었다

정부 실세들이 연루된 대형 사건에선 어김없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와대와 경찰,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불법 공작을 벌였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려 관권을 총동원한 희대의 사건으로 원전 사건과 함께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작’의 수혜자는 울산에서 8차례 출마해 8차례 떨어진 현 송철호 시장. 단골 낙선자였지만 2018년 시장 선거에선 엄청난 우군이 옆에 있었다. 바로 30년 ‘절친’인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과거 울산 유세장에서 “내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라고 말할 정도로 문 대통령과 송 시장은 친밀한 사이였다.

여기에 2012년과 2014년 송철호 선거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았던 사람은 조국으로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조 수석은 “아버지 고향이 전북 익산이라는 이유로 지역 감정에 희생된 송철호가 단 한 번이라도 당선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권력자들을 끼고 있는 송철호 후보였지만 당선은 어려워 보였다. 재선에 나선 김기현 후보(당시 울산시장)의 지지도가 송 시장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례없는 정치 공작이 시작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국정상황실, 균형발전비서관실 등 청와대 조직 8곳이 김기현 후보를 흠집 내고 송 후보를 돕기 위해 동원됐다. 이들은 황운하 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휘하던 울산경찰청을 사조직처럼 활용해 김 후보와 그의 가족, 측근들에 대한 거짓 첩보보고서를 만들었다. 그 보고서를 빌미로 수사를 벌였고, 그럴 때마다 김 후보의 의혹은 언론에 공개됐다. 김 후보가 당에서 공천이 확정된 날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그런 식이었다.

심지어 검찰에서 수사 보완 지시를 내리면 울산경찰청은 가짜 증인으로 허위 진술서를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말 안듣는 경찰관은 인사 불이익을 줬다. 1960년대 경찰도 그렇게 안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청와대에선 김기현 후보의 공약은 무산되도록 힘을 썼고,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에겐 다른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덕분에 송철호 후보는 9번 도전 만에 선거에서 처음으로 이겼다. 하지만 무법과 불법 선거였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2월27일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후보의 최측근으로 선대본부장을 맡아 청와대와 경찰, 그리고 송 후보 사이에 핵심 고리 역할을 담당한 송병기 경제부시장이었다. 김기현 후보에 대한 가짜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전달한 바로 그 인물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새해 직전인 12월 31일 밤11시53분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에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전담판사는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시켰던 명재권 부장판사였다.

송 부시장을 구속한 뒤 송 후보와 청와대 실세들로 방향을 전환하려던 수사팀 계획은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

결국 검찰은 작년 1월 송철호 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서장 등 13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송 후보 당선을 소원이라고 말했던 문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은 조사 한번 못했다. 1년 3개월간 질질 끌던 이 사건은 최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무혐의 ‘면죄부’를 주고 막을 내렸다.

더욱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는 작년 1월 기소된 이 사건을 맡아 재판 준비만 하고 본재판을 한차례도 열지 않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가려져왔던 각종 수사 기록과 진술이 재판을 통해 공개되면 집권 여당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까봐 재판을 최대한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영장 기각 사유에 정치적 배경까지 등장

‘살아있는 권력’ 즉 현 정부 비리에 대한 첫 수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었다. 청와대와 환경부 장관 등이 산하기관 임원들을 찍어내기 위해 표적 감사를 하고 그 자리에 여당 인사들을 앉히려고 채용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었다. 문화예술계 명단(블랙리스트)을 관리하던 지난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적폐’로 몰아 구속시켰던 현 정부에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수사기간 내내 검찰을 압박했다. 청와대는 “우리가 작성한 것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고 했고, 법무부 장관은 “피의 사실 공표 문제

를 조심하라”고 수사팀을 압박했다. 과거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 내용은 실시간 언론에 노출되도 가만히 있더니 현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꾹꾹 틀어 막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2019년 3월22일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관이 구속되면 블랙리스트 작성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청와대로 수사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었다. 법원의 영장심사 직전 청와대가 나섰다. 당시 김의겸 대변인은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을 향해 영장을 기각하라는 노골적인 메시지였다.

실제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더 논란이 됐다.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 농단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한 사정이 있다 ▶새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 수요 파악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청와대가 낙하산을 내리쬐는 것은 ‘관행’이어서 고의나 위법이라는 인식이 희박했을 것 등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재판부가 ‘최순실 일파’라는 정치적 표현을 사용한 것도 부적절했지만, 이번 사건을 지난 정부에서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적절한 감독권 행사로 판단한 부분이 특히 정치 편향적 사유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을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은 청와대나 법무부의 압력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아무리 수사 해봐야 죄가 안 된다’는 영장 기각사유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포기하고 불구속 기소했으며, 청와대쪽 수사도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김은경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전 비서관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이 사건처럼 대대적이고 계획적으로 사표를 받는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던 감독권 행사로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던 그 판사는 장관의 법정구속을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3월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사건 배후로는 청와대와 친

문(親文) 검찰 간부들이 지목 받았다.

하지만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법원이 수사팀에 보낸 청구서엔 ‘발부’ 도장이 찍힌 부분이 수정액으로 지워진 뒤 ‘기각’ 도장이 다시 찍혀 있었다. 법원은 “단순한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의심을 받았다.

이처럼 현 정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수사마다 법원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구속이 곧바로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와 구속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법원에서는 피의자의 권력 유무와 정치적 진영이 영장 발부의 기준이라는 말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6. 인사청문회는 ‘위증 대잔치’

대법원장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인 관계로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제도적 장치로써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고 있고, 헌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하고, 공직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한다.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통해 실천하기로 한 다짐이나 사항은 해당 공직에 임명된 후에 지켜져야 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헌법적 책무가 부여되어 있는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대법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행한 답변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한편, 결과적으로 위증의 문제를 낳고, 회피용 임기응변 방식을 이용하여 국회로부터 대법원장 임명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인사청문회 “법원 독립” “공정한 인사” 발언은 위증 아닌가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2017년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렸다.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와 법관 인사의 편향성 우려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먼저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는 2017년 9월 12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사법에 대한 철학과 소신으로 가장 먼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용기를 언급하면서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세력이나 영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국민들은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사법부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싶어 한다”면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법부의 모습을 되찾고자 대법원장후보자의 자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진 2017년 9월 12일의 인사청문회 본질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는 “대법원장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나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주호영 위원장의 질의에 “법원의 독립을 지키려는 소신과 용기”라고 답변했고,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어떻게 지켜야 지켜지는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외부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정치권력은 외부로부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미리 예방하거나 나중에 거부하는 것, 언론이나 기타 사회단체에 관한 것도 있을 건데 그건 그때 그때 법관들이 그런 여론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대법원장이 방패막이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 그게 대법원장 역할일 것 같다”고 답변했으며, “이 시기 대법원장의 시대적 소명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고용진 위원장의 질의에 “첫째는 무엇보다 대법원장으로서 모든 외부 권력이나 영향으로부터 굳건히 지키려는 독립의 의지가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13일의 인사청문회 본질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는 주광덕 위원장의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 어떤 분을 원하실까 그 고민을 해 봤다. 대법원장의 위상 그리고 상징성에 걸맞은 능력과 경력, 그리고 치우침이 없는 그런 분이 최고 권력인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 두 번째로는 외부의 세력과 3000명이 되는 법관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또는 법관 단체로부터 독립

성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대법원장을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는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동의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된 후 보여 준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보는 이와 너무도 달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말을 해놓고 정작 정치권력인 여당이 주도한 판사 탄핵소추에 침묵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법정구속된 후 정치권력이 ‘사법개혁’, 법관탄핵’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법원 때리기 총력전에 나섰을 때를 비롯하여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법원을 흔들고 법관을 압박하는 반헌법적·반민주주의적인 행태를 보였을 때에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과 용기를 보이지 않았거나 마지못해 의례적 비판 자제를 주문하는 정도에 그쳤다.

2018년 9월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인 사법부에 촛불정신을 받들어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을 강조하면서 ‘사법부 민주화’를 제시한 대통령 기념사에 대한 화답 논란을 야기해 사법부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빈축을 자초했다. 법관들이 엄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삼권분립 한 축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정치권력의 외압을 막기는커녕 정권과의 코드를 맞추려는 듯 ‘사법부 흔들기’, ‘판사 길들이기’를 사실상 모른척하여 사법부 독립을 공염불에 불과하게 한 결과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행한 자신의 발언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국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 과정을 통해 확보되는 민주적 정당성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관 인사의 편향성 우려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는 2017년 9월 12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그가 지향하는 대법원장은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 목소리에 정성을 다해 귀 기울이며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을 통해 바람직한 사법부의 모습을 함께 다져 가는 사람이다. 판사의 임무와 역할을 고려할 때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하여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였을 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다”면서 “사법부 구성원들을 통합하여 보다 성숙한 사법부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진 2017년 9월 12일의 인사청문회 본질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는 장제원 위원의 “대법원장 권력으로 자신의 이념이나 코드 또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람들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중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고,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몸담아서 활동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라든지 새로운 주요 보직에 관련되었던 분들을 발탁해서 인사를 하지 않겠냐, 소위 편향된 인사를 하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다”는 이용주 위원의 질의에 “대법원장이 되면 어느 연구회의 대법원장도 아니고 국민의 대법원장인데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법관이면 법관이지 그 외의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절대 국제인권법연구회라든지 저와 친분 있는 사람을 요직에 한다든지…… 정말 능력대로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 내의 하나회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지”의 기동민 위원의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 판사들끼리 모여서 법원에 관해서,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그 정도의 단체였다”고 답변했다. 2017년 9월 13일의 인사청문회 본질의에서 손금주 위원의 “후보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소장 판사들의 기대와 관련해서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예정이냐”는 질의에는 “앞으로 사람을 쓰거나 기타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크게 불리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결코 특혜나 이익을 보는 일은 없도록 극히 조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것과는 전혀 달리 대법원장 취임 후 계속 소위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을 중용하는 코드인사를 보여줬다. 언론 보도¹⁰⁾에 따르면 법원 전체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판사의 42%,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34%, 지방법원장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전국 지원장의 24%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확인됐다. 2021년 1월과 2월 법관 인사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조사에 참여하거나 검찰 수사를 주장했던 판사들과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형사수석부장 자리 등 요직에 앉혔고, ‘서울중앙지법 3년 근무’ 원칙까지 깨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조국 가족 비리 의혹 재판과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을 코드인사로 특별히 유임시켰으며, 대법원장 취임 직후 실시한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에 대한 두 차례 추가 진상조사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음에도 ‘적폐 판사’로 낙인찍힌 관련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한직으

10) 조선일보 2021. 4. 27. A1면

로 밀려나거나 징계를 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에 대해 언론은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¹¹⁾, “거짓말보다 심각하다”는 김명수 인사 논란…왜?¹²⁾, 민변·우리법 연구회 출신만 중용, 공정과 정의가 위태롭다¹³⁾ 등¹⁴⁾으로 법관 인사의 심각한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2021년 2월 16일에는 서울남부지법 보안관리대 소속 한 법원 직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 행태를 “그의 재판독립 외침은 사법 신뢰회복과 재판독립이라는 탈을 쓴 탐욕의 외침”이며 “그의 비정함이 오직 탐욕이었다는 것은 법관 인사를 통해 보면 또한 알 수 있다. 자기편 사람 심기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코드인사다”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상 사법부 독립의 출발점인 법관 인사에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중용하는 심각한 편파적 인사권을 행사했고, 이러한 특정 출신을 중용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는 법과 양심보다 정권 이해에 맞는 편향적 판결을 내려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견제와 균형을 흔들어 법치 실현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을 초래했으며, ‘법원 내 하나회’ 논란을 자초하는 등 법관 인사에서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하여 헌법적 가치인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음이 확인되었다. 이 또한 국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 과정을 통해 확보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들통난 대법원장 후보자

2017년 9월 12일 인사청문회 본질의에서 주광덕 의원은 “1998년 12월에 삼익 아파트 매수할 때 실제로는 1억7000만원에 샀는데 매수가 신고는 9000만원에 한 것으로 했다. 실거래가보다 8000만원을 낮춰서 신고했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 등 어쨌든 세금 덜 냈다. 또 그 무렵에 아파트 팔 때

11) 중앙일보 2021. 3. 2. A25면

12) 경향신문(2021.02.18),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181644011&code=940100 (검색일: 2021.05.07)

13) 매일경제 2021. 3. 6. A27면

14)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를 둘러싼 언론의 비판은 191쪽부터 200쪽까지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도 실거래가보다는 4200만원 축소해서 실제적으로는 1억1200만원에 팔았는데 7000만원에 신고한 것도 사실이지 않느냐”고 질의했고,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는 “물론 그 당시 거래 관행에 따랐고 그것이 일응 허용되는 범위였다고는 하지만 제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비록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가 지적된 자신의 잘못에 고개를 숙였지만, 어느 고위공직자보다도 도덕성을 겸비해야 할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에 큰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대중교통 이용으로 “청렴 쇼”를 한 대법원장 후보자

2017년 9월 12일 인사청문회 본질의에서 손금주 위원은 “조사해 보니까 춘천지방법원장 시절에 대부분의 출장들, 거의 모든 출장에 관용차를 이용했다. 그리고 8월 22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대법원장 면담만 춘천버스터미널까지는 관용차로 그리고 그 이후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답변이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장 면담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 봤다. 후보자의 그날 일정을 확인해 보고 실제 대중교통만이 일정에 맞출 수 있는 것이냐 확인해 봤다. 일정을 확인해 본 결과 후보자가 관용차량을 이용했으면 적어도 1시간 10분에서 늦어도 1시간 50분 내에는 대법원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하려 대법원장 면담에 늦은 것이다. 이후 다시 질문했을 때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공무원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였다’ 이것이 두 번째 답변이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에게 확인을 구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고, 이어 손금주 위원이 “그러면 후보자 지명 이후에 관용차 사용 안 했냐”는 질의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으며, 손금주 위원은 “국민은 보여주는 대법원장을 원하지 않는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대법원장, 법관의 독립을 지키면서 사법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대법원장을 원한다”고 꼬집었다.

1년여 동안 한 달 넘는 가족 동반 여행한 대법원장 후보자

2017년 9월 13일 인사청문회 본질의에서 주광덕 위원의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4개월간 5회에 걸쳐서 크로아티아, 북유럽, 방콕, 발트 3국·러시아, 후쿠오카, 이렇게 다녀왔다. 후보자 혼자 다녀왔느냐”는 질의에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는 “가족끼리 같이 갔다”고 답변했고, “맞춤형 VIP 크로아티아 602만원은 부인하고 두 분 여행비이냐?”의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변했으며, “1년 2개월 동안 꽤 여러 날을…… 10일, 10일, 3박 5일, 9일, 3일, 많은 날을 해외여행을 하고 약 21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여행비로 썼다. 사법부 차관급의 고위공직자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느냐”는 질의에는 “사실은 2012년도에 딸을 시집보내고 나서 그 뒤에 아들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고 난 뒤 마음이 쉼해서 부부끼리 여행을 많이 다닌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금액이 저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그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2017년 9월 15일 제4차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주광덕 위원은 ‘맞춤형 VIP 크로아티아 602만원은 부인하고 두 분 여행비냐?’라고 질문했더니 ‘그렇다’라고 답변한 뒤 나중에 ‘사실은 2012년도에 딸을 시집보내고 나서 그 뒤에 아들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고 난 뒤 마음이 쉼해서 부부끼리 여행을 많이 다닌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금액이 저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라고 하여 유감스럽게도 명백하게 위증했다고 지적했고, 전해철 위원도 결론적으로 602만원은 후보자 혼자의 경비이기 때문에 ‘부인하고 두 사람의 경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을 수가 있다고 확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도 드러난 것이다. 그 밖에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전교조의 동성애 교육 결의나 대체 복무 허용 등 주요 현안 질의에 대해 회피성 애매모호한 답변 태도로 일관하는 등 대법원장의 최고 덕목인 정직성을 갖추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타당성을 잃은 김명수 임명동의안 가결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안은 2017년 9월 21일 제354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

고를 거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여 총 투표수 298표 중 가 160표, 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가·부의 표차는 겨우 26표에 불과했다.

이날 본회의 회의록에 기록된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적격 의견을 제시한 청문위원은 그 이유로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이 법원 내부로부터의 법관 독립을 지켜 낼 수 있는 적격자임을 방증하고, 법관의 명예와 자긍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대법원장의 소중한 소명과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가 대통령의 인사 개입 가능성을 단호하게 배척하여 법원의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하였으며, 대법관 제청권 및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있어서 절차를 준수하고 사적이며 자의적인 개입은 자제하겠다고 밝혔고, 법원 내·외부의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법부 구현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반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 청문위원은 그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경우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연구단체로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관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비서관 및 법무부장관 등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성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 낼 자신이 있다는 반복적인 말 이외에는 그러한 의지를 확인할 아무런 경력이나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시적으로 청와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고, 우리법연구회의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및 2대 회장을 맡아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법원은 중요한 인사 추천이나 중요 사건 판결마다 중립성 시비에 시달릴 것이며, 법원은 법관 인사를 둘러싼 극심한 내부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본회의 표결에 있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들은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투표권 행사 시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을 수밖에 없다.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되는 인사청문위원들의 의견은 당리당락을 떠나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이고,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임은 물론이다.

국민의 뇌리에 생생히 남아 있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

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둘러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 명백한 탄핵사유도 없이 여당이 추진한 법관 탄핵소추를 비롯하여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여기는 법원 판결에 외압을 행사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정치 권력에 침묵으로 회피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무소신 행태, ‘사법부(司法院)’가 행정 각부 수준의 ‘사법부(司法部)’로 전락했다는 탄식이 나왔던 촛불정신을 받들라는 대통령의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 화답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 기념사,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정도를 넘어선 사법정치화,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의 중용으로 대표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등 단지 몇몇 사례만 떠올린다고 해도 당시 본회의에 보고된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위원들의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 중 어느 의견이 타당했는지는 쉽게 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다수가 부적격 의견이 옳았다고 생각한다면 국회의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는 무책임하고 왜곡된 판단정보의 제공이 만들어 낸 잘못된 의사결정이었음이 분명하다.

7. 국정감사로 본 사법부 수장

국회가 매년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활동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서 볼 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대법원장을 향해 제기하는 지적이나 요구는 국민의 목소리이고, 임명직 최고위 공직자인 대법원장은 이를 경청하며 존중하여 실천하는 것이 요청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사법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담긴 감사위원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재판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줄곧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무소신, 편향적 인사권 행사, 사법개혁 성과 미미 등이 제기되었고, 이런 점에서 국정감사의 취지와 본질을 무색하게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취임 1년에 보여준 편향성과 사법부 후퇴

2018년 10월 10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¹⁵⁾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법원장후보자 지명을 받았을 때부터 줄곧 사법부 코드화·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고, 그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활동을 주도한 법관들을 법원 요직에 임명했고, 이념 편향적이고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로 부렸던 사법개혁비서관 출신의 변호사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으며, 사법부도 모자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이념 편향적이고 대통령의 직속 부하였던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변호사를 재판관으로 제청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하게 했고, 사법개혁 미명 아래 법원을 사조직화·정치조직화하여 사법개혁에 앞장서기보다는 근거 없는 의혹만 증폭시켜 논란을 야기하는 등 오히려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그 결과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 참담한 여론조사 결과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질책이 있었다.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는 순수한 학술연구단체도 아니며 이념 편향성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집회·결사의 자유라고 해서 덮고 넘어갈 일이나? 법원 안에 그런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사법 불신이 초래되고 경우에 따라서 사법의 정치화까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후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에서 허약하고 무능한 리더십으로 사법부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이 추락시켰고, 내부적으로도 동아리·서클 인사를 통해 사법부를 분열시키면서 사법부의 수준을 격하시킨 참담하고 비참한 1년이었으며, 사법개혁에 대해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무사안일하면서 수수방관했고, 공보관실 예산을 비자금으로 수령해 도덕성까지 타격을 받았다는 점이 제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봐도 편향적이고 한 정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위촉하여 애당초 균형 있는 인사 추천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등 인사 검증이

15) 이하 내용은 2018년 10월 10일(수)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에서 발췌하였다.

부실하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하여 사법부가 아닌 청와대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에 힘을 실어 주면서 영장 기각하는 판사들에게 압박 시그널을 보냈다는 질책도 있었다.

2018년 10월 29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¹⁶⁾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조직법이 아닌 대법원규칙을 근거로 만들어졌고, 일각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위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특정 단체에 소속돼 있는 법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다분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사실상 지금 법원을 주도하고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건의기구에 불과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인 상황이고, 13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실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이며, 건의기구가 아니라 월권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라면 폐지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현행법에도 제척·기피·회피 제도라는 얼마든지 공정한 재판부 구성을 위한 제도가 있음에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인 침해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더 이상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소극적인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말해야 하는데 상당히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보이며, 임성근 부장판사를 대법원장이 콕 찍어 관할 법원장이 반대하는데 징계하고, 대법원장이 굳이 경미한 견책 사건에 나서 법원 편 가르기 하여 대법원장 권위가 무너지는 이런 일을 왜 하는지에 질책이 있었다. 최근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임성근 법관의 징계·법관대표자회의의 기능 이런 것을 보면서 사법부의 권위는 갈기갈기 찢어졌고, 법관의 권위와 존엄도 정말 이제 살릴 수 있을까 매우 걱정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대법원장 공관 벽에 외국산 고급 석재인 라임스톤을 사용하여 국민 세금을 낭비하였고,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공사에 1·2심 재판 충실화 명목 예산을 전용하면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힐책도 있었다.

16) 이하 내용은 2018년 10월 29일(월)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에서 발췌하였다.

취임 2년에 보여준 편향성과 사법부 후퇴

2019년 10월 2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¹⁷⁾에서 법원조직법 제25조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법행정자문회의의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채워지며, 의장도 대법원장이 하는 등 대법원의 들러리 조직이자 옥상옥에 불과하여 국민들과 시민단체 및 언론으로부터 비판받고 있고, 판사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률적 근거를 뒤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15개 조금 더 되는 학술단체가 있는데 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거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법관들이 유독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많이 추천·임명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합당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면 사법 신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해체를 하든지 해산 선언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주문이 있었다. 전직 법관들이 청와대 법무비서관·법제처장으로 이직하여 현직 후배 법관들의 비판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도 코드 인사로 일관하여 이러한 일에 대한 의사 표명도 없는 등 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질책도 있었다.

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하여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대부분이, 자기네 서클 동아리에 있는 판사들이 다 되게 되면 법조계를 이제 누가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고, 김명수 대법원장 2년 동안 과연 사법부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는 측면에서나 제왕적 대법원장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개혁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점에서조차도 굉장히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성장호 판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행 선고해서 법정 구속하니까 여당에서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었다’, ‘개혁에 맞서려는 적폐 세력의 저항이다’, ‘당랑거 철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급기야 법관 탄핵을 얘기하는데 대법원장이 ‘집권 여당 청와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다’ 이 한마디로 그치는 것이 ‘사법개혁이나’,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민주주의·삼권분립의 나라냐’는 추궁도 있었다. 국가가 청구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기일 한번 열지 않고 전격적으로 국가가 권리를 포기하며 앞으로 불법시위든 집회든 국

17) 이하 내용은 2019년 10월 2일(수)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에서 발췌하였다.

가가 손해를 보더라도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강제조정을 해내는 김명수 대법원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고, 전자 법정 입찰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이 모 언론인터뷰에서 전산장비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상급 책임자인 전산정보국장이나 판사인 심의관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2019년 10월 21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¹⁸⁾에서 대법원에서 전교조 범외노조 사건을 오래 심리 중에 있어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고 있고, 대법원장 취임 2년 동안 여러 가지 개혁책을 추진했는데 성과가 상당히 미흡하며, 법과 제도에 의하지 않은 변칙적이고 졸속적인 방식의 대법원규칙 등 이런 내부 규정 개편으로 추진하는 개혁은 정당성 논란을 낳거나 흐지부지될 수 있고, 정작 법률에 의한 정당한 개혁을 회피하는 것은 명분 쌓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18) 이하 내용은 2019년 10월 21일(월)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에서 발췌하였다.

취임 3년에 보여준 편향성과 사법부 후퇴

2020년 10월 7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¹⁹⁾에서 대법원장의 리더십 부재 등으로 김명수 코트의 반이 지났는데 개혁에 대한 성적표가 11.7%, 32개 항목 중에서 단 4개의 실천에 그쳐 극히 저조하고, 법관 신청 사유를 보면 판사는 ‘재판·선고 날짜, 사건 결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눈치 안 보고 칼퇴근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에 이루어진 사법개혁의 결과라는 질책이 있었으며, 대법원이 선거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아서 스스로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8년 6월 15일 아무런 대비도, 어떤 지침도 없이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협조 발언을 하여 무방비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무리한 수사·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졌고, 사법행정권은 거의 마비가 됐으며, 법원의 신뢰가 깨짐과 동시에 재판을 제대로, 재판에 대해서 또 충실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 협조 발언 이후 김경수 지사를 구속시킨 성장호 판사를 기소했지만 무죄 났음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흔들어 대는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겠다’고 해놓고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사법부 개혁을 막고 있는 핵심이라는 추궁도 있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11명의 대법관이 임명됐는데, 그중에 여섯 명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소위 우국민 인사이고, 진보 성향 법관까지 포함하면 모두 7명이 되며, 바로 이런 것이 대법원의 중립성·법원의 신뢰성에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결국은 코드 인사가 정치적이나 이념성 있는 사건 그리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건에서 코드 판결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 2월 인사에서 2년이 된 법원장이 열세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열두 명 다 고등법원 등에 복귀를 하였음에도 유독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인 민중기 중앙지방법원장만 지금 3년째 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어 유례가 없는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과거 김병로 대법원장이 엄중히 대응하신 결과 현재 사법부 독립의 근간이 됐는데, 지금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여당과 어떤 지지 세력에 의한 사법부 공격이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입을 다물고 있다는 질책도 있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주역은 우리법연구회와 국

19) 이하 내용은 2020년 10월 7일(수)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에서 발췌하였다.

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냈다고 하여 전체 판사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코드화를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주문도 있었다.

2020년 10월 26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²⁰⁾에서 내년에 있을 대법관 인사에서 인사의 중립성과 가치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법원장들이 행정권 남용 얘기가 나올까 봐 일을 제대로 안 하는 판사한테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상황에서 판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서 재판에 들어가는 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법원의 책임자로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되며, 대법원의 장기 미제에 대한 공지와 통지 등과 같은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법원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를 위반해 온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해달라는 지적이 있었다.

20) 이하 내용은 2020년 10월 26일(월)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에서 발췌하였다.

8. 사퇴 촉구와 고발 빗발치다

시민사회의 의견과 주장을 대변하는 자발적 조직인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감시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수장으로서 그 어느 고위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 등 도덕성 상실, 사법부 수호 의지 결여, 사법부 파괴 행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위법 혐의, 이념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역대 어느 대법원장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미증유의 비판과 퇴진 요구를 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반헌법적 법치 훼손 행태를 이유로 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비판과 준엄한 사퇴요구는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고, 더군다나 도덕적 비판을 넘어 위법 문제로 고발되었다면 사법부의 위상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대법원장이 취하여야 할 국민에 대한 기본자세이자 도리이다.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근간 훼손으로 사퇴 요구 받아

2018년 11월 2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신뢰와 권위의 추락을 거듭하면서 급기야는 검찰수사나 국회탄핵을 방편으로 사법부 독립을 찾겠다는 황당한 처사로 국민적 조롱을 받고, 심지어 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테러까지 당하게 된 사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김 대법원장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블랙리스트 유무 조사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는 발견됐으나 형사범죄를 구성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조사결과가 미진하다는 구실로 소위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관해 법관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고, 재판경험이 많은 대법관이나 법원장·고등부장 판사 등이 수사요청에 반대했음에도 특정 성향의 법관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법관대표회의 등의 기류에만 편승해 사실상 검찰수사를 불러들였으며, 이러한 경위로 지난 6월 개시된 검찰수사가 계속되어 검찰은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하여 전무후무한 조사를 하고도 ‘재판거래’ 사례를 찾지 못하자 다시 ‘사법농단’ 수사라는 명분하에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 전반에 걸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였고, …… (중략) …… 최근에는 법관대표회의가 이 사태에 연루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현 정부와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렇게까지 난도질하고 자해하는 의도나 목적이 무엇일까에 주목한다. 그 의도나 목적은 필시, 현 정권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은 과거의 판결들을 흠집 내어 무력화시키고 이에 관련한 법관들을 퇴출시켜 다시는 그러한 판결이 나오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법부의 이념판을 현 정권 이념방향으로 바꾸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을 것이라 본다”면서 “그렇다면 김 대법원장은 현 정권과 그 배경 세력이 의도하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법부 판결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 이번 사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니 이러한 대법원장의 행보는 ‘신 사법농단’이라 부르기에는 족하다. 아울러 이는 곧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헌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작 탄핵사유는 법관대표회의가 지목하는 그 법관들이 아니라 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헌법위반 행위인 ‘신 사법농단’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천명했다.

원로 법조인 200명, “법원이 정권 시녀가 되고 있다”고 개탄

2018년 12월 11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검사장·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사 200명은 긴급성명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새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에 스스로를 투신하여 사법부의 정치화, 정권의 시녀화를 기도하여 사법부 독립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도는 현 정권과 그 배경 세력이 의도하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법부 판결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반헌법적인 ‘사법부 파괴’ 행태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의 이와 같은 ‘사법부 파괴’ 행태는 취임하자마자 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속칭 블랙리스트를 찾는다면 무리하게 조사에 착수했다가 실패하고도 사법행정권 남용을 조사하는 특별조사단까지 운영했으나 형사 범죄로 인정할 만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만 고조시킨 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일반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커녕 대통령이 법원행사에 나와 사법농단 의혹규명을 바라는 질책을 하자 부하처럼 복명하는 모습을 보인 점,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경험 많은 법관들의 충언에는 귀를 닫은 채 이른바 재판거래를 스스로 기정사실화하여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부추긴 점, 다시 급조한 법관 대표회의 일부 특정 성향 판사들을 유도하여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사법부 내부에 개입시켜 마음껏 유린하도록 한 점, 결국 내부에서조차 대표성 논란을 빚고 있는 법관대표회의를 이용하여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고유권능에 속하는 법관탄핵을 동료들인 일부 소장판사가 촉발하도록 방조하고 법원을 미증유의 내홍에 빠뜨린 점 등만 보더라도 역연하다 할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하는 위와 같은 김 대법원장의 반헌법적 법치파괴 행태는 이미 오래 전 탄핵사유에 상당한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행태가 당장 중단되지 않는다면 나라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현실화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우려하면서 “사법부와 나라를 아끼는 충정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파괴’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9년 2월 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없다면 마땅히 사퇴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여론 조작 판결에 대해 ‘탄핵을 부정(否定)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

도’라며 법관 탄핵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정치권 등의 이런 도를 넘는 언동들이야말로 비교할 데가 없는 모욕적인 막말일 뿐 아니라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박이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이고, 사법부의 궤멸도 개의치 않겠다는 협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난리판에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하다가 오늘 아침 출근 길에 기자들 질문에 마지못한 듯이 ‘판결 비판은 바람직하지만 법관 비난은 부적절하다’고 간단히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사에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현 사태뿐만 아니라 앞서 지난해 여당이 탄핵 대상 판사들을 실명으로 거론할 때나, 여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김 대법원장의 이러한 침묵 내지 방관적인 태도는 특정 성향의 정치권과 외부단체가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법치(法治)의 파괴행위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하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치권력과 여론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조속한 사퇴만이 유일한 해답이다”고 천명했다.

김명수의 거짓말이 사법부의 국민신뢰 무너뜨려

2021년 2월 10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385인은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의 보루인 사법부의 존립 기반은 국민의 신뢰이다. 국민이 사법부가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믿을 수 있어야 사법부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삼권분립 민주주의가 살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그간 보인 언행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훼손하고 사법부의 존립기반을 근본에서 무너뜨렸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누구보다도 앞장서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며 직권을 남용하여 임성근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그의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에 대한 정치적 탄핵소추를 초래했다. 더 나아가 거짓 해명이 담긴 대법원 명의의 답변서를 국회에 송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인권을 침해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간단한 유감 표시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통의 판사들과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어야 할 거짓말쟁이 정치 판사로 각인되어 대법원장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온통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공관에 아들부부 함께 살다 ‘혈세 낭비’ 뭇매 맞아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인 전주지법 판사의 부부가 서울 강남에 있는 최소 10억 원대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대법원장 공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적절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9년 4월 23일 성명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관을 활용해 아들의 재산증식을 돕고 공금을 이용해 공관에 손주들의 놀이시설까지 설치했다. 공적 용도로 사용해야 할 공관을 사익을 위해 사용했고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며 “명백히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이고 법관윤리강령상 청렴성에 반하는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또 “며느리가 한진 사내변호사임에도 공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은 한진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이다”고 지적하면서 “대법원장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다시 한 번 땅바닥에 떨어졌다. 김의겸 전 대변인의 판사 재테크도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번 행태는 사법부의 수장에 의해 벌어졌다는 점에서 그 차원을 달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대임을 맡을 자격이 없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즉각 물러나기 바란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공관 리모델링에 예산 무단 사용 구설수까지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7000만원의 예산이 무단으로 이용·전용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9년 11월 6일 성명을 내고 “각지의 수많은 법관들이 불편한 거주 공간에서 말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첫 번째 법관이라 할 대법원장이 더 넓은 공관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재판과 관련된 재원을 유용해가면서 수리며 치장을 한 행태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공사를 막론하고 법관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신은 물론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신뢰에 보탬이 되어야 할 위치임에도 이를 망각하였는지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원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들게 하는 여러 판결들로 인해 인권 및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에는 심각한 물음표들이 던져졌다. 취임 이후 이러한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현 대법원장이 자신의 공관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까지 전용하여 호화롭게 꾸몄다면 어떤 국민들이, 어떤 법관들이 믿고 따르겠나. 지금이라도 대법원장은 공관관련 예산전용의 위법을 낱알이 국민에게 밝히고 사과해야 하며 관련자들이 있다면 엄중히 문책하여야 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쇼에서 드러난 거짓말에 사퇴 요구 봇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소추를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 공개로 거짓말을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정치권·법원 내부는 물론 시민사회로부터 사퇴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2021년 2월 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발표하고 “여당 국회의원들 161명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이번 달로 자동 퇴임이 예정된 데다 탄핵의 기본적 사유도, 여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주장 외에 아무런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전무하

다고 보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로서 사법부에 던지는 함의는 막대하다.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은 그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고 본다. 이런 지경에도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 없다. 자신이 취임한 직후 실재하지도 않는 이른바 사법농단을 구실로 판사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사실상 요청했던 것이 오늘 이 비극적 사태의 단초였다는 자각 때문일 것이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지난달 사법부 수호를 위해 즉각 단호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 바 있다. 다시 준엄하게 묻는다. 이렇고도 사법부의 수장 자리에 계속 머물고자 하나”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2021년 2월 4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헌법정신의 핵심인 삼권분립에 입각해 정치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 일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일선 판사의 위법·부당한 탄핵에 동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동이다”고 비판하고,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와 특정 이념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 판사는 판사가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되어 법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어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시민단체 비상시국연대도 2021년 2월 4일 성명서를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건강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을 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임 부장판사 녹취록에 의해 김명수의 말이 새빨간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비판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사법신뢰는 김명수 한 사람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거짓말쟁이 김 대법원장이 단 1초라도 법복을 입고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7일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법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정의의 최후의 보루다”고 주지하면서 “지난 4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원을 이념적 성향을 함께 하는 일부 그룹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2021년 2월 8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 5. 25.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수차례 언급하였는데, 그 발언 시기와 상황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입시 비리,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 조작 공모 의혹 사건 등을 맡은 법관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환기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를 반려할 여하한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일선 법관이 건강의 악화 등으로 제출한 사표를 탄핵이 거론되고 있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려함으로써 형법상 명백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고, 그로부터 8개월 후 실제로 탄핵으로 이어져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집권당과의 탄핵 거래를 하였다는 공분을 사고 있다. 그 뿐 아니라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자 즉각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불과 몇 시간 후에 밝혀질 거짓말을 하였다”면서 “이미 대법원장 김명수는 정치적·도덕적 위증을 하였고, 법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으며, 헌법에 따라 전체 국민의 봉사자가 되어야 할 직업 공무원의 최소한의 기준마저 스스로 팽개쳐 탄핵된 것이다.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해서 탄핵되지 않았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위는 삼권분립의 한 기둥인 사법부라는 기둥을 송두리째 흔들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사법에 대한 불신을 자아내어 민주 공화정의 근간을 흔든 반역에 해당한다”며, “묵묵히 법관의 양심을 쫓아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도자적인 자세로 사는 대다수 법관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혼백이 떠난 그 누추한 껍데기만이라도 수습하여 자리에서 내려 오기 바란다”고 김 대법원장 퇴진을 주문했다.

“대법원장의 거짓말 모든 국민과 법조인들에게 큰 충격”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도 2021년 2월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2월 말 퇴임을 앞두고 국회에서 탄핵 의결된 부장판사가 작년 2차례에 걸쳐 사표 제출하고 면담했는데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수리하지 않은 사실이 그 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드러났다. 대법원장이 언론을 통해 그 당시 탄핵을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한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말았다. 무엇보다 작년 5월은 4월 총선 직후 21대 국회 출범 전으로 탄핵을 언급했다는 점이 이해가 안 된다. 또 대법원장이 관련 부장판사를 이미 재판 개입 등으로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는 점은 법관 탄핵의 요건인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책했다. 이어 “더욱이 금번 법관 정기인사에서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 제1순위 법원장 임용대상 판사에게 사표를 종용해 결국 사직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이 속했던 연구회에 소속된 법관들은 우대해 승진시키고 반대로 다른 법관들은 홀대하는 대법원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모든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형법상 직권남용(유기), 권리행사방해 또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며, “무엇보다 김 대법원장의 언행을 보면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고 중심 없이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만 보인다.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또한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협회장 8명은 2021년 2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4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법원장은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국회에 보낸 바 있다”고 지적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다”고 천명했다.

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고발 당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021년 2월 4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명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 활빈단은 2021년 2월 5일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위헌적 행동을 했으며 탄핵 관련 발언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국회의원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같은 날 자유대한호국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기류에 보조를 맞추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았으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021년 2월 7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직업선택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양심의 자유·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고, 2021년 2월 9일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보자 시절 현직 판사인 임 부장판사들에게 ‘야당 의원을 접촉해서 인준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탁하라’고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것에 해당하며, 위법한 로비 지시는 제3자인 임 부장판사 등을 통해 법령을 위반해 국회의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이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2021년 2월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해 사표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 탄핵 사태를 초래했고, 국회의 질의에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위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고,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대법원 명의 허위 문서를 법원공무원이 작성하게 해 문서를 회신했다는 사유를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붙임자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 전문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신 사법농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우리 한반도의 변호사 일동은, 이 나라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신뢰와 권위의 추락을 거듭하면서, 급기야는 검찰수사나 국회탄핵을 방편으로 사법부 독립을 찾겠다는 황당한 처사로 국민적 조롱을 받고, 심지어 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테러까지 당하게 된 사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블랙리스트 유무 조사부터 시작하여 블랙리스트가 발견되지 아니하자 그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지시하였다. 그 조사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는 발견되었으나 형사범죄를 구성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김 대법원장은 조사결과가 미진하다는 구실로 소위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의 필요성에 관해 법관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였다. 이에 재판경험이 많은 대법관이나 법원장, 고등부장 판사 등이 수사요청에 반대했음에도, 특정 성향의 법관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법관대표회의 등의 기류에만 편승하여 ‘검찰이 수사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검찰수사를 불러들였다.

이러한 경위로 지난 6월 개시된 검찰수사가 계속되어 검찰은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하여 전무후무한 조사를 하고도 ‘재판거래’ 사례를 찾지 못하자, 다시 ‘사법농단’ 수사라는 명분하에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 전반에 걸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였고, 이러한 수사 확대를 대법원장은 방관하고 묵인하고 있다. 검찰은 수십 명의 법관들을 소환 조사하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혐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왜곡된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사법부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고 법관들이 받고 있는 치욕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형사범죄가 될 수도 없는 사실로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결과 영장이 대거 기각되자 친위언론과 집권 여당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비등해졌고, 대법원장은 이에 대하여 한 마디 해명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이 지난 9월 13일 사법부 70주년 법원 행사에 나와 사법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질

책하자 대법원장은 즉석에서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굴욕적으로 화답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고 영장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을 압박하였다. 이로써 이번 사태가 대통령의 뜻을 대법원장이 실행하고 있는 것임을 짐작케 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앞서 본 법관대표회의가 이 사태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여기서 탄핵 대상이 된 법관들은 모두 행정처에서 상급자의 지휘를 받는 중 하위 실무자들로써 동료 법관들이다. 아직 수사조차 종결되지 않았고 범죄로 구성될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동료 법관들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도대체 법복을 입고 할 수 있는 일인지 참담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그 날 저녁 법관대표회의 대표들을 만찬에 초대하여 그들을 질책하기는커녕 오히려 격려하였고, 집권 여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탄핵절차에 착수하겠다고면서 대상자 명단까지 흘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현 정부와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렇게까지 난도질하고 자해하는 의도나 목적이 무엇일까에 주목한다.

그 의도나 목적은 필시, 현 정권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은 과거의 판결들을 흠집 내어 무력화시키고 이에 관여한 법관들을 퇴출시켜, 다시는 그러한 판결이 나오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법부의 이념판을 현 정권 이념방향으로 바꾸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을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김 대법원장은 현 정권과 그 배경 세력이 의도하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법부 판결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 이번 사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니 이러한 대법원장의 행보는 ‘신 사법농단’이라 부르기에는 족하다. 아울러 이는 곧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헌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작 탄핵사유는 법관대표회의가 지목하는 그 법관들이 아니라 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헌법위반 행위인 ‘신 사법농단’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2018. 11. 29.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인권위원장 이재원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200인 변호사들의 긴급선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파괴’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기관으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사법부의 생명은 이를 위하여 국민의 신뢰 하에 그 독립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새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에 스스로를 투신하여 사법부의 정치화, 정권의 시녀화를 기도하여 사법부 독립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급기야 김 대법원장 자신이 출근길에 화염병 테러까지 당하는 사태를 자초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현 정권과 그 배경 세력이 의도하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법부 판결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반헌법적인 ‘사법부 파괴’ 행태로 보기에 충분하다.

김 대법원장의 이와 같은 ‘사법부 파괴’ 행태는 취임하자마자 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속칭 블랙리스트를 찾는다면 무리하게 조사에 착수했다가 실패하고도 사법행정권 남용을 조사하는 특별조사단까지 운영했으나 형사 범죄로 인정할 만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만 고조시킨 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일반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 커녕 대통령이 법원행사에 나와 사법농단 의혹규명을 바라는 질책을 하자 부하처럼 복명하는 모습을 보인 점,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경험 많은 법관들의 충언에는 귀를 닫은 채 이른바 재판거래를 스스로 기정사실화하여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부추긴 점, 다시 급조한 법관대표회의 일부 특정 성향 판사들을 유도하여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사법부 내부에 개입시켜 마음껏 유린하도록 한 점, 결국 내부에서조차 대표성 논란을 빚고 있는 법관대표회의를 이용하여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고유권능에 속하는 법관탄핵을 동료들인 일부 소장판사가 촉발하도록 방조하고 법원을 미증유의 내홍에 빠뜨린 점 등만 보더라도 역연하다 할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하는 위와 같은 김 대법원장의 반헌법적 법치파괴 행태는 이미 오래 전 탄핵사유에 상당한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행태가 당장 중단되지 않는다면 나라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현실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사법부와 나라를 아끼는 충정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파괴’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2. 11.

사법부 신뢰회복을 바라는 200인 변호사들 일동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 전문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없다면 마땅히 사퇴해야

1. 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김경수 여론 조작 판결에 대해 "탄핵을 부정(否定)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라며 법관 탄핵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도 했다.
2. 민주당은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조직도 만들었다. 그 위원장이라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 판사들도 절대다수가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이라 걱정이다"라고까지 했다. 나아가 일부 변호사단체(민변)가 참가한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대응 시국회의'는 이날 기존 6명에 더해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성장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3. 정치권이나 민변 등의 이런 도를 넘는 언동들이야말로 비교할 데가 없는 모욕적인 막말일 뿐 아니라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박이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고, 사법부의 궤멸도 개의치 않겠다는 협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난리판에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하다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 질문에 마지못한 듯이 "판결 비판은 바람직하지만 법관 비난은 부적절하다"고 간단히 답변했다.
4.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사에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현 사태뿐만 아니라 앞서 지난해 여당이 탄핵 대상 판사들을 실명으로 거론할 때나, 여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5. 김 대법원장의 이러한 침묵 내지 방관적인 태도는 특정성향의 정치권과 외부단체가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법치(法治)의 파괴행위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치권력과 여론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조속한 사퇴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2019. 2. 1.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 전문

관사 재테크나 하려면 대법원장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오늘 자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남 고가아파트를 분양받은 아들을 공관에 입주시키고 손자들을 위해 공관에 미니 축구골대, 목조 그네, 모래사장을 설치했다고 한다. 또한 함께 입주한 며느리는 2015년부터 한진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 사건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이며 그 밖에 다수의 한진 사주 일가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부패방지법 및 법관윤리강령 위반이다.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관윤리강령 제3조 제1항은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관을 활용해 아들의 재산증식을 돕고 공금을 이용해 공관에 손주들의 놀이시설까지 설치했다. 공적 용도로 사용해야 할 공관을 사익을 위해 사용했고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명백히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이며 법관윤리강령상 청렴성에 반하는 행동이다.

또한 며느리가 한진 사내변호사임에도 공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은 한진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이다. 법관윤리강령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장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다시 한 번 땅바닥에 떨어졌다.

김의겸 전 대변인의 관사 재테크도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번 행태는 사법부의 수장에 의해 벌어졌다는 점에서 그 차원을 달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대임을 맡을 자격이 없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즉각 물러나기 바란다.

2019. 4. 23.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현, 채명성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 전문

불법적인 공관수리에 대하여 대법원장의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한다

1. 우리는 현 대법원장이 자신의 공관 개·보수에 재판개선 예산 등 4억7천여만원을 무단 전용하였다는 보도에 놀람을 금치 못한다. 당초 국회는 201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관 개·보수사업의 예산 9억9천만원을 확정하였으나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한 뒤, 국회가 의결한 예산보다 6억7천만원 더 많은 16억7천만원을 재배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늘어난 공사비용을 충당하느라, 부족분 중 4억7천여만원은 일반 국민을 위한 재판제도나 법원시설 개선 예산을 무단으로 끌어다 썼다는 것이다.
2. 각지의 수많은 법관들이 불편한 거주 공간에서 말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첫 번째 법관이라 할 대법원장이 더 넓은 공관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재판과 관련된 재원을 유용해가면서 수리며 치장을 한 행태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의 공관은 대통령, 총리, 외교부장관 등 대외적으로 사절을 맞이하여 국가나 구성원들의 체면이며 위신을 세워야 할 필요 공간이 아닐뿐더러, 각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하는 법관들의 회집 공간도 아니다.
3. 나라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날로 핍박해 가고 있는 지금, 대법원 장직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솔선하여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하여야 할 때이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공사를 막론하고 법관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신은 물론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신뢰에 보탬이 되어야 할 위치임에도 이를 망각하였는지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성인 자식을 공관에 들여 살게 하는 잘못을 저질러 이미 국민들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았음에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삼가지 못했는지 또 다시 금쪽같은 국가예산이 공관 치장에 위법하게 유용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4. 대법원장이란 지위는 권력에 도취하여 국민에게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최근 법원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들게 하는 여러 판결들로 인해 인권 및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에는 심각한 물음표들이 던져졌다. 취임 이후 이러한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현 대법원장이 자신의 공관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까지 전용하여 호화롭게 꾸몄다면 어떤 국민들이, 어떤 법관들이 믿고 따르겠나. 지금이라도 대법원장은 공관관련 예산전용의 위법을 낱알이 국민에게 밝히고 사과해야 하며 관련자들이 있다면 엄중히 문책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속 행동이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9. 11. 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현, 채명성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 전문

김 대법원장, 이려고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할 수 있나

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한 번 농락과 치욕을 당한 날이었다.

여당 국회의원들 161명이 어제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 소추를 발의했기 때문이다. 가결 정족수를 훨씬 넘는 수가 발의했으니 통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탄핵소추 발의는 당사자 법관이 이번 달로 자동 퇴임이 예정된 데다 탄핵의 기본적 사유도, 여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주장 외에 아무런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한변회원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로서 사법부에 던지는 함의는 막대하다.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은 그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고 본다.

이런 지경에도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말한마디 없다. 자신이 취임한 직후 실재하지도 않는 이른바 사법농단을 구실로 판사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사실상 요청했던 것이 오늘 이 비극적 사태의 단초였다는 자각 때문일 것이다.

우리 한변 회원을 비롯한 1천여명의 변호사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붕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로 이미 2년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지난달 29일 사법부 수호를 위해 즉각 단호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 바 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준엄하게 묻는다. 이려고도 사법부의 수장 자리에 계속 머물고자 하나.

2021. 2. 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태훈, 공익소송지원센터장 석동현

바른사회운동연합 성명서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의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사법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정의의 최후의 보루다.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은 법원이 정치권력 등 어떠한 외부 세력이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정의를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상징이다. 검찰 수사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며 더 이상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커져갔고 이를 실현해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의 역사적 책임과 사명은 남다르다.

지난 4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원을, 이념적 성향을 함께 하는 일부 그룹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다.

임성근 부장판사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 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즉각 사퇴하라.

2021. 2. 7.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

공동대표 이승훈, 공동대표 박종화, 공동대표 김종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성명서 전문

특 까놓고 말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당신이 애용하는 언어를 쓴다. “특 까놓고” 말해 보라. 김명수가 그 자리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를 특 까놓고 답해 보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 5. 25.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수차례 언급하였는데, 그 발언 시기와 상황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입시 비리,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 조작 공모 의혹 사건 등을 맡은 법관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장 김명수의 ‘국민’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그간 보인 행태에 비추어 모든 국민이 아닌 파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과장되거나 기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를 반려할 여하한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일선 법관이 건강의 악화 등으로 제출한 사표를 탄핵이 거론되고 있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려함으로써 형법상 명백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고, 그로부터 8개월 후 실제로 탄핵으로 이어져 대법원장이 앞장 서서 집권당과의 탄핵 거래를 하였다는 공분을 사고 있다.

그 뿐 아니라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자 즉각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불과 몇 시간 후에 밝혀질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이번엔 불완전한 기억 탓으로 돌렸다.

특 까놓고 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런 행동은 위증죄를 범한 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단골로 내놓는 변명 아닌가. 두 번째 해명 역시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통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거짓이다. 위증의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증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숙명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찾아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관, 법정에서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고, 진실을 말하게 하며 거짓에 대하여 준엄하게 꾸짖는 법관은 늘 거룩한 맹세 앞에 서 있는 존재이다. 이런 법관들이 모인 법원의 최고 수뇌로서, 그 역시 대법관으로서 직접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서 판사 김명수가 위증의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두 번의 명백한 거짓말의 책임을 벗을 수 없다.

이미 대법원장 김명수는 정치적, 도덕적 위증을 하였고, 법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으며, 헌법에 따라 전체 국민의 봉사자가 되어야 할 직업 공무원의 최소한의 기준마저 스스로 팽개친 자로서 탄핵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해서 탄핵되지 않았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사상 최초로 집권당에 의하여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가 개별 재판을 둘러싸고 동료 법관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서 사법부의 담벼락에 낙서나 그 위의 벽지를 훼손한 정도라면, 김명수의 행위는 삼권분립의 한 기둥인 사법부라는 기둥을 송두리째 흔들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사법에 대한 불신을 자아내어 민주 공화정의 근간을 흔든 반역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정교모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그대는 더 이상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아닐 뿐 더러 판사의 자격도 없음을 확인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법원장 궐위 상태이다. 김명수는 묵묵히 법관의 양심을 쫓아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도자적인 자세로 사는 대다수 법관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혼백이 떠난 그 누추한 껍데기만이라도 수습하여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 툭 까놓고 말해 보라. 그만하면 출세와 영달도 충분하지 않은가.

2021. 2. 8.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 전문

- 사법개혁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기초해 실행되어야 한다.
- 주권자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대법원장은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이미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2017년 3월, 6월, 12월, 2018년 6월 등) 대법원은 자발적인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따라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임명되어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의지는 주권자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진정한 이유는 바로 현 대법원장 자체에 있는 것이다.

1. 대통령이 유력 후보자들의 고사로 인해 대법관 아닌 지방 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파격적으로 임명한 이유는 [사법개혁]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공식행사에서 오직 <사법권의 독립>만을 절대명제로 강조해 왔다. 이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조차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위해 비판하기도 했다. 또 2019년에는 대법원장 관사에 법조인 아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다. 그들이 강남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자금 마련을 위해 관사에 무상으로 산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또 관사에 개인적 시설물을 설치해 외빈 접대 등 공적 용도의 공관을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2. 그런데 이번 2월 말 퇴임을 앞두고 국회에서 탄핵 의결된 부장판사가 작년 2차례에 걸쳐 사표 제출하고 면담했는데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수리하지 않은 사실이 그 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드러났다. 대법원장이 언론을 통해 그 당시 탄핵을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한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말았다. 무엇보다 작년 5월은 4월 총선 직후 21대 국회 출범 전으로 탄핵을 언급했다는 점이 이해가 안된다. 또 대법원장이 관련 부장판사를 이미 재판 개입 등으로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는 점은 법관 탄핵의 요건인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3. 더욱이 금번 법관 정기인사에서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제1순위 법원장 임용대상 판사에게 사표를 종용해 결국 사직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이

속했던 연구회에 소속된 법관들은 우대해 승진시키고 반대로 다른 법관들은 홀대하는 대법원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모든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형법상 직권남용(유기), 권리행사방해 또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

4. 무엇보다 대법원장의 언행을 보면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고 중심없이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만 보인다.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법개혁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들을 존중하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국민들이 한시적으로 위임한 임기동안 대법원장은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아직도 대법원장을 축으로 한 사법권력으로 주권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 [몬테스키외의 3권분립 이념]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을 독선으로 갈음하여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다. 국민들은 사법부의 독선과 법원우월주의를 타파하길 원한다. 사법행정의 관료화를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형사소송제도]를 확립해 사회적 약자와 여성 또 청소년 보호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오로지 주권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앞장서 나아가고자 한다.

2021년 2월 8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백원기(국립인천대)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 성명서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

사법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은 법관이 정치권력 등 어떠한 외압이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장치이다. 대법원장은 어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이다. 검찰 수사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며 더 이상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커졌고 이를 실현해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의 역사적 책임과 사명은 막중하다.

지난 4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법원장은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국회에 보낸 바 있다.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 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다.

2021. 2. 8.

제3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두현

제3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승서
제37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세중
제3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함정호
제4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정재현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신영무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385인 성명서 전문

삼권분립 무너뜨린 대법원장 사퇴하라

법치주의의 보루인 사법부의 존립 기반은 국민의 신뢰이다. 국민이 사법부가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믿을 수 있어야 사법부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삼권분립 민주주의가 살 수 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간 언행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훼손하고 사법부의 존립기반을 근본에서 무너뜨렸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누구보다도 앞장서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며 직권을 남용하여 임성근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그의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에 대한 정치적 탄핵소추를 초래했다. 더 나아가 거짓 해명이 담긴 대법원 명의의 답변서를 국회에 송부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미 2017년 9월 대법원장 본인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임 판사 등 다수의 판사들을 동원하여 야당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후에 공적 업무자료인 청문회 자료를 파괴했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원칙에 따른 법관 인사가 중요함에도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사건 담당 재판부를 모두 유임시키는가 하면, 직권을 남용하여 어느 판사의 사퇴를 종용함으로써 결국 법복을 벗게 하고 기본권 침해를 자행하였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인권을 침해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간단한 유감 표시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통의 판사들과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어야 할 거짓말쟁이 정치 판사로 각인되어 대법원장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마지막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수오지심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다면 이제라도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온통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에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2. 10.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들 일동

9. 언론에 비친 김명수 대법원장

언론은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잡지 등을 통하여 공동체에서 발생한 사실이나 공동체 관심사와 문제를 구성원에게 알려 여론을 형성한다. 국민 다수의 의견인 여론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자양분이자 동력이고, 모든 공직자는 여론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천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언론으로부터 대법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자질 미달, 거짓말,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상 책무 방기, 판사를 동원한 임명 로비, 코드인사로 대표되는 편파적 법관 인사와 인사권 남용 등 다방면에서 엄중한 비판과 추궁, 나아가 퇴진 요구를 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바라보는 많은 언론의 시각이 국민의 판단과 평가를 대변한다고 볼 때, 이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헌법 원리인 민주주의에 순종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을 대하는 최소한 예의이다.

사법부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킨 김명수 대법원장

2020년 12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초청 간담회를 가졌는데, 언론은 간담회의 형식과 개최 시점, 대통령 발언 내용에 비추어 사법부 수장의 참석이 적절하지 않았고, 대법원장의 간담회 참석이 사법부의 지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020년 12월 23일 ‘尹 판결 직전 文·대법원장 등 돌연 회동, 사법농단 아닌가’ 제하의 사설²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다’면서 ‘그것을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점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만난 시점과 발언 내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이 있었던 날이다. 윤 총장 징계는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 것이며 이에 대한 정지 신청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다. …… (중략) …… 현재에도 윤 총장이 자신에게 정직 2개월을 내린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등이 올라 있다. 현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 징계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윤 총장 관련 사건 모두에 당사자인데 그 당사자가 판결을 내리는 조직의 수장들을 불러모은 것이다. …… (중략) …… 문 대통령 취임 후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을 줄줄이 ‘우리법·국제인권법 연구회’와 민변·진보 진영 출신이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을 청와대로 부른 것은 정권 현안 재판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사법농단이 있다면 이런 것일 것이다”며 비판했다.

문화일보는 2020년 12월 23일 ‘5부 요인 불러 “권력기관 개혁” 정권 하수인 주문 아닌가’ 제하의 사설²²⁾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른바 ‘5부(府) 요인’의 22일 청와대 간담회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한심한 위상, 나아가 민주주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5부 요인이라는 말부터 부적절하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지만, 국내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이다. 따라서 외교 행사

21) 조선일보 2020. 12. 23. A39면

22) 문화일보 2020. 12. 23. 31면

가 아니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과 동격으로서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 따라서 3부 요인이 동격으로 참석하고 필요하면 국무총리가 배석하는 형식이 옳다. 그런데 대통령 아래의 다섯 기관으로 격하되고,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 비서관까지 함께했다고 한다. 발언 내용은 더 문제다. 문 대통령은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다.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그 점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갈등은 검찰개혁을 빌미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등을 의미할 것이다. 나아가 당부의 취지를 짐작하기도 어렵지 않다. 공수처법과 관련, 현재 전원재판부에서 위헌 여부를 심의 중이어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직접 관계자이다. …… (중략) ……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법원은 ‘울산 시장 선거공작 사건’ ‘조국 전 장관 부부 사건’ 등도 재판 중이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 소장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듣고 있었다. 제대로 된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라면, 그런 언급에 대해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 독립성 차원에서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 …… (중략) …… ‘힘을 모아 달라’는 것은 하수인 주문과 다름없다. 현재는 결정 지연만으로 정권을 도울 수 있는데, 그런 조짐이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 농단 의혹보다 훨씬 심각하다. 2018년엔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전원 반대에도 문 대통령 한마디에 내부 자료를 통째로 검찰로 넘겼다. 사법부 독립 의지는 고사하고 이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이외에 文, 5부요인 간담회에 김명수 대법원장 초청 논란(서울신문²³⁾), ‘尹 재판 날’ 대법원장 부른 文… “법원에 영향 의도… 부적절”(세계일보²⁴⁾),尹 판결 앞두고 대법원장 만난 대통령…“오해 살 수 있어”(매일신문²⁵⁾),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심문 기일에 대법원장 등 5부 요인 청와대 초청(경북일보²⁶⁾),尹정직 심문날 김명수 초대 文 ‘권력기관 개혁언급’…법조계 “부적절”(뉴스1²⁷⁾) 등 언론은 대통령의 5부요인 간담회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초청 및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참석이 사법부 위상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했음을 꼬집었다.

23) 서울신문 2020. 12. 23. 4면

24) 세계일보 2020. 12. 23. A5면

25) 매일신문(2020.12.22), <https://news.imaail.com/Politics/2020122214385767064> (검색일: 2021.05.07)

26) 경북일보(2020.12.22),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992> (검색일: 2021.05.07)

27) 뉴스1(2020.12.22), <https://www.news1.kr/articles/?4158448> (검색일: 2021.05.07)

뻔뻔한 거짓말과 법관 탄핵 공모 정황으로 사법부 신뢰 및 헌법상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뒤흔든 김명수 대법원장

언론보도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2020년 5월 나눈 사표 관련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후 김 대법원장은 거짓 해명과 탄핵거래 의혹으로 사퇴 요구가 빗발쳤으나, 버티기로 일관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2월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직접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²⁸⁾ 이에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작년 5월말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면담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었다”며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소추를 이유로 반려했는지를 두고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2021년 2월 4일 임 부장판사가 당시 대법원장 면담 때 녹취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들겠느냐”고 하면서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²⁹⁾ 조선일보는 2021년 2월 5일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보유국, ‘문재인의 나라’ 진면목’ 제하의 사설³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사표를 낸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던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임 판사가 당시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자 도망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판사는 거짓말을 가려내는 사람이다. 그런데 일반 판사도 아닌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다. 해외 토픽에 날 일이다. 거짓말이 밝혀졌는데도 크게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다.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운데 그 거짓말이 이뤄진 과정은 정말 기가 막힌다. 정치꾼이나 사기꾼들이 벌이는 막장 수준의 잡아떼기, 뭉개며 버티기, 말 뒤집기 등을 대법원장이 다 보여줬다. …… (중략) …… 지금 문 정권이 임 판사에 대

28) 조선일보 2021. 2. 3. A1면

29) 조선일보(2021.02.04), [단독] 임성근, 김명수 음성파일 공개 “탄핵하자 설치는데 사표 받으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04/FDLI5VL2SBHV3MNXITDVBPMJR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검색일: 2021.05.07)

30) 조선일보 2021. 2. 5. A31면

한 억지 탄핵으로 일선 판사들을 겁박하는데 대법원장이 후배 판사를 희생양으로 바친다. 자신을 대법원장 시켜준 정권에 보답하려고 사법권 독립을 짓밟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감이다. 한국은 정권의 수족처럼 움직이며 눈치를 보는 거짓말쟁이를 대법원장으로 보유한 나라다. 무도한 짓을 마음대로 하고 들통나도 오히려 고개를 쳐들고 성내는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장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2월 4일 ‘법관 탄핵 공모에 거짓말…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 제하의 사설³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한 언행만으로도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가 4일 공개한 당시 발언 녹취록을 보면 김 대법원장의 해명 역시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관의 중요한 책무가 범죄 혐의자나 소송 당사자들 주장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일임을 고려하면, 하루도 더 대법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 …… (중략) ……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최고법원 수장이 시정잡배 같은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것은 참담한 일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공모(共謀)했다고 할 만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은 사의 표명차 찾아온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등의 언급을 했다. 탄핵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4·15 총선 뒤 여당에서 판사 탄핵이 구체화한 시점이었고, 앞장선 여당 의원들이 김 대법원장과 친분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공모 의혹은 더 짙어진다. 4일 한 시민단체가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2021년 2월 15일 ‘거짓말 대법원장 퇴진만이 법원 정체성 회복하는 길’ 제하의 사설³²⁾에서는 “법원 안팎에서 ‘거짓말 대법원장’이라며 퇴진 압박을 받아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연가(휴가)와 설 연휴를 마치고 15일 출근했다. 기존 행태를 보면 뼈아픈 반성과 책임 인정, 사퇴 등 정상적 품성을 갖춘 사람으로서의 대응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오히려 ‘더 나은 법원을 위해 한번 잘 해보겠다’며 버틴다.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주축인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침묵하고, 여당도 방패가 돼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는 붕괴하고, 후배 법관들의 열패감도 커간다는 점에서 김 대법원장의 버티기는 더 큰 재앙을 예고한다”라고 비판했다.

31) 문화일보 2021. 2. 4. 31면

32) 문화일보 2021. 2. 15. 31면

중앙일보는 2021년 2월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따른 법원 신뢰도 추락도 문제지만, 판사들이 보다 심각하게 여기는 건 그의 발언들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훼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고, 공교롭게도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전날의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 만찬과 당일의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에서 이를 연속으로 문제인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발언의 배경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³³⁾ 이어 2021년 2월 9일 ‘여당, 거짓말 대법원장 언제까지 감쌀 건가’ 제하의 사설³⁴⁾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시민단체가 잇따르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만으로도 보통 사람은 큰 충격과 자괴감에 빠진다. 이쯤 되면 알아서 사퇴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다. 그런데 버티기에 들어간 김 대법원장은 크게 부끄러워하는 기색조차 없다. 오래된 일이라며 기억을 핑계대는데 그게 ‘정치꾼’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제대로 된 국회라면 당장 탄핵해야 한다. 그러라고 탄핵 제도가 있다. 하지만 무죄 받은 판사를 허겁지겁 탄핵했던 거대 여당은 이번엔 사실상 위증한 대법원장의 엄호와 비호에 총력전이다. …… (중략) …… 거짓을 가려내 정의를 실현하는 게 법원의 존재 이유고, 대법원장은 사법부와 법관 독립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 그러지 못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판사를 가려내자는 게 법관 탄핵 제도다.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수호하는 사법부에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과 대법원은 이렇고도 국민에게 법을 지키고 판결에 따르라고 말할 수 있겠나.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나”며 힐책했다.

한국일보는 2021년 2월 5일 ‘법관 첫 탄핵 속 대법원장의 낮부끄러운 처신’ 제하의 사설³⁵⁾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 의결 직전인 4일 오전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현직 법관의 대화녹취록 내용은 충격적이다. 4·15총선 이후인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요구가 분출할 때, 김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물리치며 여당 눈치를 보는 장면이 담겼기 때문이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수장이 법관 사표 반려 이유로 구체화하지도 않은 여당의 탄핵 움직임을 들다니 참담하다. 이렇고도 사법 독립을 운운할 수 있나”며 비판했다. 2021년 2월 10일 ‘김명수 사법부 어디로 가는가’ 제하의 [메아리]³⁶⁾에서는 “6년 임기의 절반을 보낸 김명수 대법원

33) 중앙일보 2021. 2. 5. A3면

34) 중앙일보 2021. 2. 9. 30면

35) 한국일보 2021. 2. 5. 27면

36) 한국일보 2021. 2. 10. 30면

장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던 취임사는 최근 임성근 판사와의 대화가 공개되면서 그 진의를 의심받고 있다. …… (중략) …… 임성근 판사 탄핵 과정에서는 대법원장 스스로 법원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대화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탄핵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 없다’는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은 하루만에 거짓말이 됐고, 사법의 품격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화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사표 수리, 제출 같은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는 게 정의의 수호자(Chief Justice)인 대법원장이 할 말인가. 탄핵의 현실성은 부정하면서 ‘(사표를)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말한 대목과 국회 개원 전이라 탄핵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정치권과 거래 혹은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중략) ……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날 생각도 없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2월 5일 ‘거짓말로 불신 자초한 김명수, 대법원장 자격 없다’ 제하의 사설³⁷⁾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이 하루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 (중략) …… 진실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버젓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허무는 중대한 잘못이다. 녹취록에서 사법부 독립과 국회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저열하고 안이한 인식을 확인한 것도 충격이다. …… (중략) ……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 공개 후 대법원을 통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했다며 송구하라는 뜻을 밝혔지만 그렇게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고 정치에 휘둘리는 대법원장’이란 꼬리표를 달고서 사법부를 제대로 이끌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2월 5일 ‘대법원장 권위 무너뜨린 김명수 물러나야’ 제하의 사설³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 과정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4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사표를 내겠다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

37) 국민일보 2021. 2. 5. 27면

38) 서울경제 2021. 2. 5. 35면

를 듣겠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여당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임 판사의 사표를 일부러 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3일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회에도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다가 자신의 해명이 하루 만에 허위로 밝혀지자 이번에는 ‘불분명한 기억’ 탓이라고 둘러댔다. 사법부 수장이 사실 왜곡과 억지 해명으로 국민과 사법부를 우롱한 셈이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거짓말한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중략) ……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권력의 눈치나 보면서 법치 수호의 책무를 버리고 삼권분립을 뒤흔든 것이다. 사법부 수장의 권위를 상실했으니 김 대법원장은 조속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힐난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2월 5일 ‘여당 판사탄핵 동조한 대법원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제하의 사설³⁹⁾에서 “판사 탄핵안 가결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겁박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더구나 충격적인 것은 판사 탄핵 추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동조했다는 사실이다. 정치 외풍을 막고 사법정의를 앞장서야 할 대법원장이 권력 눈치를 보면서 판사 탄핵에 간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권법유착’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면담 도중 사의를 표명하자 ‘나로선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 까놓고 얘기하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4월 총선 승리 후 판사 탄핵을 구체화하자 사표 수리를 못 한다고 한 것이다. 하루 전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는 해명은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김 대법원장은 거짓 해명에 대해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며 사과했지만 군색한 변명일 뿐이다. 더구나 여당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징계가 끝난 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퇴직까지 막은 것은 정치 편향이자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 (중략) …… 철저한 진상조사로 판사 탄핵을 둘러싼 김 대법원장과 여당의 사전 공모 여부를 밝혀야 한다.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여당의 판사 탄핵을 묵인한 것은 사법부 오욕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는 한 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공정성은 유지될 수 없고 국민적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39) 매일경제 2021. 2. 5. A35면

동아일보는 2021년 2월 6일 ‘거짓말로 사법부 망신시키고 기억력 핑계 대는 대법원장’ 제하의 사설⁴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도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 (중략) …… 이번 사태는 임성근 부장판사 개인의 진퇴 문제를 넘어 김 대법원장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 여부, 사법부의 신뢰 문제로 확대됐다. 법관이 지켜야 할 규범을 집약한 대법원의 법관윤리강령 7개 조항 가운데 첫 번째가 사법권 독립 수호, 두 번째가 품위 유지다. 이런 법원의 핵심 가치들을 훼손했는지 여부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기억이 잘못됐다는 해명만 내놔다. …… (중략) ……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는 마당에 판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할 수 있겠나. 김 대법원장 발언의 여파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사법부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국민에게 법관을 믿고 판결을 따르라고 하기는 어렵다. …… (중략) …… 법관은 선출직이 아님에도 개인의 자유권, 재산권 등을 제약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만큼 높은 법적·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며, 대법원장은 그 정점에 서 있다. 법치주의에서 최종적 판단자 역할을 하는 법관의 권위가 무너지면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 대법원장은 사안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그에 걸맞은 반성과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엄중 추궁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2월 6일 ‘김명수 대법원장, 이쯤 되면 스스로 거취 정해야’ 제하의 사설⁴¹⁾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고 있자면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사표를 낸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 듣겠나’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며 사표 수리를 안 해줬다. 여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삼은 모양새다. 그것도 모자라 ‘그런 말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가 녹취록 공개로 하루 만에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여당은 임 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에도 1년간 가만히 있다가 임기가 다 끝나갈 시점에야 탄핵을 관철시켰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공개된 뒤였고 탄핵의 실익도 없었지만 끝내 밀어붙였다. …… (중략) ……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여권 정치인처럼 처신한 김 대법원장이 있다. 여당이 그를 비호하며 탄핵을 밀어붙인 것은

40) 동아일보 2021. 2. 6. A27면

41) 한국경제 2021. 2. 6. A23면

결국 ‘사법부 길들이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법원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기가 막힌다. 정치에 의해 법치가 무시되고 사법부 독립이 뿌리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있자면 참담함마저 느껴진다. 법조계 안팎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 내지 탄핵과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정치권 눈치보기에다 거짓말까지 한 것은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게 본업인 법원의 수장으로서 도덕성과 권위를 스스로 저버린 행태다. 나아가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물론 국격까지 훼손한 것이다. …… (중략) …… 그럼에도 정작 본인은 거취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여론이 수그러들 때까지 버티다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는 듯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칠 수 있을까. 이젠 ‘거짓말해도 된다’를 넘어 ‘거짓말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하나”라며 비판했다. 이어 2021년 2월 15일 ‘부정하고, 밀어붙이고, 뭉개고…설 연휴에 묻힌 일들’ 제하의 사설⁴²⁾에서는 “판사 탄핵을 거둬들고 거짓말까지 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쏟아지는 사퇴 압력을 뭉개며 버티기에 돌입한 듯하다. 경찰은 대법원이 ‘우려 표명’을 하자 청사 앞 규탄 시위조차 제한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2월 8일 ‘김 대법원장, 사법농단 미온 대처부터 해명하라’ 제하의 사설⁴³⁾에서 “국회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 과정에서 나온 거짓 해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중략) …… 김 대법원장은 무엇보다 거짓으로 해명한 데 대해 숨김없이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시민들은 무능한 대법원장은 봐줄지 몰라도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 2월 20일 ‘사법 독립 완수하겠다는 거듭 사과한 김명수 대법원장’ 제하의 사설⁴⁴⁾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듭된 사과는 임 부장판사와의 탄핵 공방이 야기한 사법부 위기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그 위기는 지난해 5월 정치권 탄핵 논의 등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음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한 김 대법원장이 자초했다.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은 ‘정권 눈치보기’라고 비판받고, 보수야당과 법조계에서 사퇴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리더십도 큰 상처를 입었다. …… (중략) …… 김 대법원장 스스로 무너뜨린 리더십과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법 독립과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2) 한국경제 2021. 2. 15. A39면

43) 경향신문 2021. 2. 8. A27면

44) 경향신문 2021. 2. 20. A23면

머니투데이는 2021년 2월 13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법원장’ 제하의 기사⁴⁵⁾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인사를 단행했는데 바로 ‘코드인사’ 논란에 휩싸였고, 사생활에서도 잡음이 있었는데,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서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와 산 것이 발단이 됐으며, 판사 개인을 향한 공격이 극심했던 지난해에도 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거짓말 논란도 불거졌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사표를 받아달라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요청을 세 번이나 거절하면서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못하지 않느냐”,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댔다가 처음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다 임 부장판사가 녹취를 공개하자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했다”고 말을 바꿨으며, 동시에 이번에 단행한 정기인사를 놓고 코드인사 논란이 재점화됐고, 이에 법원 안팎에서 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론이 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일신문은 2021년 2월 20일 ‘대법원장의 사퇴 거부 장광설’ 제하의 사설⁴⁶⁾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 금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각계에서 터져 나오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의 이날 입장문은 사과 문구가 일부 들어 있었지만 자기 합리화를 늘어놓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데 대해 그는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관련 법 규정상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임 판사 사표 반려 과정에서 그가 거짓말을 한 사실이 녹음 파일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명색이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야 이럴 수는 없다. …… (중략) …… 김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의 완성을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한 것은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어찌 되든 간에 자리만 보전하려 한다는 해석마저 낄게 한다. 많은 국민들은 삼권분립 가치를 훼손하고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휘말렸으며 거짓말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그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원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중략) ……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권의 ‘사법적 호위무사’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진작에 물러났어야 할 대법원장이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는 더 추락할 뿐이다”고 질타했다.

4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915554641642> (검색일: 2021.05.07)

46) 매일신문 2021. 2. 20. 19면

여당의 탄핵소추 추진으로 불거진 사법부 독립 침해의 외면

다수 언론은 여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임성근 부장고법 부장판사의 판결문에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밀어붙인 현직 법관의 탄핵소추로 흔들리는 사법부 독립성을 수호하라고 요구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1월 29일 ‘輿의 판사 탄핵 추진은 권력범죄 코드 판결하라는 겁박’ 제하의 사설⁴⁷⁾에서 “모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 제7조에 의해 보장되지만, 법관의 경우엔 제106조에 의해 다시 한번 보장된다. 법관이 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법치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다. 법관일지라도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면 당연히 탄핵될 수 있지만, 탄핵 이유를 보면 사법부 겁박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 (중략) …… 1심 법원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판결문 작성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판결이다. 임 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사실과, 기소하며 적용한 범죄 혐의에 비춘 유무죄 판단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임 부장은 재임용을 포기하고 2월 퇴임한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없다. 결국, 정권 눈 밖에 난 판사들은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코드 대법관’들이 장악, 이재명·은수미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해 면죄부 판결을 내렸다. 이런 대법원과 달리 일선 법원에선 최근 윤석열 총장 징계 집행정지 인용, 정경심 징역 4년, 원전 자료 조작 공무원 영장,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등 엄정한 판결이 이어졌다. 여당 움직임은 여권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일반 판사들까지 길들이기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2월 1일 ‘임성근 판사 탄핵, 사법부 길들이기 아닌가’ 제하의 사설⁴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과 현재에 진보 성향의 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선 법원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인용, 정경심 유죄 판결 등 여권으로선 곤혹스러운 판결이 잇따랐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에겐 언제든 보복할 수

47) 문화일보 2021. 1. 29. 31면

48) 중앙일보 2021. 2. 1. 30면

있다는 메시지가 돼 사법부를 위축시킬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2월 2일 ‘판사 탄핵 추진, 대법원장 입장은 무엇인가’ 제하의 사설⁴⁹⁾에서는 “판사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중대한 결격 사유가 생겨 재임용에서 탈락하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재임용 심사는 10년마다 이뤄지니 금고 이상 형을 받지는 않았으나 중대한 도덕적 문제가 드러난 판사에게 계속 재판을 맡겨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완적 조치로 마련해 놓은 게 탄핵제도다. 사법부 독립 보장이란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의회의 사법부 통제 수단으로 설계된 게 아니다. 한국 정치 세력이 법원에 불만을 품은 경우는 무수히 많았다. 하지만 일반 법관 탄핵안 발의에까지 이른 적은 없었다. 공격 대상 판사에게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적이 없었고, 의원들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다. 사법부 존중과 삼권분립 확립이 공동체 규범으로 인정됐다. …… (중략) …… 과연 임 부장판사는 탄핵당할 만한 일을 했는가.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답이 다를 수 있다. 무리라는 쪽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저의를 의심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효화 결정,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죄 판결, 정경심 교수 법정구속,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징역형(집행유예) 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판사들을 겁박하려는 것으로 본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임 부장판사 탄핵에 동의하는가. 김 대법원장은 취임 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시무식 때도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 탄핵 시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이 침묵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도 되겠는가. 아니라면 왜 일언반구도 없는가. 이 혼란을 방관하는 사법부 수장을 국민은, 판사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김 대법원장이 자리에 걸맞은 행동으로 존재 의의를 각인시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2021년 2월 19일 게재한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 보는 것, 이게 신 사법농단’ 제하의 언택트 인터뷰⁵⁰⁾에서는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 의결을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원로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과정·절차·사유 등에서 정당성이 전혀 없는 보여주기식 정치행위에 불과하다.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임 부장판사의 판결문에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 유일한 소추 이유다. 그러나 판결문의 이유 설명은 주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논증의 과정일 뿐, 주문이 판결의 핵심이고 결론이다. 판결 이유 설

49) 중앙일보 2021. 2. 2. 30면

50) 중앙일보 2021. 2. 19. A26면

명 중의 한 문구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법리적으로 난센스다. 탄핵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도 적법절차 원리에 어긋난다”고 답한 내용을 전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2월 2일 ‘대법원장, 정치권의 판사 겁박에 입장 밝혀라’ 제하의 사설⁵¹⁾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앞세워 이달 말 퇴임이 예정된 판사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오명을 남길 것이다. …… (중략) …… 여당이 의회에서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사법부 내부에서 ‘법원이 여권에 유리한 판결을 했어도 과연 법관 탄핵을 추진했을까’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김경수 경남지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정권의 주요 인사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여당이 재판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권력으로 사법부를 순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여당의 생각이라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당의 겁박이 판사들의 독립적 판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김 대법원장은 판사 탄핵 시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2월 5일 ‘권력 눈치본 김명수, 취임사선 “사법부 독립 수호”’ 제하의 기사⁵²⁾에서 여당이 추진한 법관 탄핵의 여건을 만들어줘 ‘권력 눈치 보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3년여 전 취임사에선 ‘사법부 독립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고,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여권의 법관 탄핵 움직임에 동조한 정황을 말한 것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 수호’에 대한 헌법적 책무를 가볍게 여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한 전직 법관은 김 대법원장의 ‘법관 탄핵’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하지 말라고 거센 압력이 들어왔어도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은 이를 막아야 하는 입장인데도 오히려 자청해서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는 자세를 취한 것은 법을 따지기 이전에 있을 수 없는 일”라며 “법관 독립 침해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는 김 대법원장 본인의 취임사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고, 김 대법원장이 담낭 절제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하려는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김 대법원장 강조한 ‘법관의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⁵³⁾·한국경제⁵⁴⁾ 등 언론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51) 서울경제 2021. 2. 2. 35면

5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05/105297293/1> (검색일: 2021.05.07)

5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05500095> (검색일: 2021.05.07)

이 가결되자 사법연수원 17기 동기생 140여명이 2021년 2월 5일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최근에 행해진 몇몇 판결들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일까? 우리는 후자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숫자의 우세를 이용하여 무도한 입법행위를 자행하여 왔다. 그들과 견해가 다른 정치세력과 다수의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선출되지 않은 법관은 감히 대들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는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하였다. 자신의 입신을 위한 행동만을 해온 것이다. 그는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하였다.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였다.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임성근 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 임성근 판사의 행위는 탄핵사유에는 현저히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한 주장을 전했다.

매일경제⁵⁵⁾·프레스인⁵⁶⁾ 등 많은 언론은 또 현직 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관료로 임명되고 정치와 가장 먼 영역에 있는 법원에까지 탄핵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이제 이것을 아주 편하게 얼마든지 쓰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렇게 탄핵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은 대통령은 언제든지 탄핵의 칼날을 두려워하며 임기를 마쳐야 하고, 법관들도 탄핵의 공포를 품고 눈치보며 재판과 업무에 임해야 한다”면서 “법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정치만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을 정말 원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한 발언을 보도했다.

54)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2052885i> (검색일: 2021.05.07)

55) 매일경제 2021. 2. 1. 29면

56) 프레스인(2021.02.01), “탄핵 칼로 정권 바뀌니 자주 쓰고 싶다” 현직 부장판사 민주당 비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011345555911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ODKU (검색일: 2021.05.07)

자신의 임명 로비에 동원했던 후배 법관을 탄핵 정치쇼 제물로

수많은 언론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판사를 동원한 로비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문제 삼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TV조선은 2021년 2월 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기에 앞서서, 국회 인준 절차 때 임 부장판사를 국회 로비에 활용했던 정황이 확인됐고,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걸 감안하면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를 시켜서 야당에 이런 청탁을 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⁵⁷⁾

중앙일보는 2021년 2월 8일 ‘임성근 탄핵내몬 김명수, 본인 인준때 임성근에 로비시켰다’ 제하의 기사⁵⁸⁾에서 ‘법관 탄핵’ 발언 논란의 중심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때 후배 법관을 총동원해 야당 의원을 상대로 찬성표 로비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고,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 인준안 통과 여부는 2017년 9월 21일 표결 처리 직전까지도 촉각이 쏠렸으며,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인준안 표결 직전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를 포함해 법관을 찬성표 로비에 활용한 걸 두고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2월 9일 ‘김명수팀, 판사동원해 국회 인준 로비...이후 자료 파괴했다’ 제하의 기사⁵⁹⁾에서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직접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를 부탁했고, 대법원장 청문회 준비팀 차원에서도 야당 의원 명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대법원장 청문회 준비팀은 법원행정처 전·현직 판사들에게 각자 출신 지역과 대학이 겹치는 야당 의원들을 할당해 ‘인준안 찬성 로비’를 벌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청문회 준비팀은 2017년 9월 21일 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해당 자료가 저장된 법원행정처 PC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강한 자력으로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일)했다고 복수의 법원 관계자가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법조인들은 “행정처 소속이 아

57) TV조선, [단독] 임성근 측 “김명수 부탁받고 야당에 임명동의 청탁”...‘직권남용’ 논란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6/2021020690023.html (검색일: 2021.05.07)

58) <https://news.joins.com/article/23987879> (검색일: 2021.05.07)

59) 조선일보 2021. 2. 9. A1면

닌 현직 판사에게 ‘정치인 접촉’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공적 업무 자료인 청문회 자료를 마음대로 삭제한 것은 공공 기록물 폐기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법원 관계자들은 “청문회 관련 자료를 디가우징한 건 이때가 처음”이라고 말했으며, 법원 내부에선 “당시 판사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야당 의원이 한둘이 아니다. 모두 김 대법원장의 지시 없인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는 2021년 2월 9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국회 로비 시키고 토사구팽했나’ 제하의 기사⁶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에 이어 국회 로비 의혹에 휩싸였는데, 대법원장 자리에 앉기 위해 판사들을 동원, 국회의원들에게 임명동의를 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이고,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절했다는 임성근 부장판사도 국회 로비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당시 임 부장판사 외에도 대법원 ‘청문회 준비팀’ 차원에서 다수의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고 하고, 대법원장에 임명된 직후 로비 관련 자료는 ‘디가우징’ 방법으로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의원들의 출신·학력 등이 정리된 인사자료도 함께 파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국회 문턱을 넘을 때 임 부장판사 도움을 받아놓고서 임 부장판사가 도움을 청하자 국회의 탄핵을 받으라며 외면한 모양새가 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2월 9일 ‘코드 인사에다 판사 동원 임명 로비…김명수版 사법 농단’ 제하의 사설⁶¹⁾을 통해 “법관의 ‘정치 중립’은 헌법과 법관윤리강령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이른바 ‘사법 농단’으로 재판을 받은 이유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사들을 동원해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에 전임 대법원장 등을 수사 의뢰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판사들에게 야당 의원 로비를 부탁하고 자료를 삭제한 것은 물론 ‘코드 인사’까지 한 것은 전임보다 더한 ‘김명수판(版) 사법 농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나마 사법부 시스템 개선과 외교 문제 고려 등의 공적(公的) 차원의 일탈이었다면, 이번 경우는 사법의 정치화를 키우고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 판사들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하고 사악하기까지 하다. …… (중략) …… 부당한 로비가 없었으면 부결됐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판사 동원 청탁 문제를 더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일보는 2021년 2월 10일 ‘온갖 의혹 쏟아져도 입단은 대법원장, 비호하는

6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911420143516> (검색일: 2021.05.07)

61) 문화일보 2021. 2. 9. 31면

與’ 제하의 사설⁶²⁾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본인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을 위해 일선 판사에게 조직적 로비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대법원장 청문회 준비팀은 야당 의원의 출신 지역·학교를 분석한 ‘접촉 리스트’를 만들고 법원행정처 전·현직 판사에게 야당 의원들을 할당해 찬성 표결 로비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팀은 행정처 부장판사 1명과 평판사 3명으로 구성됐고 이 중 3명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 준비팀은 인준 후 로비 자료가 저장된 행정처 PC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방식으로 완전히 지웠다고 한다. 직권남용죄와 공공기록물 폐기죄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준안은 역대 최저 찬성률(53.7%)로 통과됐다. 로비가 없었다면 부결됐을지도 모른다. 사법부 수장 자격을 부당 취득했다는 비난이 뒤따른다”고 추궁했다.

이외에 “野에 내 임명동의 부탁”…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에 직권남용 의혹(매일신문⁶³⁾), 김명수, 판사들 동원해 ‘로비’…직권남용? 공공기록도 폐기(채널A⁶⁴⁾) 등 많은 언론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의 임명 동의에 판사를 동원한 로비를 두고 직권남용 등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정치권과 헌법재판관 인사거래 의혹에 휩싸여

법률신문은 2018년 9월 3일 ‘법조계, 여당-대법원 헌법재판관 인사 거래 의심’ 제하의 기사⁶⁵⁾에서 지난달 21일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지명 몫 헌법재판관 2명 가운데 1명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이석태(65·14기) 변호사를 지명한 데 이어 여드레 후인 같은 달 29일 더불어 민주당이 김기영(50·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것을 두고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고, 당시 그의 직속상관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며, 김 수석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62) 세계일보 2021. 2. 10. A27면

63) 매일신문(2021.02.06), <https://news.imaeil.com/NewestAll/2021020620232854829> (검색일: 2021.05.07)

64) 채널A(2021.02.09),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8115 (검색일: 2021.05.07)

65)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6168> (검색일: 2021.05.07)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데, 그는 신영철 전 대법관의 이른바 '촛불재판 개입의혹'을 법원 외부에 폭로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고, 전체적인 모양새를 보면 김 대법원장이 김 수석부장판사를, 민주당이 친 여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변호사를 지명·추천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실제로는 교차 지명·추천이 이뤄진 것이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이나 여당이 누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든 그것은 고유권한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부적절해 보인다는 평가가 많고, 김 대법원장과 여당이 교차 인사를 통해 '코드 인사' 내지 '측근 심기' 논란을 피해가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부터 사실상 청와대와 여당이 헌법재판관 자리를 놓고 대법원장과 '인사 거래'를 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⁶⁶⁾·뉴스시스⁶⁷⁾·머니투데이⁶⁸⁾ 등 많은 언론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 헌법재판관후보자,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김기영 헌법재판관후보자를 둘러싸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대법원장과 여당 간 '인사 거래' 의혹이 제기⁶⁹⁾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018년 9월 14일 '[법과 사회] “너는 누구 편이냐”는 대법원장의 인식⁷⁰⁾'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 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다. …… (중략) …… 지난달 21일 김 대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인 이석태 변호사를 지명하고, 여드레 후 여당이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과는 잘 모르는 사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을 때 그의 상관인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였다. 김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으로 김

66) 매일경제(2018.09.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09/570748/> (검색일: 2021.05.07)

67) 뉴스시스(2018.09.10),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910_0000414209&cID=10301&pID=10300 (검색일: 2021.05.07)

68) 머니투데이(2018.09.1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91014088276118> (검색일: 2021.05.07)

69) 2018년 9월 10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석태)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 인사거래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장제원 청문위원은 “이석태 후보자 같은 경우 사실상 민주당 하고 입장을 비슷하게 해 왔고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일면식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석태 후보자를 민주당이 추천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에서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내신 분이니까 그렇다면 정직하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기영 후보자를 추천하고 민주당이 사실상 정치적 행동을 같이해 왔던 이석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정당한데 바뀌서 후보 추천이 됐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가…… 따라서 많은 언론에서는 민주당하고 대법원장하고 인사거래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고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금시초문인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70) 조선일보 2018. 9. 14. A39면

대법원장 최측근이지만 여당 사람들과는 인연이 없다. 정권과 대법원장이 자기 사람 챙기려고 한통속이 돼 '인사 거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원하는 이 변호사를, 청와대 의중을 살핀 여당은 대법원장이 원하는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는 거래를 통해 '측근 심기' 논란을 피해 가려 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여기엔 서로 견제하라는 권력분립의 이상이 담겨 있다. '인사 거래'를 했다면 정권과 대법원장이 야합해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코드 인사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 분명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공정과 정의 원칙을 무시한 법관 인사로 사법부 독립을 훼손

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그 어느 곳보다 공정과 정의가 인사 원칙으로 자리잡아야 할 법관 인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실종시켰다는 혹평과 책망이 쇄도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2월 5일 '거짓말 대법원장의 '추미애식 인사'와 사법 신뢰 파괴' 제하의 사설⁷¹⁾에서 "지난 3일 단행된 법관 인사를 보면 김 대법원장의 후안무치가 자신의 거취 문제를 넘어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릴 지경이다. 전국 최대 법원이자 주요 사건을 재판하는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자리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참여하거나 검찰 수사를 주장한 법관을 배치했다. 성지용 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1차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고, 고연금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조사위원이었다. 두 사람 모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지난 한 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휘둘러 친정권 검사들을 대거 검찰청 요직에 배치하고,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했던 인사와 닮았다. (중략) 대법원장 임기는 대통령보다 긴 6년이다. 판사 탄핵을 거둬고 거짓말까지 해대는 사람의 사법부 신뢰 파괴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고 질타했다. 이어 2021년 2월 19일 '코드 판사에게 위험적 재판 배당, 정치적 판결 주문이다' 제하의 사설⁷²⁾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법

71) 문화일보 2021. 2. 5. 31면

72) 문화일보 2021. 2. 19. 31면

관 인사 이동, 그리고 18일 서울중앙지법의 사무분담(재판부 지정)을 통해 특정 법관에게 특정 사건을 계속 맡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법원의 재판 ‘무작위 배당’은 재판 공정성을 위한 핵심 장치인데, 결과적으로 이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위헌적이다. …… (중략) …… 대법원의 코드화에 이어 최근 법원장 인사에도 그런 경향이 나타났고, 이번에 예외적으로 유임된 두 부장판사 역시 현 정권과 관련된 ‘코드 재판’ 의혹을 받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관 인사를 통해 정치적 판결을 주문한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중앙지법의 사무분담 결과에 따르면, 김미리 부장판사는 3년째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에 남게 됐다. …… (중략) ……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재판을 맡은 판사 3명은 4년째 같은 재판부에 남게 됐다. 윤종섭 부장판사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근무 중이다”고, 2021년 4월 27일 ‘인권법연구 명단으로 거둬들인 司法 장악 실태와 폐해’ 제하의 사설⁷³⁾에서는 “문재인 정권 ‘코드 사법(司法)’의 핵심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460여 명의 명단이 드러나면서 사법 장악 실태도 일부 확인됐다. 전체 회원 명단과 현재 보직을 대조하면 코드화 실상이 예상보다 더욱 고약하다. ‘재판은 정치’를 외치는 이들이 대법원과 대법관 추천 위원회, 주요 재판부, 법관대표자회의 등을 장악한 데 따른 폐해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2월 8일 “금이 부담스러워해” 법원장 유력 판사에 사퇴 종용…법원행정처’의 제하의 기사⁷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하신다.”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중순 법원장 승진 인사 ‘1순위’인 고등법원 A 부장판사에게 전화로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고, 주변 판사들은 지난달 28일 법원 정기 인사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법원을 떠나달라고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며,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됐지만 징계나 기소를 받은 적은 없고 2015년 재판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원행정처 문건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부적절하다며 거절하고 해당 문건도 파쇄했던 A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들에게 “법원행정처를 통해 (김 대법원장의 뜻을) 전달하니 나의 30년 가까운 법관 생활이 부정당한 것 같았다”고 고민을 털어냈으며, 법관 인사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법원행정처에 전화를 걸어 “내 이름을 (퇴직 판사 명단) 한 줄 추가해 달라”며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또 주변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 (판사를) 쳐내겠다는 것인데 김 대법원장

73) 문화일보 2021. 4. 27. 31면

74) 동아일보 2021. 2. 8. A4면

이 너무 정치적이고 추종세력에 얽매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고 했으며, 어느 법관은 “징계나 기소도 없는 판사를 나가라는 취지로 종용한 것은 김 대법원장이 인사에서 자기 사람만 챙기겠다는 뜻 아니겠느냐. 징계 처분이 끝나고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사례”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1년 2월 10일 ‘원칙 잃은 법관 인사로 ‘輿편향’ 비판 자초한 김명수 대법원’ 제하의 사설⁷⁵⁾에서는 “대법원이 최근 실시한 법관 인사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주요 사건이 집중돼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한 재판부에서는 2년, 총 기간은 3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 등 민감한 재판을 맡은 일부 법관이 근무기한을 넘겼는데도 유임되면서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중략) …… 이번 인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담당 재판부는 모두 유임돼 재판장은 6년째, 배석 판사 2명은 각각 4년, 5년째 근무하게 됐다. 조 전 장관 사건 담당 재판장도 유임돼 4년째 근무하게 됐다. 반면 근무기한을 채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담당 재판부 3명은 원칙대로 전원 교체됐다. 서울고법 형사부의 재판장은 통상 2년이 근무기한이지만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은 1년 만에 교체됐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원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태보다 이번 인사가 사법부 독립에 미치는 파장이 더 심각하다는 시각도 있다. …… (중략) …… 인사의 원칙이 무너지면 판사들이 눈치를 살피느라 소신대로 판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사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으면 판결의 공정성도 의심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원칙에 예외를 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잘못된 인사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힐책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2월 9일 ‘김명수 인사농단 논란…판사 콕 찍어 “대법관·법원장 안돼”’ 제하의 기사⁷⁶⁾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이 법원 안팎에서 커지고 있는데,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요직을 맡았던 법관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이유로 사표를 내게 하는가 하면 진상 조사에 참여한 법관은 서울중앙지법 주요 자리에 배치했기 때문이고, “김 대법원장 목표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에서 했듯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로 법원 주류세력의 교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75) 동아일보 2021. 2. 10. A31면

76) <https://news.joins.com/article/23988729> (검색일: 2021.05.07)

세계일보는 2021년 2월 10일 ‘온갖 의혹 쏟아져도 입단은 대법원장, 비호하는 與’ 제하의 사설⁷⁷⁾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로 일관하면서 ‘인사 농단’ 논란과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 등을 이유로 전보 조치되고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은 중용돼온 게 사실이다. 최근 1, 2심 법원에 대한 법관 인사 결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부장판사 2명은 3년 이상의 근무를 희망했는데 전보됐다. 정 교수의 2심 재판부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진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다”고 법관 인사 문제점을 추궁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2월 10일 ‘청문회 로비·법관 사직종용… 김명수 의혹 연달아 불거져’ 제하의 기사⁷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와 관련한 의혹도 연일 불거지고 있는데, 법관들의 커뮤니티인 ‘이판사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보다 더 정치 세력으로부터 독립됐고 인사는 더 공정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성토가 올라와 있고, 김 대법원장이 사적인 자리에서 법관들의 이름을 말해 가며 강하게 비난했다는 말도 사법부 내에 퍼지는 실정이며, 법원 안팎에서 법관의 자격을 거론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고, 대법원 주변에는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은 2021년 2월 19일 ‘[기자의 눈] 인사원칙 무너뜨린 김명수, 비판에 귀막은 법원’ 제하의 기사⁷⁹⁾에서 인사원칙을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중적 행태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오늘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던 새 대법원장의 취임사에 품었을 기대는 사상초유 법관탄핵과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판사 사직종용 등으로 요동치고 있고,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한 사람의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의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살피고 유념하겠다”는 취임사는 근무평정 등 객관적 기준으로 법원장을 보임해 예측 가능하던 인사가 대법원장이 후보들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의 발탁성으로 바뀌면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오히려 강화됐으며, ‘한 법원에서 3년 근무’라는 인사 원칙을 깬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선거개입사건 및 임종현 전 법원

77) 세계일보 2021. 2. 10. A27면

78) 국민일보 2021. 2. 10. 6면

79) <https://www.news1.kr/articles/?4217105> (검색일: 2021.05.07)

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두 부장판사의 이례적 유임결정으로도 도마에 오르고 있고, “국민들은 법관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던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한 취임사는 2019년 김경수 경남지사 실형 선고에 대한 정치권의 불복 움직임, 지난해 8·15 집회 금지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한 법관의 이름을 딴 '박형순금지법' 발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한 탄핵청원 운동 등 사법부 독립에 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침묵을 지키다 뒤늦게서야 원론적인 발언만을 내놔오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기까지 했다가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고 나서야 기억이 불분명했다며 사과했고, 올해 초 A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 직원을 통해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하며 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공염불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2021년 2월 20일 ‘대법원장 사과에도 ‘법관 코드 인사’ 불신 커져’ 제하의 사설⁸⁰⁾에서 “사법농단은 피고의 이익을 침해한 것뿐 아니라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은 해악이 크다. 그런데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와 처신은 그에 못지 않게 사법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가뜰이나 야당 등 일각에서 사법부가 여권에 유리한 판결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터에 그 근거를 제공하는 꼴이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서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의심스러운 법관 인사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2월 20일 ‘법원·검찰 정권보위 인사,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 제하의 사설⁸¹⁾에서 “사법부와 검찰의 ‘코드 인사’가 도를 넘었다. 법원은 정권 재판을 특정 판사들에게 맡기려 하고 있고 법무부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친정권 검찰 간부들을 요직에 배치할 태세다. 법치의 보루여야 할 사법의 양 축이 ‘정권 보위’를 위해 인사를 농단하고 있는 셈이다. …… (중략)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진보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김미리 부장판사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심

80) 한국일보 2021. 2. 20. 23면

81) 매일경제 2021. 2. 20. A27면

리하는 재판부에 유임시켰다. …… (중략) …… 반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장판사 2명과 사법농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장판사는 다른 곳으로 전보됐다. 이러니 ‘김명수 대법원장이 측근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통해 정권 재판을 우리법연구회 후배나 친여 성향 판사에게 맡긴 것’이라는 비난이 나올 만하다. 김 대법원장은 여당이 주도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방조한 당사자다. 그가 19일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상황에서 인사권을 남용해 권력 재판에까지 개입하려 했다면 정말 후안무치한 행태다. …… (중략) …… 최소한의 원칙과 양심마저 저버린 법원 인사는 편파적인 권력 재판으로 이어져 또 다른 국정농단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공정성을 잃은 재판은 야당 지적처럼 공권력의 외형을 빌린 폭력일 뿐이다. 권력에 줄을 섰다는 이유로 득세하면 어느 누가 법치와 정의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으려 하겠나. 전대미문의 신 사법농단을 주도한 ‘김명수 대법원’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질책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2월 20일 “法治의 보루’ 사법부에서 들려오는 끊임없는 잡음들’ 제하의 사설⁸²⁾에서 “‘탄핵거래 의혹’으로 사퇴 요구에 시달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상식과 관행을 무시한 파행인사로 얼룩지고 있다. 최근 일련의 법원 인사에서 ‘친(親)정부 성향’ 법관들이 요직을 독차지한 것이다. 중용된 판사의 상당수는 뚜렷한 이념적 색채로 ‘튀는 판결’을 내린다는 의심을 받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반면 조국·김경수 관련 재판에서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윤석열 직무복귀’를 결정한 소신 판사 등은 대거 좌천되거나 전보됐다. 사법부의 편파 인사는 대법원이 ‘코드 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법원장이 입맛에 맞는 판사에게 핵심 보직을 맡기는 식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 (중략) …… 김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동료 몇몇을 ‘적폐 판사’로 지목하며 사태를 키워낸 법관을 중앙지법원장에 임명했고, 그는 ‘판사 사찰 사태’ 당시 검찰총장을 대놓고 비난한 인물 등을 발탁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가족 비리사건을 맡아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도 ‘중앙지법 3년 근무’ 인사 원칙을 깨고 잔류시켰다. 어제 공개된 중앙지법의 사무분담(재판부 지정) 내용은 ‘방탄 사법부 선언’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노골적이다. 편향성을 의심받아 법관 기피신청까지 접수된 장기잔류 판사들이 정권이 연관된 재판을 그대로 맡는 것으로 확정됐다. 최소한 재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재판부를 변경하고 사건을 무작위로 전산 배당해온 관행을 무시한 결정이다. ‘인사’와 ‘사무 분

82) 한국경제 2021. 2. 20. A23면

담’을 통해 위헌소지가 큰 사실상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졌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힘들다. 선택적 유임과 표적 인사로 사법부의 중립성이 의심받는다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기류도 급속히 확산될 수밖에 없다. 가뜰이나 대법관 14명 중 11명,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뒤 사법부 독립 훼손에 대한 우려가 비등하다. 여기에 법원 인사마저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베네수엘라 헝가리 등에서 진행된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라는 퇴행적 모습이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대법원장이 15일 만에 ‘법관 탄핵’ 관련 거짓말에 대해 사과했지만 법원 안팎의 냉소는 더 커졌다. ‘방탄 검찰’에 이어 ‘방탄 사법부’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이 수치스럽다”고 법관 편파인사의 실상을 힐난했다.

매일신문은 2021년 2월 20일 ‘대법원장의 사퇴 거부 장광설’ 제하의 사설⁸³⁾에서 “최근 발표된 법관 인사에서 법원은 정권 실세들과 관련된 재판에서 봐주기 및 편파 진행 논란을 빚은 법관들을 이례적으로 4~6년째 유임시키고, 여권 인사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전보시켜 논란을 불렀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실소마저 자아내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2021년 4월 27일 “‘재판은 정치’ 외친 인권법, 김명수 大法 요직 34% 장악’ 제하의 기사⁸⁴⁾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연구회 판사들은 대법원의 양대 핵심 기능인 재판과 사법행정 부서에 집중 배치돼 있었고, 대법원 상고심(3심) 사건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대법관에게 올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97명 중 33명(34%)이 이 연구회 소속이었으며,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수는 460여명으로 전체 판사(3214명) 중 14%가량인데,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 ‘인권법 판사’ 비율은 그 2배가 훌쩍 넘었고, 또 법원의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판사(처장 포함) 12명 중 5명(42%)도 이 연구회 소속이었으며, 비슷한 기능의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자문위의 위원 10명 중 4명(40%)도 이 연구회 회원이고, 이 연구회를 주도하는 핵심 판사들은 그간 ‘정치 편향’ 논란의 가운데에 있었으며, 법원의 ‘허리’에 해당하는 전국 지원장 41명 중 10명(24%)도 이 연구회 소속으로 나타났고, 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투표)제로 인해 일선 판사와 자주 접촉하는 지원장은 법원장 후보 1순위”라며 “머지않아 법원장도 인권법 판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했

83) 매일신문 2021. 2. 20. 19면

84) 조선일보 2021. 4. 27. A1면

으며, 한 전직 대법관은 “특정 연구회의 득세는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엔 치명적인 현상”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2021년 5월 5일 ‘사조직이 법원 장악… 사법부의 충격적인 현실’ 제하에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글을 실었는데,⁸⁵⁾ 허영 교수는 이 글에서 “전체 법관(3400명)의 14%(460명)에 불과한 특정 이념 집단 소속 법관이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법권의 독립과는 명백히 배치하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할 법관이 헌법과 법률보다는 소속 사조직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심판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재판이다. 법관의 법 적용은 일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개인적으로 갖는 정치적 이념이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면 재판은 생명력을 잃는다. 생명력을 잃은 재판은 사법 작용이 아니다”면서 “3권 분립의 나라에서 이 사조직이 지배하는 우리 사법부는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했다. 오히려 정권과 여당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방어 기관으로 변질해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야 말로 법관 탄핵 방조 사건 등 법관 인사행정권을 남용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땐가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바로 김명수 사법부의 개혁이다”고 역설했다.

사법정치화 우려를 급증시킨 김명수 대법원장

언론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심각해진 사법정치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제기했으나, 소귀에 경 읽기와 같았다.

매일경제는 2020년 7월 20일 ‘[핫이슈] 여권 편향적인 사법의 정치화 우려스럽다⁸⁶⁾’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확정판결을 비롯해 은수미 성남시장의 당선무효형을 뒤집은 판결, 소위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구속영장 발부 등이 잇따르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부가 여권에는 춘풍같은 관대한 처분을 내리면서 현 정권이 개혁 대상으로 낙인찍은 언론과 검찰에 대해선 추상처럼 엄벌에 처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 (중략) … 현 대법원은 진보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

85) 조선일보 2021. 5. 5. A31면

86)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7/738935/> (검색일: 2021.05.07)

코드 사법부'로 불릴 만큼 여권에 우호적인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중략) ……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현직 판사들이 대거 여권으로 직행하면서 사법부가 정치에 예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쏟아졌는데 바야흐로 현실이 된 셈이다. 집권 여당이 입법부까지 장악한 마당에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마저 균형과 중심을 잃고 정권에 치우치면 법치 수호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사법부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을 맴도는 것은 법원이 정치적 외압에 꺾이기보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일선 판사들이 자꾸 정권 눈치를 보거나 여권 지지층에 휘둘리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형해화하고 형평성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은 딸각발이 남산골 선비처럼 올곧은 지조와 의기가 필요한 때이다. 오직 양심과 법률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와 위상도 되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2월 5일 ‘법조계 “사법이 정치화 됐다…명백한 삼권분립 위반” 제하의 기사⁸⁷⁾에서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 이외의 사정으로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탄핵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와 내응(內應·몰래 적과 내통)하는 듯한 발언이 김명수 대법원장 입에서 나왔다는 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다”라고,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서 대법원장은 배운 것도, 그로 인해 바뀐 것도 전혀 없다는 의미”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행정부에 너무 예속됐던 것이 문제고, 지금은 그 상대가 입법부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원로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외풍으로부터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위해 나서야 할 사람”이라며 “대법원장의 자질이 전혀 없다는 걸 자신이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스시는 2021년 2월 5일 ‘김명수 거짓해명·임성근 탄핵소추…“사법 정치화” 우려’ 제하의 기사⁸⁸⁾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가운데, 일련의 과정에서 불거진 ‘거짓 해명’ 파장이 계속될지 관심이 쏠린다면서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등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데일리안은 2021년 2월 7일 ‘[무너진 삼권분립③] ‘사법의 정치화’ 커지는 우려 목소리’ 제하의 기사⁸⁹⁾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

87) 중앙일보 2021. 2. 5. A3면

88) https://www.news1.com/view/?id=NISX20210204_0001330461&cID=10201&pID=10200 (검색일: 2021.05.07)

89) <https://www.dailian.co.kr/news/view/962644> (검색일: 2021.05.07)

핵 소추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권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도 문제지만, 인사권 행사에서 정치적 고려를 한 사실을 자백하면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며, 사법부가 정권 눈치를 보거나 여권 지지층에 휘둘리게 되면 법적 안정성·형평성이 형해화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증폭되고 있고, 김 대법원장의 처신을 두고 사퇴 압박과 책임론도 점차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2월 10일 ‘법관 탄핵 보조기관 된 대법원’ 제하의 [시론]⁹⁰⁾에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최원목 교수는 이 글에서 “지금 국민이 걱정스럽게 목도하고 있는 것은 탄핵을 추진하는 세력이 저지르고 있는 헌정 체제의 아노미 현상이다”, “더 심각한 점은 대법원장 자신이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행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언급하고, “‘적폐 판사’를 한직으로 돌려 사직시키는 것도 모자라 사직하려는 법관을 못 나가게 막고 집권 여당의 정치적 탄핵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게 사법부 수장의 역할이라는 말인가. 임 판사가 녹음까지 하며 대법원장에게 청원한 질병 사직을 막아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 거짓말까지 들통나면서 드러났다.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에 포함된 사직의 권리를 법의 수호자 자신이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반인권적이기도 하다. 법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는 법관은 법치의 적일 뿐이다. 하물며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러할진대 국민들은 이제 일개 법관의 탄핵 결정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대법원이 도대체 뭐에 쓰는 기관인지를 묻고 있다”고 개탄했다.

경향신문⁹¹⁾·문화일보⁹²⁾·세계일보⁹³⁾·조선일보⁹⁴⁾·한국일보⁹⁵⁾·연합뉴스⁹⁶⁾·뉴스

90) 서울경제 2021. 2. 10. 35면

91) 경향신문(2021.02.09), “조롱거리로 전락한 법원의 권위와 신뢰 회복해야”...이균용 대전고법원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91539001&code=620100 (검색일: 2021.05.07)

92) 문화일보(2021.02.16), 법원장들 “권력·여론 등 부당한 영향서 벗어나야 다시 산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1601070530322001> (검색일: 2021.05.07)

93) 세계일보(2021.02.09),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사법정치화 논란... 공정한 태도 가져야”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209514336?OutUrl=naver> (검색일: 2021.05.07)

94) 조선일보(2021.02.09),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취임사 “법원이 조롱거리됐다”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chungcheong/2021/02/09/4F6FLFDNQVAAPKYLLUFKKZOD5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검색일: 2021.05.07)

95) 한국일보(2021.02.09),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법원 조롱거리로 전락...용기 있는 사법부 만들어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917220000926?did=NA> (검색일: 2021.05.07)

197) 등 다수 언론은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이 2021년 2월 9일 취임사에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다”, “국민 정서나 국민 의사를 내세워 어떤 편향된 주장을 실정법에 우선시하려는 위험한 여론몰이가 온 사회를 뒤흔들고 법원을 위협하고 있다”, “정치가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 되는 시점이다”면서 “정치권력이든 내부 간섭이든 부당한 영향에 의연한 자세로 용기 있는 사법부를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보도했다.

매일신문은 2021년 2월 15일 ‘사법의 정치화,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 어물쩍 넘길 일 아니다’ 제하의 사설⁹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여당이) 탄핵하자고 하는데, 사표 수리하면 내가 국회에서 무슨 소리 듣겠느냐’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고 말했다. (중략)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 눈치를 살피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 게다가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판사들을 동원해 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중략) 정권 측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이 짧은 기간에 자리를 옮기고,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한 법관들이 장기간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원칙 없는 인사'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중략) 김 대법원장의 '처세법'과 법관 인사를 보면 '법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김 대법원장 임기 중 '정권 비리' 판결, 재판 지연, 법관 인사를 비롯해 '사법 개혁'이란 명분으로 자행한 사법부 장악 행태를 낱알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년 3월 9일 ‘지금 ‘김명수 사법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제하의 사설⁹⁹⁾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련한 혐의를 받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법원이 '발부' 도장을 찍었다가 지우고 '기각'으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을 놓고 의혹이 일고 있다. (중략)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실수'는 지금 ‘김명수 사법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한다. 김 대법원장은 여당이 판사를 탄핵하려 한다며 사표 수리를 미뤘다. 김 대법원장은 시쳇말로 '알아서 긴' 것인가,

96) 연합뉴스(2021.02.09),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법원 조롱거리로 전락...신뢰 회복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9125900063?input=1195m> (검색일: 2021.05.07)

97) 뉴스1(2021.02.09),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취임 “진영논리 벗어나 더 나은 법원으로”

<https://www.news1.kr/articles/?4208110> (검색일: 2021.05.07)

98) 매일신문 2021. 2. 15. 27면

99) 매일신문 2021. 3. 9. 27면

아니면 여당과 의견 조율을 한 것인가. …… (중략) …… 130여 건의 21대 총선 관련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 소송 중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의 뭉개기도 마찬가지다. 법정 처리 기한(6개월)은 예전에 넘겼다. 대법원 스스로 직무 유기를 걱정한 것인가 아니면 직무 유기를 하라는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 때문인가”라고 엄중히 따졌다.

정치권력 등의 과도한 재판 매도에 사실상 눈감아

언론은 여당 등이 제기한 부당한 법원 판결 비난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미적지근한 태도만 보였다.

문화일보는 2018년 2월 7일 ‘法理·증거 재판 매도는 ‘코드 판결’ 강요나 다름없다’ 제하의 사설¹⁰⁰⁾에서 “재판부에 대한 욕설과 신상털기, 나아가 ‘위협’ 수준에 이르면 심각한 범죄행위가 된다. 법리(法理)와 증거에 따른 독립적인 판결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주의 수호의 책임까지 위임받은 집권 세력이, 그런 ‘사법 공격’을 막아 내긴커녕 앞장선다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허무는 중대 사태다. 지금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정형식 재판장에 대한 공격에 여당 지도부까지 가세했다. …… (중략) …… 집권 세력의 이런 행태는 사법부를 향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코드 판결’을 하라는 강요나 다름없다. 상고심 판결에 대한 부당한 압력도 된다. 정 재판장은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석방 여부’라고 했다. 여론이나 정치·경제 권력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법 상식에도 부합한다. 이처럼 ‘오직 법리와 증거’를 추구하는 역량 있는 판사들이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청와대도 그런 의지를 비치지 않으니 대한민국 법치를 어디로 끌고 갈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2019년 2월 1일 “김경수 재판부’ 무차별 매도하는 與…憲法 유린 멈추라’ 제하의 사설¹⁰¹⁾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담당 재판부를 향한 공격이 비(非)이성을 넘어 헌법(憲法)마저 유린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입법·행정·사법 등 3권을 분립해 상호 견제토록 한 것이 민주주의 국가

100) 문화일보 2018. 2. 7. 39면

101) 문화일보 2019. 2. 1. 39면

의 요체인데 집권 여당에 의해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고, 위중하다. …… (중략) …… 설령 재판에 불만이 있다고 해도 앞으로 2심, 3심이 있는 만큼 반박 증거를 보충해 다투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감정적 표현을 동원해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 건 집권당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정치권의 부당한 사법부 매도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표현이 과도하거나 개개인 법관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재판독립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법관 독립 침해 시도를 온몸으로 막겠다’고 취임 때 밝힌 것과는 온도 차가 크다. 판사가 집권당과 정권 지지 세력의 부당한 공격에 노출된 헌법 유린 사태에 단호하게 맞서지 않으면 정권 눈치 보는 사법부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중앙일보는 2019년 2월 1일 “적폐 판사의 보복”이라는 민주당…재판 불복 선동 멈춰야’ 제하의 사설¹⁰²⁾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한 재판부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민주당은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 (중략) …… 김 지사에 대한 판결 전까지 변호인이나 민주당에서 성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내지 않았다.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연 담당 법관을 적폐로 모는 것은 ‘사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 (중략) ……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치주의 훼손 세력에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취임 때 ‘재판 독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라며 대법원장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 2019년 2월 11일 ‘과도한 여당의 김경수 판결 비판, 사법권 독립 흔든다’ 제하의 [시론]¹⁰³⁾에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리셋 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 위원회 글을 실었는데, 서정욱 변호사는 이 글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 판결에 대한 여당의 비판은 선을 넘었다. 민주주의의 중요 요소이자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권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법보다 권력의 목소리나 광장의 여론이 더 크게 지배하며 빈사 상태에 처한 법치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19년 2월 1일 ‘헌법적 관점에서 본 김경수 지사 판결’ 제하의 [동아광장]¹⁰⁴⁾에 최재경 법무연수원 석좌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최재경 교수는 이 글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놓고 세상이 시끄럽다”면서 “형사재판

102) 중앙일보 2019. 2. 1. 26면

103) 중앙일보 2019. 2. 11. 29면

104) 동아일보 2019. 2. 1. A30면

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잘못 다루면 국가에 혼란을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 정치권이나 주변에서 판결을 부정하고 판사를 공격한다면 사법제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삼권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 요소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것이다”고 경고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할 책임은 1차적으로 대법원에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명백하게 정리해서 밝히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19년 3월 9일 ‘판결 마음에 안든다고 무차별 인신공격, 법치 훼손이다’ 제하의 사설¹⁰⁵⁾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석으로 풀어준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이 위험수위를 넘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거칠게 공격하며 '적폐 판사'로 낙인찍은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 (중략) …… 법원 판결에 대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판결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무차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재판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패악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인터넷 폭력을 제지해야 할 여당은 오히려 '탄핵 법관 리스트' 운운하며 삼권분립 훼손에 앞장서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 (중략) …… 법관은 권력과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사법부 수장이 거센 외풍에 맞서 '재판 독립'을 지켜줘야 한다. 일선 판사들이 소신판결 때문에 인신 린치를 당하지 않도록 대법원장이 지금이라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맞는다”고 질책했다.

서울신문은 2019년 3월 13일 ‘[서울광장] ‘법’보다 주먹, 김경수 구하기¹⁰⁶⁾’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무슨 계산을 어찌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김경수 파동’이다.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 경남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이를 놓고 여야는 또 드잡이를 한다. 도정(道政)을 위해서건, 개인 사유에서건 보석 신청은 김 지사의 자유다. 문제는 하나뿐인 집권당이 어째서 경남지사 한 사람의 전위부대를 이토록 과감하고 맹렬하게 자처하는가 하는 대목이다. 김 지사의 보석 신청 날짜를 맨 먼저 알려 준 것은 경남도청이 아니다. 이해찬 대표다. 1심 유죄 판결이 나자마자 당 지도부는 열일 제쳐 놓고 경남도청으로 내려가 쫓기대회를 해 줬다. 전무후무할 집권당 차원의 판결문 분석 간담회도 보여 줬다. 2심 재판에서 불붙은 김경수 논쟁은 법치의 근간을 바닥까지 짓밟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법률국가에서 일어날 유형의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 …… (중략) …… 앞친

105) 매일경제 2019. 3. 9. A27면

106) 서울신문 2019. 3. 13. 35면

데 덮쳤다. 대법원은 김 지사를 1심에서 유죄 판결한 성장호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성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라는데, ‘국민 판사’들은 다시 해석이 분분하다. 김 지사를 최종 판결까지 도정에서 배제하지 않아야 하는 논리라면 성 판사의 인사 조치도 부당하다는 시중 반박이 기다렸다는 듯 드세다. 이러니 민간의 소소한 재판정들은 어떨겠나. ‘저 판사도 고무줄 판사’ 소리가 예사로 나온다. 법보다 주먹이 한참 가까워졌다.…… (중략) …… 실익 없는 무법천지를 원하는 민심은 없다. 힘 가진 쪽이 제 마음 편하자고 민심을 어지럽히는 것은 오만이다. ‘이게 나라냐’가 ‘이건 나라냐’로 바뀌고 있다”고 직설했다.

민주당 ‘김경수 판결 불복’ 회견, 이성을 잃었다(조선일보¹⁰⁷), ‘김경수 재판불복’ 부메랑, 여권 때리다(한국일보¹⁰⁸), 판사들, ‘판결불복’ 도 넘는 정치공세에 ‘부글부글’(법률신문¹⁰⁹), 與 ‘김경수 판결 비난’ 설명회…대놓고 사법권 무시(뉴데일리¹¹⁰), 김경수 판결한 성장호 판사, 판결 다음 날 ‘신변 보호’ 요청했다(팬앤드마이크¹¹¹), 文 지지선언한 교수 불러 김경수 판결 불복 간담회 연 與(이데일리¹¹²) 등 많은 언론에서 정치권력의 법원 판결 비난에 대한 우려를 쏟아 냈다.

공관에 아들부부 입주하고 호화 리모델링으로 도덕성에 큰 타격

언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부부 공관 입주를 재테크로 묘사하면서 대법원장의 공인 의식을 신랄히 비판했고,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2019년 4월 23일 ‘강남아파트 분양받은 대법원장 아들부부, 공관서 살고 있다는데…’ 제하의 기사¹¹³에서 공관 입주 넉 달 전인 2017년 9월 청약 평균 경쟁률이 168대 1이었던 재건축 예정인 서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인 김모 판사아내 강모 변호사가 2018년 1월

10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9/2019021903200.html (검색일: 2021.05.07)

10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311861381664> (검색일: 2021.05.07)

109)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0971> (검색일: 2021.05.07)

11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2/19/2019021900135.html> (검색일: 2021.05.07)

111)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08> (검색일: 2021.05.07)

11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96726622392160&mediaCodeNo=257&OutLnkChk=Y>
(검색일: 2021.05.07)

113) 조선일보 2019. 4. 23. A12면

전입신고를 하고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와 상주하고 있으며, 김 판사는 근무지가 전주여서 주말에 공관에 온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법원장 공관 유지에는 한 해 2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법조계에선 “김 판사 부부가 이곳에서 사실상 무상(無償)으로 살면서 가진 돈과 대출금을 모두 합쳐 아파트 분양 대금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과적으로 아들 부부의 '재산 증식'을 도운 셈이라고 하며, 또 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2015년부터 한진의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는 한진 오너 일가(一家)와 관련한 사건들이 다수 들어와 있어 며느리 강 변호사의 근무처도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이 2017년 취임했을 때 공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김 대법원장은 주말 등에 공관에 놀러 오는 손주(장녀의 자녀)들을 위해 당시 공관에 그네와 모래사장 등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TV조선은 지은 지 40년 가까이 돼 3부 요인 공관에 걸맞게 고치겠다는 이유로 재작년 9월부터 석달간 16억원을 들여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고, 리모델링 직후인 지난해 초 김 대법원장 아들 내외인 김 모 판사와 강 모 변호사도 공관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근무지가 전주인 김 판사는 주말마다, 며느리인 강 변호사는 아예 공관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다고 보도했다.¹¹⁴⁾ 이어 이들은 재작년 9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내년 4월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부동산 관계자는 “(가장 작은 평수인) 25평 잡으면 한 18억 선 이상 될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고, 분양대금을 수월하게 치르기 위해 이른바 ‘공관 재테크’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하면서 공관 안엔 가로 2m, 세로 3m인 미니 모래사장과 그네의자, 조립식 축구대 등도 설치돼, 대법원장 손주를 위한 놀이터 의혹도 불거졌다고도 전했다.

문화일보는 2019년 4월 23일 “‘아들 부부도 공관살이’ 金대법원장의 公人의식 수준’ 제하의 사설¹¹⁵⁾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인(公人) 의식이나마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 (중략) …… ‘아들 부부의 공관살이’가 위법은 아닐지라도, 공·사(公私)에 대한 분별력과 정직성을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갖추어야 할 대법원장의 의식 수준이 상식 이하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5부 요인의 공관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대표적 ‘국유 재산’이다. …… (중략) ……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공관 거주로 절약한 돈을 아파트 중도금 등으

114) TV조선(2019.04.23), 강남아파트 당첨 받고도…대법원장 아들의 ‘공관 재테크’?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3/2019042390142.html (검색일: 2021.05.07)

115) 문화일보 2019. 4. 23. 31면

로 사용했다면, 김 대법원장이 아들 부부의 재산 증식을 위해 공관살이를 하게 한 셈이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관사에 무료로 살면서 상가에 투자한 ‘관사 재테크’ 혐의로 결국 사퇴한 사실까지 떠올리게 되는 이유다. …… (중략) …… 코드 논란 속에 임명된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지명 다음 날 근무지이던 춘천에서 대법원으로 평소와 달리 버스를 타고 와 ‘청렴 쇼’를 했다는 비판도 받은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자신의 공인 의식 실상을 돌아봐야 한다”고 통렬히 지적했다.

강남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의 대법원장 공관 거주는 "대법원장 아들부부 재테크하러 공관 입주했나"…대법 국감 논란(중앙일보¹¹⁶), 한국경제¹¹⁷, 연합뉴스¹¹⁸, SBS¹¹⁹, MBN¹²⁰), ‘강남아파트 당첨’ 대법원장 아들 부부, 공관 ‘무상거주’…재테크 목적?(동아일보¹²¹),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에 '강남 아파트 분양 받은 아들 부부거주 논란'(세계일보¹²²), "대법원장 아들 부부, 공관거주로 재테크 의혹"…국감서 논란(뉴스1¹²³), “재테크하러 공관 입주했나”…대법원장 아들부부 거주 논란(이투데이¹²⁴),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의 '공관 재테크'(뉴데일리¹²⁵), 13억 강남아파트 당첨 받고도…대법원장 아들부부, 공관서 거주 '공관 재테크'?(뉴스프리존¹²⁶), 최소 10억원대 아파트 소유 김명수 아들 부부, 대법원장 공관서 공짜로 살아(펜앤드마이크¹²⁷) 등 수많은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조선일보는 2019년 11월 5일 ‘김명수 공관 고급석재에 8억, 인테리어에 3억 썼다’의 제하의 기사¹²⁸에서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公館)을 개·보수한다고 4억7000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끌어와 총 16억70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행정처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기획재정부에서 “15억~16억원은 너무하니, 10억 미만으로 하라”고 지적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애초 예산안보다 많은 공사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공사를 위해 무단으로 끌어온 약 4억7000만

116) <https://news.join.com/article/23593402> (검색일: 2021.05.07)

117)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029169Y> (검색일: 2021.05.07)

118)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2082500004> (검색일: 2021.05.07)

11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62863&plink=ORI&cooper=NAVER (검색일: 2021.05.07)

120) <https://www.mbn.co.kr/news/politics/3949773> (검색일: 2021.05.07)

12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02/97697758/2> (검색일: 2021.05.07)

122) <https://www.segye.com/newsView/20190423509603?OutUrl=naver> (검색일: 2021.05.07)

123) <https://www.news1.kr/articles/?3734417> (검색일: 2021.05.07)

124) <https://www.etoday.co.kr/news/view/1805298> (검색일: 2021.05.07)

12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23/2019042300054.html> (검색일: 2021.05.07)

126)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008> (검색일: 2021.05.07)

127)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32> (검색일: 2021.05.07)

128) 조선일보 2019. 11. 5. A1면

원 가운데 2억7875만원은 재판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이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법원행정처는 이런 사업비를 기재부장관 승인도 없이 기존 목적과 전혀 다른 데 전용했으며, 부당 사용한 예산의 상당 부분은 대법원장 공관의 외관을 고급 외국산 석재인 '라임스톤'으로 바꾸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고, 감사원 관계자는 “최종 편성된 예산보다 공사비가 더 필요할 것이라 판단될 경우 기재부나 국회에 보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행정처가 이런 규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라고 했으며, 감사원은 또 법원행정처가 공관 개·보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잘못된 계약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화일보는 2019년 11월 5일 ‘재판 예산 전용해 ‘이태리 고급 석재 공관’ 꾸민 金 대법원장’ 제하의 사설¹²⁹⁾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26일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해 12월 21일 공관에 입주할 당시부터 구설수가 이어졌다. 그런데 감사원이 발표한 '공관 리모델링' 감사 결과를 보면, 단순한 개탄을 넘어 불법 소지까지 우려해야 할 지경이다. 사법 개혁과 신뢰 회복을 앞세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가혹한 '청산'을 했지만, 정작 본인 행태부터 사법부 신뢰 확보와 거리가 멀다. 우선, 위법 여지가 짙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공관을 개·보수한다며 4억7000만 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끌어와 총 16억7000만원을 지출했다. 예산 심의 때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10억원 미만으로 하라'고 권고하며 9억9900만원으로 제한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전용(轉用)된 예산은 재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편성한 '사실심 충실화 예산' 등으로 밝혀졌다. 시공사 선정도 공개입찰 방식이 아니라 불투명하게 했다고 한다. 국가재정법 위반이나 직권 남용 등에 해당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이런 의심을 자초하면서 일반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동아일보는 2019년 11월 6일 ‘예산 전용해 대법원장 공관 호화 리모델링한 사법부의 탈법’ 제하의 사설¹³⁰⁾에서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공관을 16억6650만원을 들여 개·보수했고 이 중 4억7510만원은 다른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래 배정된 공관 개·보수 예산보다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사실심 충실화, 법원시설 확충 및 보수 등 대민(對民) 사법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에서 끌어다 썼다. 개·보수 예산의 절반은 건물 외관 마감재를 이탈리아산 고급 석재로 바꾸는 데 사용됐다. …… (중략) ……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다짐하며 취임했다. 2017년 9월 취임식에서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

129) 문화일보 2019. 11. 5. 31면

130) 동아일보 2019. 11. 6. A31면

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구습에 젖은 처신으로 수차례 도마에 올랐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아들 부부가 공관에 입주해 '공관 재테크' 의혹이 제기됐고, 공관 가구와 가전제품 5900여만원어치를 새로 구입해 논란이 됐다.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법부 수장을 보며 국민이 기대했던 청렴함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다른 행정부처가 이 같은 탈법적 예산 전용을 저질렀다면 사법부는 어떻게 심판할까. 이렇고도 사법개혁의 영이 서겠는가"라며 질타했다.

서울신문은 2019년 11월 6일 '재판 공정성 예산 끌어다 공관 개보수한 한심한 대법원' 제하의 사설¹³¹⁾에서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를 위해 4억7000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 가운데 2억 7875만원은 재판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이었다. …… (중략) …… 건물에만 들어간 예산은 약 11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8억원은 벽돌이던 건물 마감재를 고급 석재 라임스톤으로 바꾸는 데 쓰였다. 이 석재는 '크레마 오로'(황금빛 크림)라 불리는 이탈리아제로 알려졌다. 공관의 지붕과 창틀·문짝 공사엔 2억 6500만원, 페인트칠·벽지교체 등 내부 마감 공사 등에는 1억원이 들었다. …… (중략) …… 김명수 대법원장은 강남 아파트를 분양받은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서 동거하는 것이 알려져 재산증식을 위한 '공관 재테크'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시위가 한창인 홍콩에서 공식 일정을 마친 뒤 김 원장 부부가 주말관광을 하겠다며 현지 영사관에 의전과 가이드 등을 요청했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도덕률에서도 필수 이상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다"고 힐난했다.

'호화 논란'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혈세 4억7000만원 무단 사용(세계일보¹³²⁾), '전직 대통령도 실형 받았는데...' 파장 커지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논란(한국경제¹³³⁾), 김명수 대법원장, 또 다시 불거진 공관 문제(헤럴드경제¹³⁴⁾), '멋대로 예산집행'…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예산 무단 전용(연합뉴스¹³⁵⁾), 감사원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4억 7천만 원 부당 사용"(SBS¹³⁶⁾), 이태리 돌 집착한 대법원장(채널A¹³⁷⁾) 등 다수 언론은 보도를 통해 대법원장의 공관에 국민 혈세를 무단 사용한 부도덕성을 엄중히 따졌다.

131) 서울신문 2019. 11. 6. 35면

132) <https://www.segye.com/newsView/20191104508630?OutUrl=naver> (검색일: 2021.05.07)

13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1055655H> (검색일: 2021.05.07)

13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05000108> (검색일: 2021.05.07)

135)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4069300001?input=1195m> (검색일: 2021.05.07)

13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07785&plink=ORI&cooper=NAVER (검색일: 2021.05.07)

137)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901 (검색일: 2021.05.07)